

연구보고서 2016-48

정해식 · 정홍원 · 구혜란 · 김성근 · 김성아 · 우선희

【책임연구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 연구진】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구혜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교수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48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발 행 일 2016년 12월 31일

저 자 정 해 식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대명기획

가 격 7,000원

한국 사회가 보여 주는 낮은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경고가 2000년대 들어 계속되고 있다. 성장 위주 발전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희소해진 자원의 분배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와사의 갈등, 부자와 빈자 간의 갈등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세대 간 갈등과 같이 갈등의 균열 지점이 증첩되는 상황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내세움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이, 얼마 정도 문제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제반 여건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회통합은 용어의 친숙함에 비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개념 규정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 규정이 존재한다.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연구센터는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 진단과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주목하는 사회통합의 여건이 있음을 밝혀 왔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미 여러 사회통합지수가 개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회현상을 위주로 한 사회통합 수준 진단을 기획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의 영역 및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영역별·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한 후 종합지수를 계산한 일련의 개발 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해식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본 연구원의 정홍원 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원, 김성아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구혜란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김성근 박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바쁘신 와중에도 조사 설계에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본원의 강신욱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용수 전문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13
제3절 연구 방법	14
제2장 사회통합지수 선행 연구 검토	15
제1절 지수화 방법론	17
제2절 사회통합지수 선행 연구	23
제3절 소결	53
제3장 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축	61
제1절 연구진의 사회통합 영역 및 지표 제안	63
제2절 사회통합지수 개발 과정	72
제3절 사회통합 영역과 지표의 설정	75
제4절 사회통합지표 측정	90
제5절 소결	114
제4장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119
제1절 사회통합지수 산출	121
제2절 사회통합지수 국가 비교	122

제3절 한국의 사회통합지수와 사회통합 수준	142
제4절 소결	149
제5장 유럽연합의 사회통합 모니터링 및 정책 적용 사례	155
제1절 유럽연합 사회통합정책의 구성	157
제2절 유럽연합 사회통합지표 구성 체계와 자료 수집	163
제3절 지표 모니터링 보고 체계	174
제4절 유럽연합 모니터링 체계의 정책적 함의	178
제6장 결론 및 정책 방안	183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85
제2절 정책 방안	187
참고문헌	191
부 록	199
부록 1.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및 AHP 조사표	199
부록 2. 사회통합지수 국가 순위(1995~2015)	227

표 목차

〈표 1-1〉 선행연구의 사회통합지수 개념 및 지표 체계	9
〈표 2-1〉 지수에 대한 찬반 입장	18
〈표 2-2〉 노대명 등(2009)의 사회통합 영역과 차원, 그리고 주요 지표	25
〈표 2-3〉 노대명 등(2009)의 국제비교를 위한 사회통합지표 체계	26
〈표 2-4〉 강신욱 등(2012)의 영역별 사회통합지표 체계의 구성	30
〈표 2-5〉 강신욱 등(2012)의 OECD 국가의 영역별 사회통합지수 및 순위	33
〈표 2-6〉 조병구 등(2015)의 국민통합 지표 체계	35
〈표 2-7〉 조병구 등(2015)의 국민통합지수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위상	38
〈표 2-8〉 이재열 등(2014)의 사회통합지수 세부 영역별 조작화	40
〈표 2-9〉 이재열 등(2014)의 국가별 사회통합지수 순위	42
〈표 2-10〉 베텔스만 재단(2013)의 사회통합 지표 구성	46
〈표 2-11〉 계간 아메리카(2013)의 사회통합 지표 구성	51
〈표 2-12〉 국내 사회통합지수의 지표 체계 비교	54
〈표 2-13〉 국외 사회통합지수의 지표 체계 비교	56
〈표 2-14〉 사회통합지수의 표준화 및 가중치 방법 비교	58
〈표 3-1〉 주요 국제 데이터베이스별 사회지표 현황	70
〈표 3-2〉 사회통합 지표 연구자 제안	70
〈표 3-3〉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조사 일정	74
〈표 3-4〉 조사 차수별 전문가 특성	75
〈표 3-5〉 델파이 조사 설문 내용	75
〈표 3-6〉 사회통합 영역 조정 결과	77
〈표 3-7〉 사회통합 하위 영역의 적절성 평가 결과	78
〈표 3-8〉 사회통합 영역 구성 및 조사 차수별 개념적 정의 조정 내용	79
〈표 3-9〉 사회통합 관련 지표 적절성 및 해당 하위 영역-1차 조사 결과	80
〈표 3-10〉 1차 조사 후 조정된 지표	82
〈표 3-11〉 사회통합 관련 지표의 영역 구분-2차 조사	83

〈표 3-12〉 하위 영역별 지표 순위가중치	85
〈표 3-13〉 최종 확정된 사회통합 영역별 지표	86
〈표 3-14〉 사회통합 영역별, 각 지표별 가중치(사례 수=34)	89
〈표 3-15〉 지표 내용 요약	116
〈표 4-1〉 지표 표준화 방식	121
〈표 4-2〉 사회통합지수의 국가별, 연도별 현황	125
〈표 4-3〉 1그룹 국가 사회통합지수 평균값의 연도별 현황	126
〈표 4-4〉 1그룹 국가 사회적 포용 지수의 연도별 현황	127
〈표 4-5〉 1그룹 국가 사회적 자본 지수의 연도별 현황	128
〈표 4-6〉 1그룹 국가 사회이동 지수의 연도별 현황	128
〈표 4-7〉 1그룹 국가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연도별 현황	129
〈표 4-8〉 2그룹 국가 사회통합지수 평균값의 연도별 현황	130
〈표 4-9〉 2그룹 국가 사회적 포용 지수의 연도별 현황	130
〈표 4-10〉 2그룹 국가 사회적 자본 지수의 연도별 현황	131
〈표 4-11〉 2그룹 국가 사회이동 지수의 연도별 현황	132
〈표 4-12〉 2그룹 국가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연도별 현황	132
〈표 4-13〉 3그룹 국가 사회통합지수 평균값의 연도별 현황	133
〈표 4-14〉 3그룹 국가 사회적 포용 지수의 연도별 현황	134
〈표 4-15〉 3그룹 국가 사회적 자본 지수의 연도별 현황	135
〈표 4-16〉 3그룹 국가 사회이동 지수의 연도별 현황	136
〈표 4-17〉 3그룹 국가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연도별 현황	137
〈표 4-18〉 4그룹 국가 사회통합지수 평균값의 연도별 현황	138
〈표 4-19〉 4그룹 국가 사회적 포용 지수의 연도별 현황	139
〈표 4-20〉 4그룹 국가 사회적 자본 지수의 연도별 현황	140
〈표 4-21〉 4그룹 국가 사회이동 지수의 연도별 현황	140
〈표 4-22〉 4그룹 국가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연도별 현황	141
〈표 4-23〉 한국의 사회통합지수 순위 및 지수값 추이	142
〈표 4-24〉 한국 사회적 포용 지수의 지표별 순위 및 추이	144

〈표 4-25〉 한국 사회적 자본 지수의 지표별 순위 및 추이	145
〈표 4-26〉 한국 사회이동 지수의 지표별 순위 및 추이	147
〈표 4-27〉 한국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지표별 순위 및 추이	148
〈표 4-28〉 1995~2015년 기간 동안 사회통합지수의 변동이 있는 국가	149
〈표 5-1〉 유럽 2020 전략의 주요 지표 및 달성 목표	163
〈표 5-2〉 비상경보 보고서(AMR)에 포함된 지표	171
〈표 5-3〉 유럽 2020 전략의 2016년 주요 목표 지표 수준	177

부표 목차

〈부표 2-1〉 1995년 사회통합지수	227
〈부표 2-2〉 2000년 사회통합지수	228
〈부표 2-3〉 2005년 사회통합지수	229
〈부표 2-4〉 2010년 사회통합지수	230
〈부표 2-5〉 2015년 사회통합지수	231

그림 목차

[그림 2-1] 지수화 연구 과정	19
[그림 2-2] 노대명 등(2009)의 OECD 각국의 사회통합지수	28
[그림 2-3] 조병구 등(2015)의 국민통합지표 체계 구성	35
[그림 2-4] 이재열 등(2014)의 사회통합 종합 정의	40
[그림 2-5] 베텔스만 재단(2012)의 사회통합 측면과 차원	44
[그림 2-6] 베텔스만 재단(2013)의 사회통합 세 가지 영역	45
[그림 2-7] 베텔스만 재단(2013)의 사회통합 국제 비교(2009~2012)	49
[그림 2-8] 계간 아메리카(2015)의 사회통합지수 국가별 종합 순위	53
[그림 3-1] OECD(2011)의 사회통합의 세 요소	64
[그림 3-2] 사회의 질 체계와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	65
[그림 3-3]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의 평가기준-배치틀	66
[그림 3-4] 사회통합 영역 및 지표 구성(안) 개념도	67
[그림 3-5] 사회통합지수 개발 과정	72
[그림 3-6] 일자리의 양, 일자리의 질과 안녕(well-being)	111
[그림 4-1] 1995년과 2015년 사회통합지수에 따른 국가별 유형 구분	123
[그림 4-2] 사회통합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 경향	153
[그림 5-1] 유럽 2020 전략의 주요 달성 목표	164
[그림 5-2] 유럽 2020 전략의 고용률 관련 지표	165
[그림 5-3] 종합적인 맥락 파악을 위한 유럽 2020 전략 지표	169

Abstract <<

A Study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ocial Cohesion Index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ocial cohesion index, and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in Korea in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For these objectives, this study defined social cohesion in terms of four sub-dimensions and 19 indicators. The sub-dimensions and indicators were developed by using the Delphi method. We also calculated, using the AHP method, the weights of composite indicators.

Measured against the social cohesion index developed in this study, Korea is ranked 29th among a total of 30 OECD countries in 2015. As for the sub-dimensions, Korea ranked 30th in social cohesion, 22nd in social capital, 24th in social mobility and 26th in social conflict and governance.

These results are the outcome of subjective assessment methods which focused on social issues of Korean society. For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o implement a monitoring system for social cohesion issues and related social indicators, following our analysis of EU's Social cohesion monitoring system.

*Key word: Social Cohesion, Social Cohesion Index, Social Inclusion, Social Mobilit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그간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함에 있어 개념적 하위 영역 및 지표의 선정, 그리고 이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부여에서 한국 사회의 이슈 및 관심 주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현재 사회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 및 각 개별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는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중요도를 반영한 종합지수를 개발함으로써 사회통합 수준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 취약지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취약지점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지표 개발 단계에서 세 차례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의 영역과 지표 설정, 가중치 부여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이론적 검토에 바탕을 둔 사회통합의 개념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반영하면서 기본모형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을 1) 사회적 포용-‘사회구성원이 사회 제도를 통해 권

4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 2) 사회적 자본-‘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 및 관용의 정도, 참여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3) 사회이동-‘직업, 소득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조건 및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역량’, 4) 사회갈등과 관리-‘사회적 조건, 인식 수준에서 확인되는 갈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각 영역에 적합한 사회통합 지표를 20개(최종 사용 19개)를 선정하였다. 지표의 선정은 다음의 단계를 거쳤다. 먼저 주요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회통합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일괄하고, 비교가능성 및 시계열적 연속성 확보 등의 요건을 적용하여 39개 지표를 연구진이 제시하였다. 여기에 추가, 삭제와 조정을 통해 33개로 지표를 줄이고, 각 영역에 배치하여 적정성을 진단하였다(중복 포함 39개 지표 제시). 최종적으로는 정책 영역의 속성에 일치하는 지표를 영역별로 5개씩 선정하였다.

셋째, 확정된 사회통합의 영역과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였다. 전문가가 조사 결과의 일관성을 0.1 기준으로 하여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쌍대비교 행렬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지표 개발 단계 이후에는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칠레, 라트비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및 터키를 제외한 30개국을 비교하였으며,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1995년부터 5년 주기의 5회의 관측 시점 모두 29위를 보였다. 사회적 포용 영역은 5번의 관측 시점에서 모두 30위를, 사회적 자본은 22, 23위를 유지하였다. 사회이동은 2000년 잠깐 22위를 기록하였지만 26, 27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은 21위에서 26위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순위는 한국의 당면한 사회 현안을 중요시하는 지표 선정 및 가중치의 결과로 도출된 값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사회통합의 전반적 개념 아래에서 한국이 보여 주는 문제적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관련 정책 영역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유럽연합의 사회통합 모니터링 사례를 찾아보았다.

유럽연합은 고용 관련 이슈,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등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조, 인구학적 구조, 장기실업, 정부 사회지출, 소득불평등과 같은 변수를 두루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모니터링의 포괄성에 덧붙여 이들은 체계적 관리를 시도하고 있었다. 즉 지표의 작성 기관, 그리고 그것의 변화 의미, 그리고 반영되어야 하는 정책까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한국의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 영역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갖추고, 지표의 변화를 진단하며 동시에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 그 수준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고, 지속적으로 관찰 및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그간의 많은 연구들에서 한국의 사회통합 정도가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함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이러한 경향을 벗어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 영역과 지표의 선정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수행하면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가 사회적 포용과 사회이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높은 가중치 부여로 나타났다. 이는 두 분야가 현재 한국 사회가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지점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유럽연합의 모니터링 사례는 사회통합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구조적 요건을 진단하고, 각 해당 영역의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도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핵심 지표들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영역을 진단한 후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까지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체계를 갖춘다고 하여 사회통합 수준이 제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적극 인지하고, 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주요 용어: 사회통합, 사회통합지수,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에 따른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고용구조의 악화에 따른 빈곤 가능성의 증가,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확대 등 객관적 요인의 악화가 한 측면에 위치한다(강신욱 등, 2012, p.31). 또 결과의 평등보다는 권리, 조건 및 기회의 평등을 더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우리 국민들의 평등인식(석현호 등, 2005, p.210)과는 다른 속살이 속속 확인되면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진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통합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표 1-1〉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몇 차례의 사회통합 지수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연구 결과 한국이 주요한 비교 대상 국가인 OECD 가입국 중에서 낮은 사회통합 순위를 보인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선행연구의 사회통합 개념 및 지표 체계

선행 연구	개념	지표 체계		비교 대상국	한국 순위
		영역	지표		
노대명 등 (2009)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소득	빈곤율, 소득불평등, 근로빈곤율	OECD 24개국	19위
		고용	실업률, 비정규비율, 파업률		
		금융	소비자물가, 이자율, 저축률		

10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선행 연구	개념	지표 체계		비교 대상국	한국 순위	
		영역	지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	건강	유아사망률, 기대수명(남, 여), 침상수, 의료비 지출			
		주택·자산	주거비비중, 주택가격 지수, PIT, PIR			
		가족	평균 가구원수, 여성취업률, 자살률, 이혼율, 결혼율, 출생률, 진학률			
강신욱 등 (2012)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잘 결속되어 있는 가 하는 상태	상태	선거참여, 선거 외 참여, 정치적 관심, 사회참여, 집단 간 관계, 일반신뢰, 기관신뢰, 부패인식, 관용, 생활만족도	OECD 29개국	21위	
		조건	1인당 GDP, 부양인구비율, 자살률, 1인당 CO2 배출량,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OECD 34개국	29위	
		사회적 형평성	소득불평등, 빈곤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보호의 정도,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공공사회지출 비중	OECD 34개국	28위	
조병구 등 (2015) '국민통합'	소통과 공감 등 국민통합 문화의 기반 위에 지속 가능하고 상생적인 국가 발전을 향해 국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한 노력	사회 포용	기회균등	남녀 고용 격차, 남녀 임금 격차, 공교육지출 비율	27위	
			형평	지니계수, 취약률, 노인부양비(역수), young이 old 부담 느끼는 정도, 인터넷 사용자 비율,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		
			안전	실업률, 임시직 근로자 비율, 도로사망률, 범죄율, 자살률, 주관적 안전감		
		사회 자본	관용	타인에 대한 관용, 다문화에 대한 관용	OECD 31개국	23위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기관신뢰, 외국인에 대한 신뢰		
			참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Helping others		
		제도 기반	자유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자유	27위	
			법질서	법치지수, 부패인식지수		
			정부 역량	정부효과성,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		
			사회복지	공적연금지출 비중, 복지지출액 비중		
			글로벌 기여	글로벌 공공재 기여, ODA 비율, 국제환경협약 가입률		

선행 연구	개념	지표 체계			비교 대상국	한국 순위
		영역		지표		
이재열 등 (2014)	잠재적 갈등소지와 사회통합역량 간의 관계로 개념화	잠재적 갈등소지	경제적 양극화	지니계수	79개국	40위
			사회적 양극화	불신 비율		
			가치 양극화	비혼합형 비율 (앙글하트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척도)		
		사회적 통합역량	체계 역량	공공교육지출, 고등교육 이수율, 공적사회지출		
			생활 세계 역량	언론 자유, 여성 불평등 지수, 투표율, 민주주의		
			규범 역량	제도 투명성		

그런데 선행 연구들은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 및 하위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통합은 그 개념 정의에서부터 각국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게 된다(정해식, 2014, p.7). 예를 들어 한국 사회는 사회통합의 여러 차원 중에서 사회이동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사회이동성에 대한 강조는 이동성이 저하되는 현 실태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지수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수화 연구는 동일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록 이동원 등(2009)이 주 성분 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중치를 활용한 바 있지만, 이 역시 수리적 기법의 가중치 적용의 한계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사회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지표 선정은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는 낮았다. 한편 대중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현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은 개별

지표들 간에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수용하는 것은 대중 및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된 평가 체계라 해석할 수 있으며(김태일, 1999), 이를 주관적 방식에 따른 가중치 부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수화 과정은 객관적 방식과 주관적 방식의 양극단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함에 있어 이러한 주관성의 측면에서 적극적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연구진은 사회통합의 가치가 대중에게 부각된 지 약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는, 즉 주관적 방식에 방점을 둔 지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 및 이에 따른 각 개별 지표의 중요도가 변하고 있으므로, 지표의 선정과 지표별 가중치에서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종합지수를 개발하여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¹⁾ 이에 따라 지표의 선정부터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을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 보는 체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사회통합 수준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 취약지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통합지수의 개발은 통합 상태의 모니터링이라는 목표를 가진다. 그러나 지수 개발 과정의 노력 투입에 비하여 사회통합 상태를 지속적으로 진단하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수 개발과 더불어 사회통합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다만 국민들이 사회통합의 지표 체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대체하였다.

제2절 연구 내용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 사회통합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절차를 거쳤다.

첫째, 사회통합지수 산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시도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지수 산출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 내용은 2장에 서술하였다.

둘째, 이론적 검토에 바탕을 둔 사회통합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지수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이론적으로 개발된 모형을 전문가 조사를 반영하여 수정하면서, 최종 모형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내용은 3장에 서술하였다.

셋째, 사회통합의 각 영역별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은 앞서 전문가 조사 과정을 통해 수행하였다. 마찬가지로 3장에 관련 내용을 서술하였다.

넷째, 개발된 모형을 이용한 비교분석(국제 횡단 비교 및 국내 종단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4장에 서술하였다.

다섯째, 사회통합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 정책평가를 위한 DB 구축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 내용은 5장에 서술하였다.

제3절 연구 방법

이상의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 검토, 전문가 인식 조사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통합지표의 수집 및 선정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인식 조사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첫째, 사회통합 개념 및 지표 체계 구성 및 조정을 위해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영역 및 지표별 가중치 산출을 목적으로 전문가 대상의 계층화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대상 조사는 2016년 6월부터 7월 중에 사회정책 관련 교수 및 연구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2명이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 광범위한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통합지표를 진단해 보았다. 사회통합 관련 지표를 국제 비교 가능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사회통합지표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사회통합 수준을 통시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결측치가 있는 각종 자료를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대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제 2 장

사회통합지수 선행 연구 검토

제1절 지수화 방법론

제2절 사회통합지수 선행 연구

제3절 소결

2

사회통합지수 선행 연구 검토 《

제1절 지수화 방법론

1. 지수화의 의의

최근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사회갈등, 사회의 질, 사회자본 등과 같은 각종 지수들이 개발되고 있다. 종합지수(composite indicators 또는 index)는 해당 개념을 다양한 측정 지표(indicators)들로 구성하고 이를 하나의 표준화된 값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지수는 국가 및 지역 등 그 수준을 비교할 때 큰 활용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상황을 지수로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는 학계보다도 정부의 관심이 높았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사회통합위원회 및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은 사회통합 지수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강신욱 등, 2011; 강신욱 등, 2012; 조병구 등, 2015).

사회통합지수는 사회통합에 대해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지수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및 지역 간 종합적인 순위와 영역별 순위 등을 보여 줌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나아가 어떤 영역(지표)에서 미흡하며 정책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영역이 어딘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수는 그 자체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지수의 구성 체계가 조악하거나 지나치게 큰 그림만을 제공하면, 단순한 해석과 판단을 내리게 하는 한계를 지닌다(OECD and EU JRC, 2008, p.13).²⁾ 지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차원적인 정보를 지니고 있는 지표 체계의 유용성이 사장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지수화 과정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상이한 지표값들을 표준화하는 방식, 이를 결합하는 방식(가중치 적용), 사용하는 자료에 결측치가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방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지수화의 유용성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팽팽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지수에 대한 찬반 입장

찬성	반대
- (정책결정자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실을 요약할 수 있다. - 수많은 개별 지표보다 쉽게 해석이 가능하다. - 국가들의 통시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정보의 기저의 손실 없이 지표의 더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규모로 줄일 수 있다. - 그래서 주어진 용량 제한하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개별 국가의 성과 및 변화의 이슈를 정책 영역의 중심에 놓을 수 있다. - 일반 대중(시민, 언론 등)과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되며, 책임성을 강조하게 한다. - 독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구성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한다. - 이용자에게 복잡한 차원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	- 조악하게 구성되거나, 잘못 해석될 경우 잘못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지나치게 단순한 정책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구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건전한 통계적·개념적 원칙에 기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바라는 정책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잘못 활용될 수 있다. - 지표의 선택, 가중치의 부여 방법 등은 정치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구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특정 차원에서 심각한 잘못을 감추거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높일 수 있다. - 성과 차원의 측정이 어렵다는 현실이 무시될 경우에 잘못된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자료: OECD and EU JRC(2008). pp.13-14.

- 2) 지수화와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방법론적 논의를 제공하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의 Composite Indicators Research Group이다. 유럽연합은 지수를 이용하여 각국의 상황을 진단할 비교 필요성이 크다. EU의 이러한 입장은 살텔리(Saltelli, 2007)를 참조할 수 있다. 연구그룹은 EU 국가의 다차원적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 EU 인간개발지수(EU HDI), 사회통합보고서(Report on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등에 분석 방법 및 모델링 연구를 조언하고 있으며, OECD와 함께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따라서 사회통합지수화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통합의 개념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지표들로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이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지수화 과정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방법론적 쟁점들을 기준으로 지수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수화 과정의 방법론적 쟁점

[그림 2-1] 지수화 연구 과정

[이론적 틀의 구성] → [자료 선택] → [결측값의 처리] → [다변량 분석]
→ [정규화] → [가중치 부여 및 합산] → [견고성 및 민감성 검증] →
[실제 데이터와 비교] →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 검증] → [제시 및 시각화]

자료: OECD and EU JRC(2008). pp.15-16.

[그림 2-1]은 지수화 연구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지표를 다룰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를 선택한 후에는 지표값을 정리해야 한다. 이때 자료에서 결측값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쟁점이 있다. 국가 간 시계열 자료 비교에서 결측이 발생할 경우 가장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결측 연도와 가장 인접한 연도의 관측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결측 연도 이전에 활용 가능한 여러 시점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측치 평균값을 투입하여 활용하기도 하며, 두 관측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결측값의 경우에는 선형추세 회귀분석 결과의 추정치를 활용하여 결측값을 대체하기도 한다. 한편 특정 비교 시점이 아닌, 한 국가의 해당 지표가 모두 결측인 경우는 해당 지표를 제외하고 지수화하기도 하며, 지표의 상당수가

결측인 국가는 비교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두 개 지표의 결측으로 인해 해당 국가를 제외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교 대상 국가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발전의 경향성이 유사한 수준의 국가 값을 이용하여 대체하기도 한다.

둘째, 종합지수의 산출은 다양한 차원의 이질적인 지표들을 결합하는 과정으로 결합 이전에 지표들에 대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지표들은 사회통합에 주는 각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지표는 지표값이 증가할수록 사회통합의 긍정적 측면과 관련되는 반면, 어떤 지표는 지표값이 증가할수록 사회통합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규정해야 하는데, 보통 이는 이론적 틀의 구성 단계에서 확인된다.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뿐 아니라 지표값의 변동 폭 및 척도도 다양하다. 이산형 변수는 변동 폭이 크며, 연속형 변수도 측정의 범위에 따라 변동 폭이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연속형 변수에서도 어떤 지표는 그 상한값과 하한값이 사전적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어떤 지표는 상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강신욱 등, 2011, p.118).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민주주의 지수’와 같은 것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1인당 GDP’이다. 따라서 지표들이 가지는 다양한 변량을 통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정규화(또는 표준화, normalization)³⁾ 과정이라고 한다.

정규화 방법으로는 첫째, 순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지표가 가지는 변량 그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활용한다. 각 지표 별로 가지는 순위의 합산값이 종합점수가 된다. 그러나 이는 개별 지표 내에서 변량이 설명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최근 연구에

3) 원칙적으로 표준화(standardization)는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이하에서 보여 주는 Z-score 표준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정규화는 측정치의 전체 구간을 0-100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으로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Z-score 표준화를 제외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나머지 방식은 모두 정규화 전환에 해당한다.

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최댓값과 최솟값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최소-최대 정규화 방법이 있다. 이는 Z-score 표준화 방법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지표의 최댓값은 1이 되고, 최솟값은 0이 된다. 비교 대상의 표준화된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가장 높은 수준에 접근함을 의미한다. 다만 규범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에 접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강신욱 등, 2012, p.66). 즉 규범적 수준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수치와 현재 특정 국가가 보여 주는 최대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은 하위 영역 내에서 지표의 변량을 정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지역, 국가 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서 특정 범주 영역 내의 값을 구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셋째, Z-score 표준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각 지표값에서 해당 지표의 평균값을 빼고, 이를 다시 해당 지표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주는 방법이다. 지표값이 평균값과 일치하면 표준화된 지표값은 0이 되고, 지표값이 평균값보다 작을 때는 음(-)의 값, 지표값이 평균보다 클 때는 양(+)의 값을 지닌다. 이때 표준화된 점수는 상한 및 하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특정 지표가 가지는 변량을 그 자체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표의 본질적 수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각 지표가 하나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을 때, 즉 하위 영역 내에 다양한 지표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 특정 지표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퍼지소속점수(Fuzzy membership)를 활용하기도 한다(정해식, 2012, pp.147-148; 정해식, 2015). 최소-최대 정규화 방식은 특정 국가가 극단값을 가지는 경우에 다른 모든 국가들을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게 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퍼지소속점수는 주어진 점수가 정해진 기준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것으로 최솟값, 최댓값 외에도 중위값 또는 평균값을 이용한 전환점(crossover

point)을 이용한다. 이와 같이 특정 기준에 속할 확률을 이용하는 것은 점수의 분포를 표준화하면서도 최솟값과 최댓값을 0, 1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유사한 방식으로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지표 분포의 불평등과 같이 분포의 경향성을 표준화하여 비교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사용한다(Jung et al., 2014, p.178).

셋째, 지수화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표준화된 지표들을 합산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비교 국가 연구에서는 각국의 발전 수준이 경로의존적(path-dependency) 속성을 가지므로, 발전이 서로 다른 방향과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가중치 부여는 발전 성격이 다른 차원 내에서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런 이유로 지표 및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 간 순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가중치 부여의 방법은 임의의 방식과 통계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의의 방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동일가중치(equal weight)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동일가중치 부여는 지수화 과정에서 상당히 자주 이용되는 방식이지만, 하나의 차원에 다수의 변수가 속할 경우 통합지수의 구조를 불균형하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다(OECD and EC JRC, 2008, p.31). 임의로 부과하는 방식 중의 또 다른 것은 전문가 조사 등을 이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임의의 영역 내에서 각 지표의 상대적 가중치를 전문가의 견해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를 주관적 방식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은 AHP 가중치 방식으로, 계층화분석 방법으로 불리며 지표 간의 상쇄 효과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A와 B 중에서 A를 선택하게 될 때, 포기하게 될 상대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된다. 전문가 조사 방식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주요한 영역을 변경하므로,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이는 새롭게 바뀐 사회 환경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통계적 방식 또는 수리적 도출 방식의 대표적인 경우는 요인분석을 이용하거나 회귀계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정해식과 김성아(2015)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가중치 부여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주어진 변량을 설명하는 성분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통성이 큰 변수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이는 관측변수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고, 그 요인이 각 개별 지표에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한다. 이외에 김태환 등(2004)에서는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서 각 지표의 표준회귀계수를 토대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통계적 방식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요인분석을 이용한 방법은 한 지표가 다른 지표들과의 상관관계가 크면 높은 가중치를 가지게 되는 문제를 가진다(김태일, 1999).

제2절 사회통합지수 선행 연구

본 절에서는 그동안 개발된 국내외 사회통합지수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존 사회통합지수의 검토를 통해 사회통합의 개념 및 그에 따른 지표 체계 구성과 지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표의 표준화 방법, 표준화된 지표의 결합 시 고려되어야 할 가중치 부여 방법, 그리고 결측치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국내 사회통합지수

가. 노대명 등(2009) 사회통합지수

노대명 등(2009)은 사회통합과 관련한 기존 지표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합지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OECD의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는 사회통합지표로 간주하기 어려운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의 사회통합지표(Social Inclusion Indicators)는 사회통합보다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편입’(inclusion)에 주목하였다고 평가한다(노대명 등, 2009, p.80). 이런 판단하에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노인과 아동, 근로빈곤층 등 해당하는 하위집단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취했다. 노대명 등(2009)이 지표 체계에 포함한 영역은 소득, 금융, 고용, 교육, 건강, 주거, 가족 7개 영역으로서 각 영역별 사회통합지표의 구성은 일차적으로 영역별 실태와 추이를 파악하고, 그 변동폭이 큰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하위집단(연령, 성별 등)의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이 사용한 이러한 영역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05, pp.123-162)의 삶의 영역을 반영한 것이다(정해식 등, 2014, p.107).

개념적 구성 과정을 거친 이후 각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 선정 시에는 가급적 각 영역별로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격차라는 두 가지 특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Berger-Schmitt(2000)의 사회통합 전략 목표, ‘격차,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 감소 차원’의 유럽 사회지표와 맥락을 같이한다(정해식 등, 2014, pp.100-101). 구체적으로 지표를 선정할 때는 네 가지 선정 원칙을 적용하였다. 노대명 등(2009, p.79)의 연구는 사회통합지표의 선정 원칙으로 1) 대표성과 타당성, 2) 포괄성, 3) 비교성, 4) 분해성이라는 네 가지를 제

시한다. 첫째, 대표성과 타당성은 사회통합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현상을 잘 표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포괄성은 투입과 성과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상태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을 모두 포괄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비교성은 지표를 통해 개별 국가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 객관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의 선정이 필요하다. 넷째, 분해성은 집단의 특성 및 차이가 드러나도록 작성된 지표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노대명 등(2009, p.83)의 연구에서는 소득, 금융, 고용, 교육, 건강, 주거, 가족 정책 영역의 주요 집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빈곤율이라고 하더라도 노인과 아동의 빈곤율, 근로빈곤층의 빈곤율 등으로 집단을 구분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지표는 영역별 위기 집단을 포착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지표이며(분해성), 정책적 개입에 반응하는 지표인지(포괄성)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사회통합의 영역과 차원, 그리고 대표적 지표로 선정된 21개의 지표는 다음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2> 노대명 등(2009)의 사회통합 영역과 차원, 그리고 주요 지표

영역	절대적 박탈	상대적 박탈	주요 집단	주요 지표
소득	• 빈곤	• 소득격차 • 중산층비중 감소	• 노인과 아동 • 근로빈곤층	• 빈곤율 • 5분위 소득배율 • 지니계수(√)
금융	• 신용불량	• 고금리 부담 • 상환 연체	• 고부채 실업자 • 신용불량자	• 고용률(√) • 실업률 • 임시일용직 비율
고용	• 실업자	• 비정규직 증가 • 임금격차(성별 등)	• 저임금근로자 • 영세자영업자	• 가계대출 금리 • 가계대출 연체율 • 신용불량자 비율(√)
교육	• 학교 미진학 • 중도탈락	• 사교육비 격차 • 학업성취도 격차	• 저소득층 자녀 (빈곤대물림)	• 교육비지출 비중 • 학력별 임금격차 • 중도탈락률(√)

영역	절대적 박탈	상대적 박탈	주요 집단	주요 지표
건강	- 의료소외층 - 주요 질환 사망률	의료비 과부담	- 건보 체납자 - 빈곤층 비수급자	- 의료소외계층 비율 - 주요 질환별 사망률(✓) - 의료비 과부담 가구율
주거	주거상실	- 주거비 과부담 - 자산격차	- 노숙자 - 저소득층 월세자	5분위 재산배율(✓) - 주택전세가격지수 - 주거비 과부담 가구율
가족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자본 격차	저소득 단독가구 (노인/청년층)	- 이혼율 - 자살률(✓) - 사회적 연계망(✓)

주: 위 지표 중 (✓) 표시된 지표는 현재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표임.
 자료: 노대명 등(2009). p.83과 p.90(재구성).

노대명 등(2009)의 연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제시하는 지표의 상당 부분은 국내의 상황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통합성의 정도를 지수화하여 그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비교성). 이러한 국제 비교 목적으로 별도의 지표를 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노대명 등(2009)의 국제비교를 위한 사회통합지표 체계

	구분	출처	시점	설명
소득 영역	빈곤율	Growing Unequal	2000 midi	가처분 중위 50%
	소득불평등	Growing Unequal	2000 midi	가처분소득 Gini
	근로빈곤율	Foster et al.(2005)	2006	근로연령인구 대비 비율
고용 영역	실업률	OECD.Stat	2005	ILO 기준
	비정규비율	OECD.Stat	2005	Part-Time Employment
	성별 임금격차	OECD.Stat	2006	Full-Time Employment
	파업률	OECD.Stat	2000~2004	Strike Rate
금융 영역	소비자물가	OECD.Stat	2008	2000=100
	이자율	OECD.Stat	2005	Longterm Interest Rate
	저축률	SNA93	2005	National Saving

	구분	출처	시점	설명
건강 영역	유아사망률	OECD Health DATA 2008	2005	출생아 100명당
	기대수명(여)	OECD Health DATA 2008	2005	65세 시점 여성
	기대수명(남)	OECD Health DATA 2008	2005	65세 시점 남성
	침상수	OECD Health DATA 2008	2005	인구 1000명당 침상수
	의료비 지출	OECD Health DATA 2008	2003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주택 자산 영역	주거비 비중	OECD Social Indicators	2003	Housing Cost
	주택가격지수	OECD.Stat	2005	Housing Price
	PIT	OECD.Stat	1972~2004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OECD.Stat	1972~2004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가족 영역	평균 가구원수	OECD.Stat	2005	평균 가구원수
	여성취업률	OECD.Stat	2005	여성 중 취업자 비율
	자살률	OECD.Stat	2004	10만 명당 해당 인구수
	이혼율	OECD.Stat	2003	10만 명당 해당 인구수
	결혼율	OECD.Stat	2003	10만 명당 해당 인구수
	출생률	OECD.Stat	2004	10만 명당 해당 인구수
	진학률	OECD.Stat	2003	3~29세 평균 진학률

자료: 노대명 등(2009). p.188.

사회통합지수의 생성은 우선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 각 변수를 표준화한 뒤, 각 지표의 방향성을 통일하여 새 변수 var_{a-rev} 를 생성하고, 각 영역별로 방향성이 통일된 모든 지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노대명 등, 2009, pp.90-91). 즉 Z-score를 이용한 표준화를 시도하였다(1) 단계).

$$var_{a-st} = (a - mean_a) / stdv \tex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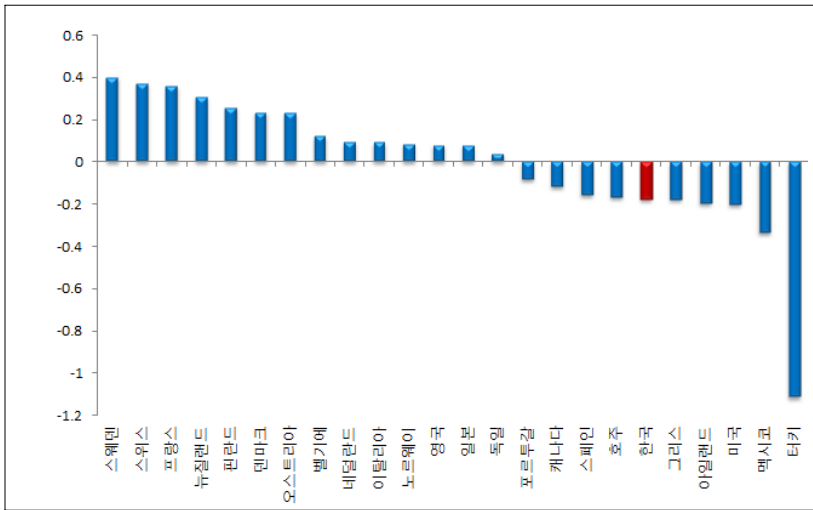
$$SCI(\text{영역별}) = var_{a-rev} + var_{b-rev} \cdots \cdots \cdots var_{n-rev} \text{ -----(2)}$$

이어 (2)단계에서는 각 영역(소득, 고용, 금융, 건강, 주거, 가족)의 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영역별 수준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영역의 점

수를 평균하여 사회통합지수를 계산하였다.

노대명 등(2009)의 사회통합지수는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격차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 측면의 지표를 취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 영역과 가족 영역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상태 (social status)를 보여 주는 지표를 취하였다. 이런 점에서 사회통합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사회임을 의미한다.

[그림 2-2] 노대명 등(2009)의 OECD 각국의 사회통합지수



주: 2005년 기준
 자료: 노대명 등(2009). p.190.

노대명 등(2009)이 구성한 사회통합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 - 0.1769를 기록하여, OECD 24개 비교 대상국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19 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사회통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 국가는 스웨덴(0.4013),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된 국가는 터키(-1.1143)였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성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족,

건강, 고용, 소득(빈곤과 불평등) 영역의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금융 및 주거 영역은 양호한 편이었다.

나. 강신욱 등(2012)의 사회통합지수

강신욱 등(2012)의 연구는 사회통합위원회의 사회통합지표 관련 선행 연구인 노대명 등(2010)의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그 후속 과제로서 강신욱 등(2011)의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II」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이론적 검토와 지표 체계 논의의 선상에 서 있다. 두 선행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진단할 수 있는 유의한 수준의 지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노대명 등(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개념 및 지표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문헌 검토를 통해 사회통합 문제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영역과 지표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강신욱 등(2011)의 연구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개인에게 주어진 인구학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위치 등에 따른 집단을 분석의 대상으로 확장하였다.

연이어 수행된 두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상태(state)>와 <조건(conditions)>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상태 지표를 의식 지표와 행위 지표로 구분하고, 조건 지표를 삶의 영역(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별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노대명 등, 2010; 강신욱 등, 2011). 상태 지표가 주로 사회통합의 주관적 측면과 사회적 참여를 표현하고 있다면, 조건 지표는 사회통합의 물질적, 비물질적 환경 요인을 표현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조건과 상태 또는 활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위한 캐나다 협의회(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2000)’가 제시한 것으로, 이들은 사회통합이 달성되기 위

해서는 적절한 물질적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김미곤 등, 2014, p.38). 한편 사회통합의 상태를 주관적 요소(의식 지표)와 객관적 요소(행위 지표)로 구분한 것은 Chan, To & Chan(2006)의 제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노대명 등(2010)의 1차 연도 연구는 영역별 지표를 산출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서 향후 한국의 사회통합지수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강신욱 등(2011)의 2차 연도 연구 또한 사회통합 종합지수의 작성에 따른 한계점을 명시하면서 사회통합지표 체계의 실용성(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에 초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두 선행 연구 모두 지수 작성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입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표 체계를 구축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신욱 등(2012)의 연구는 앞선 두 연구의 사회통합 개념 및 지표 구성을 토대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사회통합지표 체계를 다음 <표 2-4>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영역별 지수를 산출하였다. 강신욱 등(2012)의 연구에서는 지수 산출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지표 선택에서 데이터의 확보 가능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앞서의 연구들은 사회통합의 다양한 개념하에서 한국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력하였다면, 강신욱 등(2012)의 연구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 확보에 주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4> 강신욱 등(2012)의 영역별 사회통합지표 체계의 구성

영역		지표
상태	사회적 결속력	선거참여, 선거 외 참여, 정치적 관심, 사회참여, 집단 간 관계, 일반신뢰, 기관신뢰, 부패인식, 관용, 생활만족도
조건	사회적 안정성	1인당 GDP, 부양인구비율, 자살률, 1인당 CO ₂ 배출량,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형평성	소득불평등, 빈곤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보호의 정도, 공공의료비지출 비중, 공공사회지출 비중

자료: 강신욱 등(2012). p.11의 내용으로 작성.

한편 강신욱 등(2012)은 비교 대상 국가를 OECD 국가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보다 뒤쳐진 국가들과의 비교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산출된 사회통합지수값 자체보다는 비교 국가군에서의 순위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즉 결과의 해석에서 OECD 국가군 중 각 영역별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사회통합지수의 산출 과정에서는 우선 각 지표를 표준화하는데, 비교 대상 국가들의 지표값 가운데 최댓값과 최솟값을 이용한 표준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앞선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Z-score 표준화를 활용하지 않았는데, 예외적 지표값에 평균과 표준편차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⁴⁾ 다음 식은 강신욱 등(2012, p.66)의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⁵⁾

$$S_j = \frac{I_j - I_{\min}}{I_{\max} - I_{\min}}$$

* S_j 는 국가 j의 I 지표의 표준화된 값

* I_j 는 j국의 지표 I의 원래 값

* $I_{\max}$ 와 $I_{\min}$ 은 각각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I의 최댓값과 최솟값

강신욱 등(2012)의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지표값의 결합을 통해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연구의 목적을 각 연구자나 정책 담당자들이 각각의 목표에 따라 사회통합지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본적 틀을 제공하는 실용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4) 그러나 예외적 지표값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 역의 방향성을 가지는 지표에 대한 표준화 방식(강신욱 등, 2012, p.67)에 대해서는 본 장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밝히고 있다(강신욱 등, 2012, pp.32-33). 즉 정책적 목표에 맞게 지표 별로 임의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안적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은 지수 산출 과정에서 비교 연도의 결측값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가장 인접한 연도의 관측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 비교 연도까지 해당 값이 결측인 경우는 나머지 비교 시점의 관측치 평균값을 투입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특정 지표가 모두 결측인 국가에 대해서는 결측인 지표를 제외하고 영역별 지수를 산출하고, 절반 이상의 지표가 결측인 경우에는 영역별 지수를 산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산출된 영역별 사회통합지수는 다음 <표 2-5>와 같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사회적 결속력은 29개국 중 21위, 사회적 안정성은 34개국 중 29위, 사회적 형평성은 34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사회통합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는 사회적 결속력은 덴마크, 사회적 안정성과 형평성은 모두 노르웨이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강신욱 등(2012)의 OECD 국가의 영역별 사회통합지수 및 순위

국가 (2010년 기준)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Australia	0.72	5	0.58	11	0.56	23
Austria	0.68	10	0.59	10	0.82	3
Belgium	0.63	12	0.39	31	0.73	8
Canada	0.70	8	0.50	23	0.59	20
Chile	0.37	24	0.53	19	0.33	33
Czech Rep.	0.38	23	0.42	28	0.69	13
Denmark	0.87	1	0.54	16	0.83	2
Estonia	-		0.36	32	0.41	30
Finland	0.73	4	0.51	22	0.72	10
France	0.50	17	0.54	17	0.80	4
Germany	0.64	11	0.55	15	0.77	6
Greece	-		0.63	6	0.59	21
Hungary	0.32	27	0.32	34	0.59	22
Iceland	-		0.64	3	0.68	14
Ireland	0.61	14	0.64	5	0.51	27
Israel	0.46	20	0.55	13	0.40	31
Italy	0.49	18	0.47	25	0.61	17
Japan	0.52	16	0.40	30	0.60	19
Korea	0.45	21	0.42	29	0.47	28
Luxembourg	-		0.64	4	0.74	7
Mexico	0.29	29	0.46	26	0.32	34
Netherlands	0.71	6	0.62	9	0.71	11
New Zealand	0.70	9	0.45	27	0.66	15
Norway	0.82	2	0.66	1	0.83	1
Poland	0.36	26	0.47	24	0.54	24
Portugal	0.37	25	0.52	20	0.63	16
Slovak Rep.	0.30	28	0.54	18	0.53	25
Slovenia	0.43	22	0.52	21	0.72	9
Spain	0.48	19	0.66	2	0.52	26
Sweden	0.80	3	0.63	7	0.77	5
Switzerland	0.70	7	0.58	12	0.71	12
Turkey	-		0.33	33	0.35	32
United Kingdom	0.56	15	0.62	8	0.61	18
United States	0.62	13	0.55	14	0.46	29
포함된 지표수	10		6		7	
해당 국가수	29		34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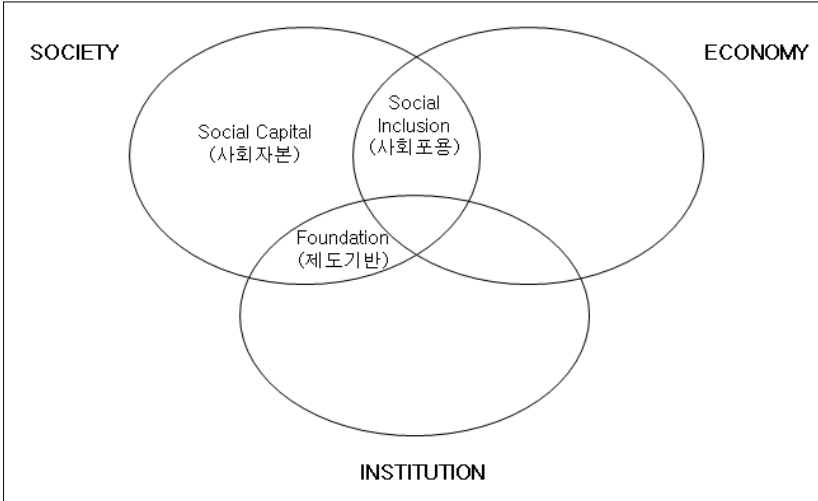
자료: 강신욱 등(2012). pp.125-128(재구성).

다. 조병구 등(2015)의 국민통합지수

조병구 등(2015)은 OECD 회원국과의 시계열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 수준을 진단하고 그 개선 가능성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도하고자 국민통합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사회통합 관련 지표를 사회포용의 하위 영역에 배치하고, 장용석 등(2011)의 ‘공정사회지표’ 구성 체계에서 자유와 민주, 안전과 보호, 국제 사회 참여, 국제 협력 등과 관련한 중분류의 영역을 ‘제도기반’이라는 영역에 포함하였다. 이들은 국민통합에서 국민의 개념을 민족주의 관점에서 내부 지향성보다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지향성 개념으로 해석하였는데, 이에 따라 ODA 비율 또는 국제환경협약 가입률과 같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통합 개념의 지나친 확장 성향을 보여 주고 있다.

조병구 등(2015)은 지표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축에서 환경을 제외하고, 제도를 투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단, 이들은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접근과는 달리 대분류 영역을 구성함에 있어 대분류 영역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그림 2-3]과 같이 상호 교차하는 형태의 지표 체계를 설계하였다. 이는 국민통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영역, 그리고 각국의 제도적 기반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이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통합지표는 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경제 및 제도 영역과의 교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제 영역과 사회 영역의 교차 부분은 포괄적 성장모델(Inclusive growth model)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포용’이라 칭하고, 사회 영역은 ‘사회자본’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와 제도와의 교점은 ‘제도기반’이라 하였다.

[그림 2-3] 조병구 등(2015)의 국민통합지표 체계 구성



자료: 조병구 등(2015). p.61을 이용하여 재구성함.

각각의 대분류는 다시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된다. 사회포용의 중분류는 기회균등, 형평, 안전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자본은 관용, 신뢰, 참여, 그리고 제도기반은 자유, 법질서, 정부 역량, 사회복지, 글로벌 기여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의 중분류는 다음 <표 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분류로 나뉘지며, 각 소분류에 대한 세부 지표가 구성된다.

<표 2-6> 조병구 등(2015)의 국민통합 지표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지표	정책 변수
사회포용	기회균등	경제적 기회	남녀 고용격차	○
			남녀 임금격차	
		사회적 기회	공교육지출 비율	
	형평	경제적 형평	지니계수	○
		사회적 형평	취학률(secondary edu)	
			노인부양비(역수)	
			young이 old 부담 느끼는 정도	
		정보격차	인터넷 사용자 비율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지표	정책 변수
사회포용	안전	경제적 안전	실업률	○
			임시직 근로자 비율	
		사회적 안전	도로사망률	
			범죄율	
		심리적 안전	자살률	
			주관적 안전감	
사회자본	관용	대인 관용	타인에 대한 관용	
		다문화 관용	다문화에 대한 관용	○
	신뢰	대인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대기관 신뢰	기관신뢰	○
		대외국인 신뢰	외국인에 대한 신뢰	
	참여	사회참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정치참여	
		기부	Helping others	○
제도기반	자유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
		정치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자유	언론자유	
	법질서	법치	법치지수	
		부패	부패인식지수	○
	정부 역량	집행	정부효과성	○
		규제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적연금지출 비중	○
		보건의료	복지지출액 비중	
	글로벌 기여	국제협력	글로벌 공공재 기여	
		개발협력	ODA 비율	○
		국제환경	국제환경협약 가입률	

자료: 조병구 등(2015). pp.73-76(재구성).

국민통합지표 체계의 특징은 사회적 관계를 넘어 경제 및 제도의 관점을 포함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Diener 교수의 제언을 수용하여(조병구 등, 2015, p.26)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지표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베이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간극의 확인은 국민통합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국민통합지표의 지수화는 각 변수의 정규화 작업 수행 후, 정규화된 자료를 가중치와 결합하여 부문 지수화를 거친 뒤 부문 지수들을 통합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변수의 정규화는 다양하게 선정된 각 변수들의 스케일을 통일하는 과정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Osberg and Sharpe(2005)의 선형 정규화 방법(Linear Scaling Method: LSM)을 원용하였다. Osberg and Sharpe(2005)의 정규화 방식은 기본적으로 HDI의 정규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최댓값과 최솟값을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조병구 등, 2015, p.71). 이러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개별 국가의 발전 수준을 지수값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시계열적 비교 전체 단위에서 최댓값을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대체적으로 1인당 GDP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표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로 발전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실재하는 최댓값의 110%를 지수화 과정의 최댓값으로, 실재하는 최솟값의 90%를 지수화 과정의 최솟값으로 반영함으로써 극점에 수렴하는 지표들의 경우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HDI에서 평균수명의 경우에는 일정 수명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댓값을 늘려 잡는 것이 필요하다.

$$LSM \text{ 정규화 지수} = (Value - Min) / (Max - Min)$$

$$\begin{aligned} * \text{여기서 } Max &= global \text{ max} + [global \text{ max} * 10\%] \\ Min &= global \text{ min} + [global \text{ min} * 10\%] \end{aligned}$$

활용 자료에서 결측값이 존재하는 경우 선형함수(Linear Function) 또는 계단함수(Step Function)를 사용한 외삽법(extrapolation)이나 내삽법(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추정된 값을 투입하였다(조병구 등, 2015, pp.66-67). 선형함수는 선형회귀분석 결과의 추정치로 결측값을 대체하는 것이며, 계단함수는 유효한 가장 최근 관측치로 결측값을 대체

하는 것을 말한다. 결측이 두 관측치 사이에서 발생하면 내삽법, 최초 관측 이전이나 마지막 관측 이후에 발생하면 외삽법을 활용하게 된다. 이때 특정 변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지수 및 관련 지수를 만들어 분석하였으며, 특정 국가의 자료가 전체 시기에 결측인 경우는 분석 자체에서 제외하였다.

대분류 및 중분류 영역의 지수값을 OECD 국가와 비교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살펴보면 다음 <표 2-7>과 같다. 한국은 대분류 수준에서 사회포용, 사회자본, 제도기반 모두 OECD 31개국 중 하위권(L)에 머물고 있다. 각각 2012년 현재 비교 대상국 중 27위, 23위, 27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분류 수준에서 사회포용의 형평 영역, 사회자본의 신뢰 영역, 제도기반의 정부 역량이 중위권(M)으로 나타나 다른 중분류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7> 조병구 등(2015)의 국민통합지수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위상

대분류	중분류	rank					level	
		1995	2000	2005	2012	95-12변화	1995	2012
사회포용 (30)		26	27	27	27	-1	L	L
	기회균등(30)	29	29	28	28	1	L	L
	형평(30)	1	2	8	12	-11	H	M
	안전(31)	29	30	30	30	-1	L	L
사회자본 (31)		24	24	25	23	-1	L	L
	관용(31)	30	30	30	25	5	L	L
	신뢰(31)	13	16	17	18	-5	M	M
	참여(31)	24	24	25	23	-1	L	L
제도기반 (31)		28	28	29	27	1	L	L
	자유(31)	21	24	28	26	-5	M	L
	법질서(31)	28	27	23	23	5	L	L
	정부 역량(31)	27	28	26	21	6	L	M
	사회복지(31)	31	31	31	29	2	L	L
	글로벌기여(31)	29	27	25	25	1	L	L

주: 괄호 안은 결측 국가를 제외하고 지수를 계산한 전체 국가 수이며, Level은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30% 'H(High)', 하위 30% 'L(Low)', 그 외 'M(Middle)'으로 나타냄.

자료: 조병구 등(2015). p.161(재구성).

라. 이재열 등(2014)의 사회통합지수

이재열 등(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잠재적 갈등소지와 사회적 통합 역량 간의 관계로 개념화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이들은 사회통합을 상대적 관계의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즉 갈등소지가 많은 반면 통합 역량이 부족하면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갈등소지가 많더라도 통합 역량이 풍부하다면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잠재적 갈등은 경제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이념·문화적 양극화로 구분되며, 사회통합 역량은 체계 영역과 생활세계 영역,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규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그림 2-4]와 같다. 갈등의 잠재적 원천은 경제적 자원에서의 양극화 경향(소득 및 자산 불평등, 고용 및 빈곤의 치우침 등), 관계 수준에서의 양극화(계층 간의 이동 정도, 이혼율, 자살률 등), 이념이나 문화 수준에서의 양극화(불신의 정도, 사회적 거리감, 차별 의식 등)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통합 역량은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체계 역량과 실질적이고 비공식적인 생활세계 역량, 그리고 규범 역량으로 구성하고, 체계 역량은 복지 역량(복지지출, 노동조합 조직화, 연금 제도 등)과 회복탄력성을 증대시켜 주는 역량(교육재정, 노동시장 참여 기회, 평생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생활세계 역량은 정치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정치적 역능화와 사회적 자본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회적 역능화(신뢰, 자유, 공정성 등)로 측정하였고, 준법의식과 공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규범 역량은 규칙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통합지수의 산출은 각 영역의 지표들의 수치를 최댓값 1, 최솟값 0을 갖는 분포로 표준화한 후 위 <표 2-8>의 가중치를 반영,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여기서 적용된 가중치는 세부 영역별로 동일가중치를 부여하되, 규범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제도투명성 하나로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체계 역량과 생활세계 역량 가중치의 절반을 부여하였다. 또한 해당 지표의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측으로 처리하여 해당 영역의 값을 산출하였고, 2개 이상의 지표가 결측인 국가는 비교 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사회통합지수는 이해의 용이성을 위해 실제 점수에 로그를 취하고, 이를 최솟값 0, 최댓값 100을 갖는 분포로 바꿔 제시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이재열 등, 2014, p.135).

$$Final\ SII_j = 100 \times \frac{\ln(SII_j) - \ln(SII_{min})}{\ln(SII_{max}) - \ln(SII_{min})}$$

*SII = 사회통합지수, j=해당 국가

결측값에 따라 7개국이 제외되어 사회통합지수가 산출된 국가는 총 79개국이며, 이 중 노르웨이가 사회통합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스웨덴, 덴마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통합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서유럽과 뉴질랜드, 호주 등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군 중에서는 일본이 3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19.74로 전체 79개국 중 40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갈등지수가 1.74로 상당히 낮으며, 사회통합 역량도 1.38로 낮았다. 이는 비교 대상국 중 각각 58위, 30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42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표 2-9〉 이재열 등(2014)의 국가별 사회통합지수 순위

사회 통합 순위	국가	사회 통합 지수	갈등 지수	역량 지수	사회 통합 순위	국가	사회 통합 지수	갈등 지수	역량 지수
1	노르웨이	100	0.03	2.00	41	우크라이나	19.73	1.40	1.11
2	덴마크	95.77	0.05	2.27	42	칠레	18.35	2.04	1.49
3	스웨덴	61.76	0.28	2.16	43	싱가포르	18.08	1.74	1.26
4	아이슬란드	44.51	0.66	2.02	44	아제르바이잔	17.55	0.67	0.47
5	네덜란드	42.5	0.69	1.89	45	에티오피아	17.43	1.36	0.95
6	핀란드	42.01	0.80	2.12	46	아르헨티나	17.4	1.89	1.32
7	뉴질랜드	41.69	0.77	2.00	47	세르비아	16.49	1.71	1.14
8	호주	36.24	0.98	1.91	48	터키	16.46	1.75	1.16
9	스위스	35.78	0.94	1.77	49	아르메니아	16.09	1.46	0.95
10	벨기에	35.02	1.07	1.93	50	요르단	15.64	1.66	1.05
11	독일	34.75	1.00	1.78	51	타이완	15.5	1.97	1.24
12	오스트리아	34.32	1.05	1.84	52	몰도바	15.35	2.00	1.25
13	슬로베니아	33.06	1.03	1.68	53	가나	15.25	1.79	1.11
14	캐나다	32.74	1.06	1.69	54	탄자니아	14.45	1.60	0.95
15	일본	32.14	1.02	1.58	55	브라질	14.34	2.22	1.31
16	영국	31.05	1.17	1.71	56	알바니아	13.9	1.66	0.96
17	이스라엘	30.24	1.12	1.56	57	이집트	13.74	1.55	0.89
18	아일랜드	30.13	1.26	1.75	58	베네수엘라	13.74	1.77	1.01
19	에스토니아	30.08	1.13	1.56	59	말레이시아	13.29	1.92	1.07
20	스페인	30.06	1.29	1.78	60	인도네시아	12.92	1.44	0.79
21	프랑스	29.18	1.34	1.77	61	조지아	12.1	1.83	0.96
22	미국	28.89	1.27	1.65	62	인도	11.75	1.47	0.75
23	몰타	27.93	1.30	1.60	63	키르기스스탄	11.28	1.55	0.78
24	체코	27.89	1.11	1.37	64	중국	11.13	1.57	0.78
25	이탈리아	27.6	1.28	1.56	65	남아프리카	10.95	2.43	1.19
26	베트남	27.42	0.87	1.05	66	방글라데시	10.81	1.50	0.73
27	리투아니아	26.15	1.20	1.35	67	멕시코	10.66	1.81	0.88
28	폴란드	25.54	1.36	1.47	68	페루	10.65	2.04	0.98
29	키프로스	25.41	1.61	1.74	69	러시아	9.76	2.03	0.93
30	헝가리	24.6	1.29	1.33	70	부르키나파소	9.54	1.91	0.87
31	태국	24.02	0.99	0.99	71	르완다	7.9	2.37	0.98
32	포르투갈	23.49	1.69	1.64	72	콜롬비아	7.55	2.05	0.84
33	크로아티아	23.23	1.31	1.26	73	말리	7.39	1.68	0.68
34	라트비아	22.7	1.33	1.24	74	모로코	5.7	2.24	0.83
35	슬로바키아	22.17	1.42	1.28	75	필리핀	5.48	2.01	0.73
36	우루과이	21.82	1.73	1.53	76	이란	4.23	1.98	0.67
37	벨라루스	21.11	1.23	1.05	77	과테말라	0.68	2.26	0.63
38	루마니아	20.1	1.33	1.07	78	잠비아	0.24	2.17	0.60
39	불가리아	20.01	1.47	1.17	79	파키스탄	0	1.75	0.47
40	한국	19.74	1.74	1.38	-	-	-	-	-

자료: 이재열 등(2014). p.146(재구성).

2. 국외 사회통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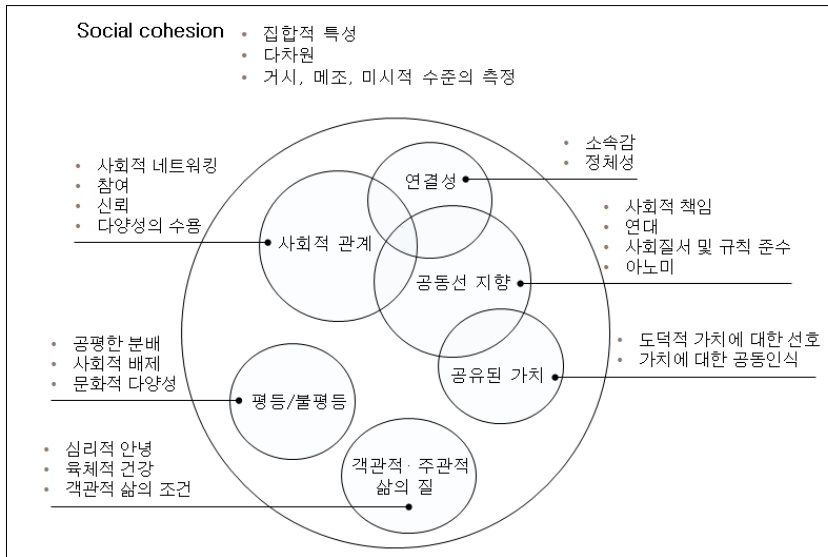
가. 독일 베텔스만 재단(2013)의 사회통합지수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Foundation)은 지속 가능하고, 살 만한 사회 구현을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사회통합이 가장 주목받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이 단편적으로 수행된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재단은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사회통합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재단은 2012년 처음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2013년 유럽 27개국과 OECD 7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비교한 ‘Social Cohesion Radar’를 발간하였다. 비교 기간은 1989년부터 2012년까지로, 4개의 시점(1989~1995, 1996~2003, 2004~2008, 2009~2012)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베텔스만 재단은 사회통합 개념을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여섯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 소속감(Connectedness), 공동선 지향(Orientation towards the common good), 공유된 가치(Shared values),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평등/불평등(Equality/Inequality)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룹 간 또는 그룹 내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는 많은 사회통합의 정의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핵심 요소는 사회적 네트워크이다(사회적 자본의 개념). 또한 다른 연구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는 협동, 연대, 공익에 대한 지향(Orientation towards the common good)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와 연결된 공유된 가치(Shared values)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사회에 대한 정체성과 소속감(Connectedness)을 사회통

합 정의의 기초로 두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와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보기도 한다(Equality/Inequality). 평등 및 불평등의 측면은 다양성(문화, 종교, 삶의 방식 등)을 포함하며, 이는 분배와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몇몇 연구들은 사회통합의 정의에 웰빙, 복지, 삶의 질 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Schiefer 등, 2012).

[그림 2-5] 베텔스만 재단(2012)의 사회통합 측면과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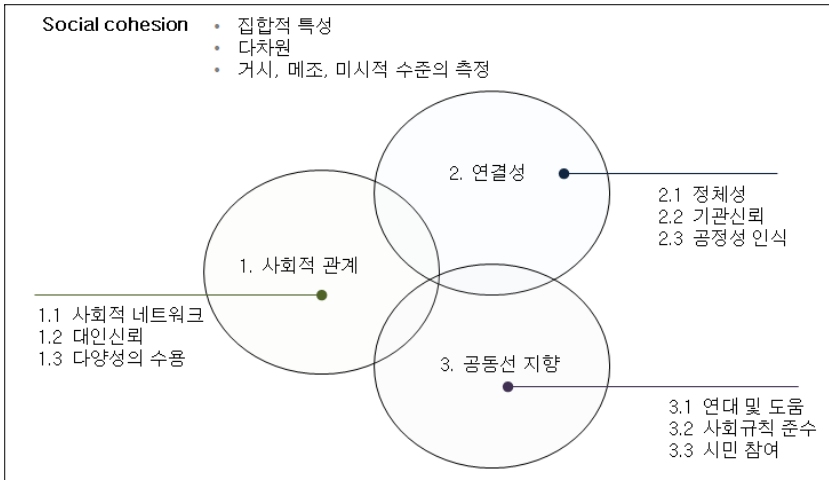


자료: Schiefer et al.(2012). p.20.

베텔스만 재단은 관련 문헌에서 언급한 사회통합의 여섯 가지 측면을 세 가지 영역(Social relationship, Connectedness, Orientation towards the common good)으로 아래 [그림 2-6]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이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질과 평등/불평등의 측면은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이자 결과로

볼 수 있어 분석의 명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가치와 사회통합 간의 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으로서 공유된 가치의 측면은 포함시켰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위와 같이 재구성된 사회통합의 지표는 국제 비교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지표를 선별하고 각 영역을 3개의 하위 요소(총 9개)로 구성하였다(Dragolov 등, 2013).

[그림 2-6] 베텔만 재단(2013)의 사회통합 세 가지 영역



자료: Dragolov et al.(2013). p.14.

지표의 선정은 활용 가능한 자료에서 비교 대상 국가 대부분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지, 해당 지표가 포함된 자료가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샘플 인지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 사회통합 측정을 위해 활용된 대표적인 자료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유럽 가치관조사(European Values Survey), 갤럽국제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유럽 삶의 질 조

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The International Social Program),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등이다. 그러나 위 자료에서 특정 시기 및 특정 국가에서 지표값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결측값을 가진 불완전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강점을 가진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LML)을 활용하여 9개의 사회통합 차원에 대한 국가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지수를 산출하였다.

베텔스만 재단의 사회통합지표는 다른 사회통합지표 및 지수보다 사회적 자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영역별 지표는 다음 <표 2-10>과 같다.

<표 2-10> 베텔스만 재단(2013)의 사회통합 지표 구성

영역		지표
1. 사회적 관계	1.1 사회적 네트워크	지난주 얼마나 많은 시간 외로움을 느끼는가?(-)
		얼마나 자주 친구, 친지, 혹은 직장 동료들과 친교를 위해 만나는가?
		심각한 개인적 또는 가족의 문제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있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친척 유무
	1.2 대인신뢰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사람들은 공정하려고 노력한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 도움을 주려고 한다.
	1.3 다양성의 수용	만족 갈등의 수준(-)
		계이와 레즈비언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
		이민자들은 나라의 문화를 훼손한다.(-)
		종교 갈등의 수준(-)
		인종 및 민족 소수자가 살기에 좋은 곳이다.
		게이 또는 레즈비언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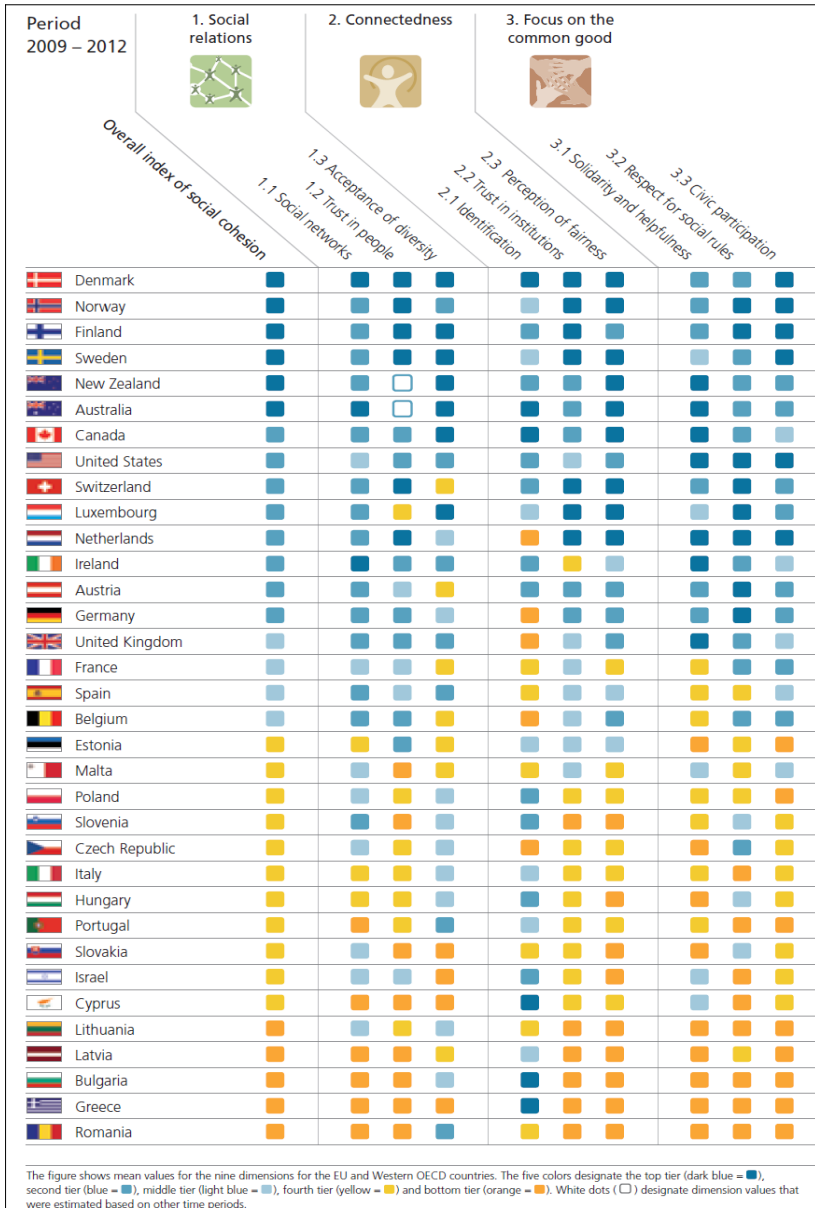
영역		지표
2. 연결성	2.1 정체성	국가에 대한 소속감의 수준
		이상적으로, 다른 나라로의 이주 희망 수준(-)
	2.2 기관신뢰	경찰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건강보호체계에 대한 신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선거의 투명성
	2.3 공정성 인식	부패(-)
		경제 영역 부패(-)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가 필요하다.(-)
		정부는 소득 격차를 감소해야 한다.(-)
		능력이나 노력에 비춘 소득의 적절성
		빈부 간의 갈등(-)
3. 공동선 지향	3.1 연대 및 도움	지난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도왔는가?
		지난달 기부를 하였는가?
		지난달 도움을 요청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도왔는가?
	3.2 사회규칙 준수	교통규칙 위반 수준
		밤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
		지하경제의 규모(-)
	3.3 시민참여	정치 관심도
		지난 12개월 동안 캠페인 배지나 스티커 부착 여부
		지난 12개월 동안 서명운동 참여 여부
		지난달 정부에 의견 제출 여부
		지난달 (조직) 자원봉사 여부
		지난 12개월 동안 조직 또는 협회 활동 여부
		국민투표 및 총선거 참여율

주: 베텔스만 재단의 data set Period 4 기준임.

자료: Dragolov et al.(2013). p.68(재구성).

베텔스만 재단은 위와 같은 지표를 통해 각국 사회통합의 전체적인 수준과 세 가지 영역별 수준을 4개의 시점으로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다. 9개의 각 하위 영역별 점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활용하며, 3개의 영역은 각 하위 영역, 총 사회통합 점수는 9개의 하위 영역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재단은 순위를 정함에 있어 작은 점수 차이가 과대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 영역의 점수 대신 5개의 수준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사회통합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2009~2012년 기간 전체적인 사회통합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뒤를 이은 스위스는 사회적 관계 영역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적인 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7] 베텔스만 재단(2013)의 사회통합 국제 비교(2009~2012)



자료: Dragolov et al.(2013). p.29.

나. 계간 아메리카(2015)의 사회통합지수

계간 아메리카(Americas Quarterly)는 Americas Society and Council of the Americas의 발간물로서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서반구의 정치, 사업, 문화 등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다. 이 계간지는 매년 미국을 포함하여 미주 지역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22개의 지표(2015년 기준)를 분석하고, 각국의 지표별 순위와 사회 전반을 평가하는 사회통합지수(Social Inclusion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2012년 처음 고안되었다. 여기서 사회통합의 개념은 시민들이 정치, 경제 및 사회적 기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경제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물리적·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공식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 정치적 참여와 목소리, 그리고 인종과 민족,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을 내포하고 있다.

계간 아메리카는 국가가 위와 같은 사회통합의 조건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달리 표현하면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사회통합지수를 사회통합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통합의 투입은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조건, 국가정책,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의 지표로 구성하고, 사회통합의 산출 부문은 정책의 결과로서의 정치·경제 및 정책적 산출과 장기간에 걸쳐 사회통합을 이끄는 권리와 경제적 조건 등의 지표로 구성하였다(Americas Quarterly, 2012). 2012년 15개의 지표로 고안되었으나, 이후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고, 기존 지표를 성별, 인종별 지표로 분화되어 2015년에는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GDP 성장률, GDP 대비 사회적 프로그램 지출 비율, 중고등(Secondary School) 취학률, 정치적 권리, 시민권, 여성의 권리, 성소수자(LGBT) 권리, 인종 간 통합, 시민사

회 참여, 금융포용성, 1일 4달러 이상의 생활자 비율, 개인 역량, 정부 대응성,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공식적 직업에 대한 접근성 등이다 (Alidadi et al., 2015).

〈표 2-11〉 계간 아메리카(2013)의 사회통합 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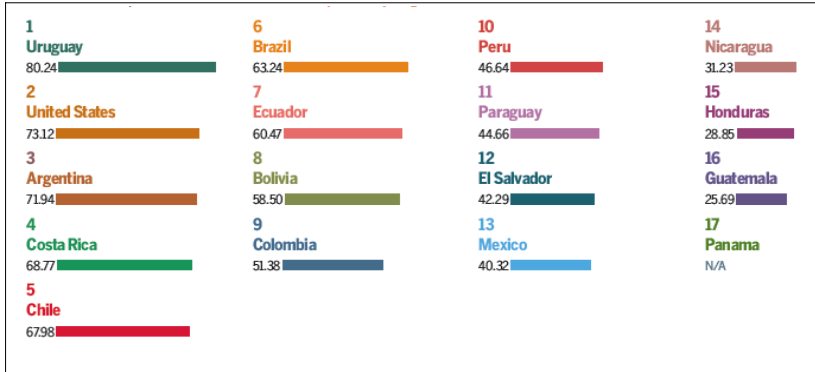
투입(Inputs)	
GDP 성장률	- 경제적 성장이 빈곤과 불평등 감소로 연결 - 2004~2014년 평균 성장률 -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DP 대비 사회적 프로그램 지출 비율	- 사회적 프로그램(교육과 건강)에 대한 국가 지출 수준 - 자료: World Bank
중고등 (Secondary School) 취학률 - 성별, 인종별	- 초등 취학률이 거의 보편적이기 때문에 중고등 취학률로 측정 - 자료: CEDLAS & World Bank, U.S. Census Current Population Survey, Panama Departamento de Estadística
정치적 권리	- 3개 영역 10개의 정치적 권리를 측정(0~40점), - 선거 과정(3), 정치적 다원성과 참여(4), 정부의 기능(3), - 자료: Freedom House's Survey
시민권	- 4개 영역 15개의 시민자유를 측정(0~60점) - 표현과 신념의 자유(4), 결사의 자유(3), 법의 지배(4), 개인자율성 및 개인의 권리(4) - 자료: Freedom House's Survey
여성의 권리	- 산모사망률, 출산권, 정치권에서의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범죄화 하는 법, 아동양육을 위한 세금규정 측정(0~28점) - 자료: Joan Caivano & Jane Marcos-Delgado에 의해 수집
성소수자 (LGBT) 권리	- 동성관계의 허용성 반영(0~8점) - 자료: Javier Corrales' Gay Friendliness Index
인종 간 통합	- 몇몇 국가에서는 인종별 서베이 자료가 부족하여 IDB와 협력하여 새로운 지표를 개발 - 교육 및 노동 부문에서의 인종 간 적극적 평등 조치 및 통합 관련 법의 존재 여부 - 자료: National censuses 및 서베이 자료 활용(0~12점)
시민사회 참여 - 성별, 인종별	- 참여하는 협회의 평균 수(1~5점) - 자료: Latin American Public Opinion Project(LAPOP)
금융 포용성	- 공식제도 계좌 접근성으로 측정 - 자료: Global Findex Database (World Bank)

산출(Outputs)	
1일 4달러 이상의 생활자 비율 - 성별, 인종별	- World Bank는 준(moderate) 빈곤을 1일 4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1일 2.5달러 절대빈곤보다 적절하다고 판단) - 자료: CEDLAS & World Bank
개인 역량 - 성별, 인종별	-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내적 정치 효능감)으로 측정(1~7점) - 자료: Latin American Public Opinion Project(LAPOP)
정부 대응성 - 성별, 인종별	- '정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응답(외적 정치 효능감)으로 측정(1~7점) - 자료: Latin American Public Opinion Project(LAPOP)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 성별, 인종별	- 적절한 주택은 물에 대한 접근, 전기에 대한 접근, 심각한 과잉 사용이 아닌 상태 등 세 가지 지표로 측정 - 자료: CEDLAS & World Bank
공식적 직업에 대한 접근성 - 성별, 인종별	- 향후 연금을 받게 되는 일자리에 있는 25~65세 인구수로 측정 - 자료: CEDLAS & World Bank

자료: Americas Quarterly(2013). p.49(2015년 지표로 재정리).

Americas Quarterly의 사회통합지수는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지수화된 것이다. 지수는 각 지표에 대한 상대적인 순위를 매기고, 각 순위를 총 0~100점으로 치환하여 계산되었다. 이때 모든 변수는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였다(Americas Quarterly, 2012). 그 결과 2015년 계간 아메리카의 사회통합지수 순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우루과이가 1위, 미국이 2위, 아르헨티나가 3위로 나타났다.

[그림 2-8] 계간 아메리카(2015)의 사회통합지수 국가별 종합 순위



자료: Alidadi et al.(2015), p.7.

제3절 소결

지금까지 국내 사회통합지수 4개 연구와 국외 사회통합지수 2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회통합 지수화 연구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검토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각 연구의 사회통합지표의 체계를 살펴보면, 노대명 등(2009)의 연구는 소득, 고용, 금융, 건강, 주택자산, 가족 6개 영역으로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강신욱 등(2012)의 연구는 사회통합의 상태로 사회적 결속력을 조건으로 사회적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조병구 등(2015)의 연구는 대분류 차원에서 사회포용과 사회자본, 그리고 제도기반으로 구분하고 중분류 차원에서 사회포용은 기회균등, 형평, 안전, 사회자본은 관용, 신뢰, 참여, 제도기반은 자유, 법질서, 정부 역량,

사회복지, 글로벌 기여로 구성하였다. 한편 이재열 등(2014)의 연구는 잠재적 갈등소지 차원에서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가치 양극화를, 사회적 통합 역량 차원에서 체계 역량, 생활세계 역량, 규범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의 구성과 해당 측정지표는 다음의 <표 2-12>와 같다.

노대명 등(2009)의 연구는 사회통합의 상태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체적으로 정책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사회적 안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강신욱 등(2012), 조병구 등(2015), 이재열 등(2014)의 연구에서는 신뢰(불신), 사회적 참여와 같은 사회통합의 상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사회통합의 원인과 상태를 명확한 인과관계하에서 위치시키고 있지는 않다. 다만 사회통합의 상태는 개인 및 사회구성원의 인식 및 행위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조건은 사회구조적 환경에 대한 진단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표 2-12> 국내 사회통합지수의 지표 체계 비교

구분	영역		지표
노대명 등 (2009)	소득		빈곤율, 소득불평등, 근로빈곤율
	고용		실업률, 비정규비율, 성별 임금 격차, 파업률
	금융		소비자물가, 이자율, 저축률
	건강		유아사망률, 기대수명(여성, 남성), 1000명당 침상수, 의료비 지출 비율
	주택자산		주거비 비중, 주택가격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
	가족		평균 가구원수, 여성취업률, 자살률, 이혼율, 결혼율, 출생률, 진학률
강신욱 등 (2012)	상태	사회적 결속력	사회에 대한 소속감, 타인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생활만족도, 사회적 참여
	조건	사회적 안정성	1인당 GDP, 인구증가율, 기대수명, 부양인구비율 자살률, 주관적 건강수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사회적 형평성	빈곤율, 소득불평등, 고용률, 실업률, 고용보호의 정도 GDP 대비 공적의료비 지출의 비중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중
조병구 등 (2015)	사회포용	기회균등	남녀 고용 격차, 남녀 임금 격차, 공교육지출 비율

구분	영역		지표
조병구 등 (2015)	사회포용	형평	지니계수, 중고등 취학률, 노인부양비, 노인부양부담 정도, 인터넷 사용자 비율,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
		안전	실업률, 임시직근로자 비율, 도로사망률, 범죄율, 자살률, 주관적 안전감
	사회자본	관용	타인에 대한 관용, 다문화에 대한 관용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기관신뢰, 외국인에 대한 신뢰
	제도기반	참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기부
		자유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자유
		법질서	법치지수, 부패인식지수
		정부 역량	정부효과성,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
		사회복지	공적연금지출 비중, 복지지출액 비중
		글로벌기여	글로벌 공공재 기여, ODA 비율, 국제환경협약 가입률
이재열 등 (2014)	잠재적 갈등소지 (양극화)	경제	지니계수
		사회	불신비율
	사회적 통합 역량	가치	비혼합형 비율(잉글하트의 물질주의/탈물질주의 척도)
		체계	공공교육지출, 고등교육이수율, 공적사회지출
		생활세계	언론자유, 여성불평등지수, 투표율, 민주주의
		규범	제도투명성

주: 볼드체로 처리된 지표는 검토된 국내외 선행 연구 중 2개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지표임.

다음으로 국외 사회통합지수 연구인 베텔스만 재단과 계간 아메리카의 사회통합지수를 보면, 베텔스만 재단의 사회통합지수는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 그리고 공익에 대한 지향의 차원(3개)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사회적 네트워크, 대인신뢰, 다양성에 대한 인정, 국가자긍심, 기관에 대한 신뢰, 공정성에 대한 인식, 연대감, 사회규칙에 대한 존중, 시민참여의 세부 영역(9개)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계간 아메리카의 사회통합지수는 크게 투입과 산출로 영역을 구분하고, 투입 영역에는 GDP 성장률, GDP 대비 사회적 프로그램 지출 비율, 중고등 취학률, 정치적 권리, 시민권, 여성의 권리, 성소수자 권리, 인종 간 사회적 거리감, 시민사회참여, 금융포용성으로 구성하고, 산출 영역에는 1일 4달러 이상의 생활자 비율, 개인 역량, 정부 대응성,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공식적 직업에 대한 접근성으로 구성하였다.

〈표 2-13〉 국외 사회통합지수의 지표 체계 비교

구분	영역		지표
베텔스만 재단 (2013)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친구의 중요성, 외로움 느낀 정도
		대인 신뢰	친교 만남 정도, 개인 및 가족문제 상담 자원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자원 타인에 대한 신뢰 , 타인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타인의 이타심에 대한 인식
		관용	이웃으로 인정 여부(다른 인종, 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다른 인종이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간의 갈등 정도 동성애 인식, 동성애자의 자유 인정 이민자에 대한 인식, 종교 갈등 정도 해당 도시/지역이 소수자가 살기에 좋은지 여부
	소속감	정체성	국가에 대한 소속감 및 자부심 , 이민 의사
		기관 신뢰	경찰·의회·정당·사법·건강·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선거의 투명성, 경찰에 대한 인식
		공정성 인식	부패인식, 경제 영역 부패인식 , 성공과 부패의 연관성 인식 정부의 소득 격차 축소 노력 인식, 보수에 대한 적정성 인식, 빈부 간의 갈등 인식
	공익에 대한 지향	연대와 도움	정부의 책임 인식, 도움 및 봉사활동 정도, 기부
		규칙 준수	일반적인 교통규칙 준수 정도, 교통규칙 위반 정도 어두운 거리 안전수준 인식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수준 인식 지하경제의 규모 인식
		시민 참여	정치 중요성 인식, 정치 관심 정도 정치적 캠페인 참여 정도, 서명, 정부에 의견 제출 여부 정치인 및 공무원과의 접촉 여부 위원회 및 정치적 모임에 자발적인 참여 여부
계간 아메리카 (2015)	투입		GDP 성장률 GDP 대비 사회적 프로그램 지출 비율 중고등(Secondary School) 취학률 정치적 권리, 시민권, 여성의 권리 성소수자(LGBT) 권리, 인종 간 사회적 거리감 시민사회참여, 금융포용성
	산출		1일 4달러 이상의 생활자 비율 , 개인 역량 정부 대응성,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공식적 직업에 대한 접근성

주: 볼드체로 처리된 지표는 검토된 국내외 선행 연구 중 2개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지표임.

각 연구들은 사회통합지수의 개발 목적에 따라 지표 체계를 달리 구성하였으나, 대체로 경제적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빈곤율, 소득불평등도, 실업률, 1인당 GDP 및 성장률, 공공사회지출 비율 등)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지표(대인 및 기관신뢰, 사회 및 정치참여, 자원봉사 및 기부, 관용, 부패인식 등)들은 모든 연구의 지표 체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각각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회통합지수를 구성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영역 및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검토된 선행 연구의 지표 표준화 방법과 가중치, 그리고 결측치 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노대명 등(2009)의 연구는 결측치 처리에 대한 보고가 없으며, Z-score 표준화 방법을 선택하고 방향성을 동일하게 교정하여 동일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강신욱 등(2012)의 연구는 결측값이 있는 경우 가장 인접한 연도의 관측치로 대체하고, 일부 결측의 경우 나머지 시점의 평균값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동 연구에서 표준화는 최솟값과 최댓값을 활용한 표준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동일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산출하였다. 조병구 등(2015)의 연구는 결측값이 발생할 경우 선형함수 및 계단함수를 사용하여 추정된 값을 투입하였으며, 표준화는 최솟값과 최댓값 방식을 조정한 LSM 정규화 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동 연구의 사회통합지수도 동일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다. 또한 이재열 등(2014)의 연구는 결측값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외하고 해당 영역의 값을 산출하였고, 2개 이상의 지표가 결측인 국가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준화는 최댓값, 최솟값 표준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동일가중치를 부여하되, 지표 하나로 영향력이 과도하게 측정되는 영역의 가중치를 일부 조정하여 적용하였다.

베텔스만 재단의 사회통합지수는 불완전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강점을

가진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결측값의 문제를 보완하였다. 즉 이 분석으로 산출된 국가 점수를 통해 사회통합지수를 산출하였다. 9개의 하위 영역별 점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 점수를 활용하고, 3개의 영역별 지수 및 총 사회통합지수는 9개의 하위 영역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계간 아메리카의 사회통합지수는 각 지표에 순위를 매기고, 각 순위를 총 0~100점으로 치환하여 계산하였으며,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2-14〉 사회통합지수의 표준화 및 가중치 방법 비교

구분	결측값 처리	표준화	가중치
노대명 등(2009)	-	Z-score	동일가중치
강신욱 등(2012)	인접 연도값 또는 나머지 비교 시점 평균값	최대-최솟값	동일가중치
조병구 등(2015)	선형함수 또는 계단함수 추정값	변형된 최대-최솟값	동일가중치
이재열 등(2014)	결측 지표 제외	최대-최솟값	조정된 동일가중치
베텔스만 재단(2013)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MLL) 활용	-	동일가중치
계간 아메리카(2015)	-	순위를 0~100점으로 치환	동일가중치

각 연구에서 결측값의 처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다수의 연구가 최대-최솟값 표준화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동일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많은 지수 연구에서 동일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가중치가 지수의 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이론적·실증적 합의가 없는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지수에 대한 설득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표 구성 후 활용 자료의 특성

을 검토한 후 결측값의 처리 및 표준화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중치의 결정은 주관성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전문가 설문조사 방식 등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통합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에서 실제로 지수화를 시도한 연구는 대부분 국내 연구에서만 확인된다. 2장의 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수화는 그 자체로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그러한 이유로 베텔스만 재단의 사회통합지수의 경우에도 매우 제한된 형태로만 진행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몇 차례의 지수화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는 한국이 처한 현실을 축약하여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낮은 사회통합 상태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강조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시된 지표가 진정 사회통합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포용성의 영역에 집중하면 삶의 질 지표와 사회통합지표의 구성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신뢰, 소속감과 같은 경우는 어떤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어서 그 사회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사회통합의 상태와 조건이라는 것을 인과관계로 설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 사회의 통합 수준이라는 것은 명확한 상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텔스만 재단의 지수 또는 Chan, To and Chan(2006)이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소위 사회통합의 상태에 국한하는 지수의 산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사회통합의 상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구조적 차원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정의와, 동시에 이러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의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장

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축

제1절 연구진의 사회통합 영역 및 지표 제안

제2절 사회통합지수 개발 과정

제3절 사회통합 영역과 지표의 설정

제4절 사회통합 지표 측정

제5절 소결

3

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축 《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통합의 개념과 지표를 설정하고, 그 상대가중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조사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연구 기간 내에 전문가 조사의 실시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진이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 사회통합지수 연구 및 사회통합지표 연구(정해식 등, 2014)를 검토하여 하위 영역 및 지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였다.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3장은 이러한 지표 체계 구축 과정 전반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는 형태로 작성하였다.

제1절 연구진의 사회통합 영역 및 지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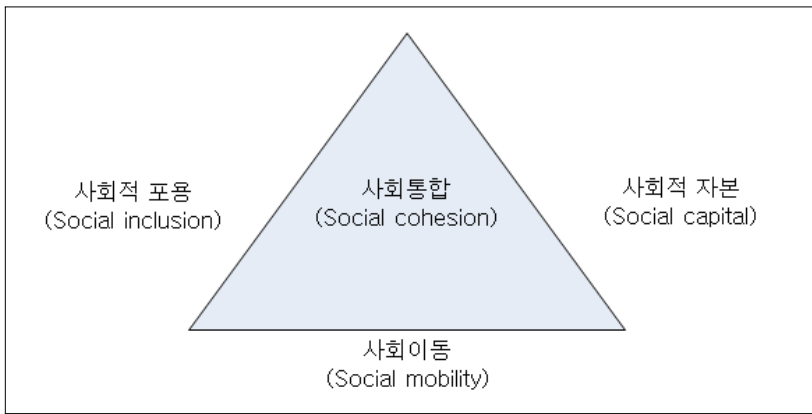
1. 사회통합 영역의 초기 설정

사회통합에 통용되는 합의된 개념이 없는 것은 각 국가, 각 사회가 유지해 왔던 상이한 사회질서 체계에서 문제를 가져오는 사회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정해식, 2014, p.7). 그런 이유에서 한국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조건 또는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는 빈곤,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배제가 가장 강력하게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의 주요한 지지축이자 상태 요인

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또한 사회통합을 보여 주는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두 영역이다. 사회적 배제, 사회적 자본의 두 영역 외에 최근 사회통합의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회이동성이다.

[그림 3-1] OECD(2011)의 사회통합의 세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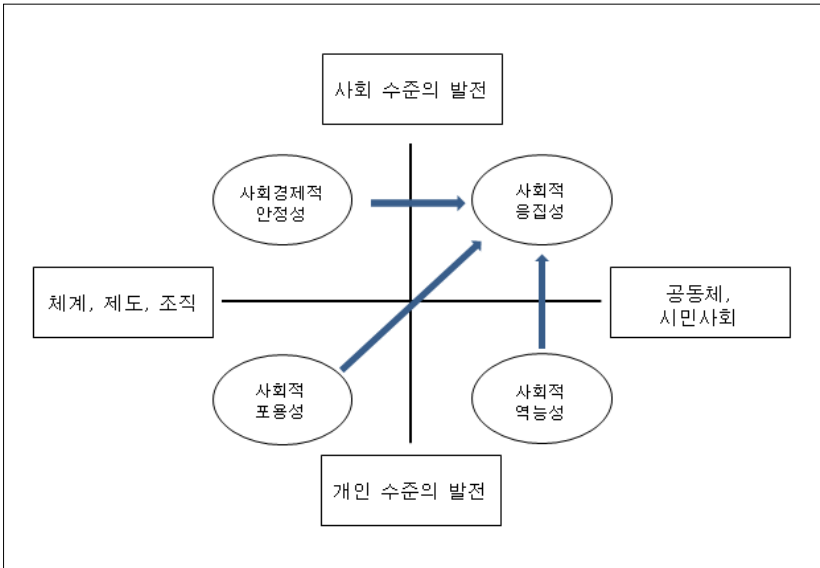


자료: OECD(2011). p.5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1)는 [그림 3-1]과 같이 '사회적 이동'을 포함한 사회통합의 세 축을 제시하였다. OECD(2011)는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라는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을 정책 전파의 대상으로 하면서, 사회통합이 발전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감과 신뢰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국가, 공공참여(civic participation)의 정도가 높은 국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원천이 된다는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높은 국가에서 조세윤리(tax morale)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밝힌다(p.138). 또한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개인적 안녕감을 높이고, 소속감을 높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본다(p.176).

OECD(2011)의 사회통합의 세 요소는 사회 전반의 구성 체계를 진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합의 요소를 고려할 때는 ‘사회의 질’ 논의를 활용할 수 있다.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의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정해식 등(2014)은 사회의 질 체계를 활용하여 사회통합의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회의 질의 4개 하위 영역-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이 중에서 정책의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른 정책 평가의 영역은 사회경제적 안전, 사회적 포용, 사회적 역능의 영역이다.

[그림 3-2] 사회의 질 체계와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



자료: 정해식 등(2014). p.123.

[그림 3-3]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의 평가기준-배치틀

사회통합 정책 영역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사회경제적 안전	사회적 포용	사회적 역능	격차의 확대 (불평등)	사회적 배제
고용					
소득/구매력					
주거					
건강과 사회적 보호					
영양					
교육					
문화					
정보/ 의사소통					

주: 정책 영역은 삶의 영역과 관련되며, 긍정적 효과/부정적 효과는 정책 목적과 관련됨.
 자료: 정해식 등(2014). p.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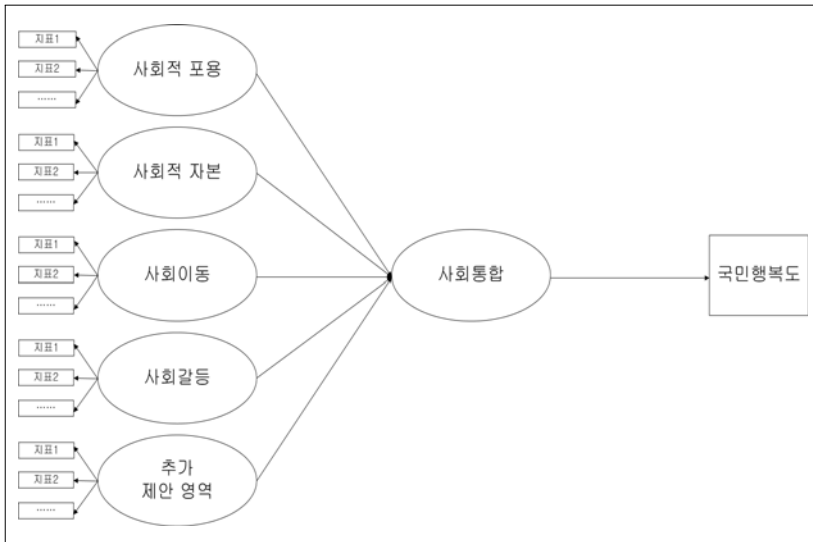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안전, 사회적 포용은 사회의 질 개념의 기본 영역에 해당하고, 사회적 역능은 사회적 이동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세 영역은 정책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명확한 영역으로 정책영향평가의 기준틀에 포함한다([그림 3-3]). 그러나 한 사회의 통합 수준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건 지표의 영향으로 결정되는 사회적 응집성을 고려해야 한다.⁶⁾ 이는 사회적 자본의 속성과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는 거버넌스의 작동 정도를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같은 제도적 기반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이재열 등(2014)은 사회통합지수를 세부 영역별로 조작화하여 ‘사회적 통합 역량’을 지적하면서, 그 하위 지표에 제도투명성 지수, 민주주의에 대한 평

6) [그림 3-2]는 한 사회의 통합 수준에서 그 하위 차원으로 사회적 응집성을 결과로서 상태로 묘사하였다. 그렇지만 사회적 신뢰,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 등으로 개념 규정이 가능한 이 영역은 동시에 다른 사회적 조건의 발전에 밀바탕이 된다. 즉 높은 제도적 신뢰는 국가를 통한 재분배에 대한 지지를 가능하게 하므로, 소득불평등의 개선 또는 취약자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쉽게 조성할 수 있다. 즉, 또 다른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하위 차원 간의 관계는 상호 인과관계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등을 포함하였다. 정영호, 고숙자(2014)는 사회갈등 관리지수를 계산하면서 정부효과성, 규제 질, 부패 통제, 정부소비지출 비중을 포함하였다. 정해식(2014)도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갈등관리 시스템의 작동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민주주의의 질과 정부효과성 지수를 반영하였다. 조병구 등(2015)은 사회 영역과 제도 영역의 교점을 ‘제도기반’이라 하면서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자유, 법치지수, 부패인식지수, 정부효과성과 같은 지표를 포함하였다.

[그림 3-4] 사회통합 영역 및 지표 구성(안) 개념도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진은 기본적으로 사회통합의 네 영역을 위 [그림 3-4]와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 개념도와 지표 체계 구성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기존에 수행되었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되, 영역

설정이나 지표 선정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에 의해 주어지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설문 체계에서 개발되는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표 간 상호관계와 중요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지표 체계를 가능한 한 단순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종합지수의 측정 및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영역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지수 계산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정책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2. 사회통합지표의 리스트업(list-up) 및 초기 설정

사회통합지표 영역에 대한 초기 설정과 더불어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사회지표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였다.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확보되고, 개념적으로 타당하며 이용 가능한 차원의 지표가 선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제시하는 지표가 실재하는지를 선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가 비교적 장기에 걸친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지표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사회정책 연구에서 활용하는 사회지표 데이터베이스에서 경제 수준, 정보통신 및 사회기반시설, 환경 영역과 연관된 지표를 제외하고 사회통합과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추출하였다. 지표의 추출은 각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2016년 2월부터 3월 기간 중에 실시하였다.⁷⁾

주요하게 살펴본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다. 삶의 질의 제반 영역을 다루고자 하는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 OECD 및 EU 국가의 민주주의, 선거 및 의회 시스템을 자료화한 Armingeon et al.(2015)의 비교정치데이터셋(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CPDS), 노조, 임금조정, 사회협약 등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한 Visser(2015)의 노동조합, 임금조정, 국가 개입 및 사회협약의 제도적 특성 데이터베이스(Data Base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rade Unions, Wage Setting,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Pacts: ICTWSS), 스웨덴 고텐버그 대학의 정부의 질 지표(The Quality of Government: QOG), OECD 및 EU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독일 베텔스만 재단이 서베이 조사를 통해 지수를 산출하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지수(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SGI), 진정한 사회진보 수준을 측정하겠다는 목표로 경제발전 지표를 제외한 53개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사회진보지수(Social Progress Index: SPI), 그리고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유엔 인간개발보고서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등을 검토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의 지표를 앞서 [그림 3-3]의 8개 정책 영역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재배치한 결과는 다음 <표 3-1>과 같다. 대체적으로 많은 지표들이 고용 상태 또는 고용을 조건으로 관련되는 지표에 해당하였다. 이에 비해 삶의 질 측정을 목표로 각 정책 차원별로 지표를 선정하고 있는 OECD의 BLI는 폭넓은 정책 차원에 지표를 배치하고 있었다.

7)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지표값으로 사용한 자료의 추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술하도록 한다.

〈표 3-1〉 주요 국제 데이터베이스별 사회지표 현황

구분	BLI	CPDS	ICTWSS	QOG	SGI	SPI	WDI	HDI	계
고용	5	7	193	59	4	0	66	0	334
소득/구매력	3	2	0	62	6	0	16	1	90
주거	6	0	0	12	2	11	6	0	37
건강과 사회적 보호	3	0	0	51	7	5	27	1	94
영양	0	0	0	0	0	2	1	0	3
교육	3	0	0	44	0	6	20	2	75
문화	0	0	0	4	0	5	0	0	9
정보/의사소통	0	0	0	19	9	6	3	0	37
기타	4	1	0	32	22	4	8	1	72
계	24	10	193	283	50	39	147	5	752

연구진은 선행 사회통합 관련 연구의 지표 체계를 참고하여 앞서 설명 하였던 바와 같이 사회통합을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 갈등 등 4개 하위 영역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 하고, 각 하위 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39개의 사회통 합 관련 지표를 선정하여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구진은 이들 지표를 별도로 영역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였으며, 선정된 지표와 지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표 3-2〉와 같다.

〈표 3-2〉 사회통합 지표 연구자 제안

지표	지표 설명
상대빈곤율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
심분위분배율	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10% 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 비율
장기실업률	실업자 중 실직기간이 1년 이상(또는 6개월 이상)인 실업자 비율
성별 임금 격차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
성별 고용률 격차	남성 고용률 대비 여성고용률의 비율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율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가 전체 피용자 중 차지하는 비율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고용보호지수: 임시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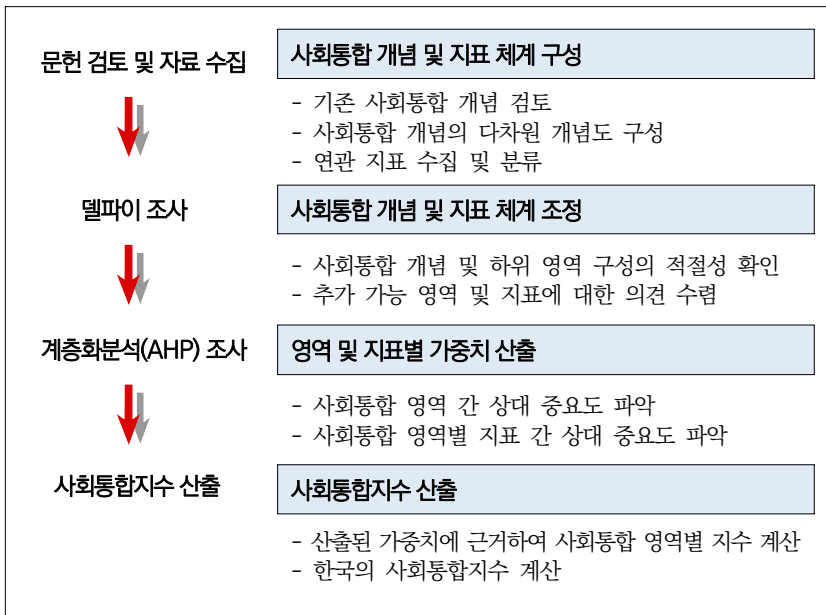
지표	지표 설명
주관적 삶의 만족도1	삶의 만족(2점 척도)
주관적 삶의 만족도2	삶의 만족(10점 척도)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된 건강상태(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1인당 GNI	1인당 국민총소득(GNI)
시민적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종교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적법절차의 적용의 권리
선거참여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자원봉사 참여율	인권 혹은 자선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평균 근로시간	평균 근로시간(여가시간의 대리변수)
단체참여	여덟 가지 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의 합(종교, 여가, 예체능 및 교육, 노동조합, 정당, 환경, 직능, 소비자단체)
시민참여	정치적 행동 여부의 합(서명, 보이콧, 시위)
일반신뢰	대인신뢰
국가자긍심	국가자긍심
관용	이웃으로서의 수용 여부의 합(약물중독자, 다른 인종, 에이즈 감염자, 이주 노동자, 동성연애자, 다른 종교인, 알코올 중독자, 비혼부부, 외국인)
사회규범	사회규범(자격 미달자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경우, 무임승차, 탈세, 뇌물수수, 동성연애, 성매매, 낙태, 이혼, 안락사, 자살, 가정폭력)
공교육지출	정부 총지출 중 교육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노동인구 중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	노동시장인구 중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
교육성취도	PISA 평균 점수
교육연수	성인의 평균 교육연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Expenditure) 지출 비율
학업중도탈락률	15~29세 NEET 비율
여성지도자비율	여성관리 전문가 비율
여성의석비율	국회 여성의석 비율
자살률	10만 명당 자살자수
이민자비율	인구 대비 외국인 이민자 비율
노인부양률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노사분규횟수	노사분규횟수
언론자유도	언론자유 점수(0:most free~100:least free)
부패인식	부패인식지수
정부효과성	정부효과성 지수
노조조직률	노조조직률
민주주의지수	민주주의지수(Quality of Democracy)

제2절 사회통합지수 개발 과정

1. 사회통합지수 개발 개요

앞서 본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보다 합의된 개념 정의와 지표 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진과 전문가 집단 간의 상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설계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전체적인 사회통합지수 개발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 사회통합지수 개발 과정



먼저 연구진은 기존의 사회통합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기존의 지표 체계들을 비교하고, 사회통합과 연관성이 높은 지표들을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앞서 [그림 3-4]와 같은 잠정적인 사회통합

개념 및 <표 3-2>와 같은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된 내용을 얻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온 기법이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앞서 구성한 사회통합지표 체계에서 선정된 사회통합의 정의, 하위 영역 구성, 영역의 개념 정의 등을 제시한 후, 이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제시된 영역과 지표 이외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과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수렴된 추가 제안 영역과 지표들에 근거하여 연구진이 구성했던 초안의 영역과 지표 체계를 조정 및 정비하고 수정된 안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영역별로 할당된 지표 중에서 5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 지표 체계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합의된 사회통합 하위 영역과 추출된 5개의 영역별 지표들의 상대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계층화분석(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AHP)을 실시하였다. AHP는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기법으로, 평가기준의 속성이 다양할 때 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다. AHP는 각 요소별, 대안별 선호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고,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판단을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연구진은 AHP를 통해 도출된 상대가중치를 적용하여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를 산출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조사 단계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조사

지표 체계 조정 및 가중치 산출을 위한 조사는 다음 <표 3-3>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표 3-3>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조사 일정

구분	조사 목적	조사 방법	시기
1차	사회통합 영역 및 지표 제안	델파이 조사	6월 중순
2차	사회통합 영역 및 지표 확정	델파이 조사	7월 초순
3차	사회통합 영역 및 영역별 지표의 상대중요도 파악	AHP	7월 말

델파이 조사 실시에서 전문가 선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전문성이나 직관, 경험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화된 자료로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리스트를 기초로 하여 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나 공공기관 근무자, 또는 지수 작성 경험이 있는 연구자나 공공기관 근무자 약 300여 명의 전문가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때 전공 및 관심 분야의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다양한 전공 분야와 소속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조사 설계 시 최종 목표 표본은 50명으로 정하였으며, 앞서 구축한 사회통합지수 전문가 리스트에서 사회통합 및 지수 구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부터 3차 조사까지를 완료한 응답자는 52명이다. 1차부터 3차까지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각 차수별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특성 및 조사 내용은 다음 <표 3-4>와 <표 3-5>와 같다.

〈표 3-4〉 조사 차수별 전문가 특성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대			전공				소속 기관		
	남	여	39세 이하	40대	50세 이상	사회 복지학	사회학	경제학	기타	대학	공공 기관	공공 연구소
1차	70.3	29.7	7.8	46.9	45.3	40.6	15.6	29.7	14.1	62.5	3.1	34.4
2차	71.4	28.6	8.9	46.4	44.6	39.3	12.5	32.1	16.1	60.7	1.8	37.5
3차	71.2	28.8	9.6	46.2	44.2	40.4	9.6	32.7	17.3	61.5	0.0	38.5

주: 1차 조사 응답자 수는 64명, 2차 조사는 56명, 3차 조사는 52명임.

〈표 3-5〉 델파이 조사 설문 내용

차수	설문 내용		
	폐쇄형	개방형	배경 변수
1차	- 사회통합 4개 영역의 적절성 평가 (5점 척도) - 제안 지표의 필요 정도(4점 척도) - 필요지표 적정 영역 할당	- 추가 필요 영역 제안 및 제안 이유 - 추가 필요 지표 제안 및 지표 설명	성별 연령 소속 기관 유형 전공
2차	- 조정된 영역의 적절성 평가(5점 척도) - 영역별 지표 선택	- 사회통합 영역 구분에 대한 전반적 의견	
3차	- 영역의 쌍대비교(9점 척도) - 영역별 지표의 쌍대비교(9점 척도)	- 해당 사항 없음	

제3절 사회통합 영역과 지표의 설정

1. 사회통합 영역 설정

1차 조사에서는 앞서 [그림 3-4]와 같이 연구진이 제안한 사회통합의 정의와 개념 구조(안)를 제시하고,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추가해야 할 영역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차 조사에서 사회통합 하위 영역의 적절성에 대해 ‘적절하다’(적절한 편이다+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은 사회적 포용이 90.6%, 사회적 자본이 82.8%, 사회이동이 87.5%, 그리고 사회갈등이 82.8%로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았다(〈표 3-7〉 참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 영역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편이었다. 사회적 포용과 사회이동이 사회통합의 주요 핵심 영역이라는 것에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 일치가 확인되지만, 그 외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한편 개방형 질문으로서 사회통합의 추가적 하위 영역에 대한 제안도 격차 및 불평등과 같이 사회적 포용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에 대한 내용이 다수였다. 반대로 사회적 자본은 연대, 관용(tolerance) 등으로 영역 내용을 수정하는 제안이, 사회갈등에 대해서도 사회소통, 이념갈등과 같은 제안이 있었다.

1차 조사를 통해 추가로 제안된 영역은 사회평등(불평등), 사회보장, 소득보장, 기초생활육구 충족, 가족, 사회적 차별 및 배제, 상호주의 시민의식, 관용, 기회보장, 지역갈등, 지역 격차, 세대갈등, 이념갈등, 사회소통 등이다. 연구진은 추가로 제안된 영역 중 기존 영역과의 관련성이 높은 영역은 기존 하위 영역이 포괄할 수 있도록 각 하위 영역의 개념을 확장하여 정의하고, 개념 간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사회갈등 영역의 경우 갈등관리의 내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갈등 및 관리’로 영역명을 조정하였다.

연구진이 제안한 영역과 전문가들이 추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영역 및 수정된 사회통합 영역은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사회통합 영역 조정 결과

연구진 제안 영역		전문가 추가 제안 영역		조정된 영역	영역 정의
사회적 포용	→	사회평등(불평등), 사회보장, 소득보장, 기초생활 욕구충족, 가족, 사회적 차별/배제	→	사회적 포용	사회구성원이 정치,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사회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인식, 상호주의 시민의식, 관용	→	사회적 자본	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와 관용, 귀속감의 주관적 인식 수준과 이타적 행위 수행, 선거 참여 등의 객관적 행위 수준으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사회이동	→	기회보장	→	사회이동	직업, 소득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조건 및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역량
사회갈등	→	지역갈등, 지역격차, 세대갈등, 이념갈등, 사회소통	→	사회갈등 및 관리	사회적 조건의 차이, 인식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는 갈등의 수준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

하위 영역의 개념을 재정의할 때 사회적 포용 영역의 경우 사회등(불평등), 사회보장, 소득보장, 기초생활욕구 충족, 가족, 사회적 차별 및 배제 등의 추가 제안 개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제도적 역량’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사회적 포용 개념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가 사회적 자본 영역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관계 요소를 제거하였다. 사회적 자본 영역의 경우 사회적 인식, 상호주의 시민의식, 관용 등 추가로 제안된 개념으로서 인식과 행위의지를 측정하는 영역으로 개념을 조정하였다. 사회이동은 기회보장뿐 아니라 결과 보장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이동의 조건과 결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념을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갈등 및 관리는

다양한 갈등과 격차, 이를 소통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표 3-7〉 사회통합 하위 영역의 적절성 평가 결과

영역	조사 차수	평균	표준편차	‘적절하다’ 응답 비율(%)
사회적 포용	1차	4.5	0.71	90.6
	2차	4.4	0.56	96.4
사회적 자본	1차	4.3	0.94	82.8
	2차	4.2	0.71	87.5
사회이동	1차	4.2	0.85	87.5
	2차	4.1	0.76	89.3
사회갈등	1차	4.2	0.90	82.8
사회갈등 및 관리	2차	4.1	0.62	87.5

주: 사회갈등은 2차 조사에서는 ‘사회갈등 및 관리’로 영역명을 변경하여 조사하였음.

2차 조사에서는 새롭게 정의된 사회통합 하위 영역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위 〈표 3-7〉과 같이 사회적 포용은 96.4%, 사회적 자본은 87.5%, 사회이동은 89.3%, 그리고 사회갈등 및 관리는 87.5%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1차 조사 때 제시된 영역의 개념 정의보다 적절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또한 56명 중 21명(37.5%)이 영역 구분이 대체로 적절하며 1차 조사 때보다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갈등 및 관리 영역의 개념은 다소 협소한데 반해 사회적 자본 영역의 개념은 광범위하다는 의견(예: ‘사회갈등은 거버넌스 영역을 포괄할 필요’, ‘사회적 자본은 현실적 포괄성을 추구하다 보니 이론적, 내적 일관성이 약화된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두 영역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2차 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자본의 정의에서 ‘귀속감의 주관적 인식 수준과 이타적 행위 수행, 선거 참여’ 내

용을 제거하고 대신 ‘참여로 표출되는’으로 대체하였다. 사회갈등 및 관리 영역은 지표 체계 내에서 이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하고, 영역명을 사회갈등과 관리로 변경하였다. 1차, 2차 조사 과정에서 수정한 각 영역의 개념 정의 내용은 <표 3-8>에 정리하였다.

<표 3-8> 사회통합 영역 구성 및 조사 차수별 개념적 정의 조정 내용

초안(연구진 제안)	조정안	최종안
사회적 포용		
사회구성원이 시민권을 실현하고 있는 정도, 사람들이 노동시장과 다양한 사회제도를 통해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정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정해식 등, 2014, pp.113-114).	사회구성원이 정치,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사회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	사회구성원이 사회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
사회적 자본		
순수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와 ‘네트워크’뿐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등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이타주의, 관용 등 ‘통합적 규범과 가치’를 포함(정해식 등, 2014, pp.115-116).	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와 관용, 귀속감의 주관적 인식 수준과 이타적 행위 수행, 선거참여 등의 객관적 행위 수준으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 및 관용의 정도, 참여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사회이동		
사회 내에서 지위를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그 자체로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며, 자원 할당의 형평성을 제고(여유진·정해식 등, 2015, pp.13-14).	직업, 소득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조건 및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역량	
사회갈등	사회갈등 및 관리	사회갈등과 관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수렴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거버넌스와 확립(김미곤 등, 2014, p.36). 갈등의 양태, 수준과 갈등관리의 수준을 동시에 고려함.	사회적 조건의 차이, 인식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는 갈등의 수준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	사회적 조건, 인식 수준에서 확인되는 갈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

2. 사회통합 영역별 지표 설정

연구진은 주요 국제 사회지표 세트를 기준으로 사회통합 관련 지표 39개를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에게 제안 설명하고, 사회통합지표로서의 적절성과 해당 지표가 어느 하위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해당 지표가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0% 이상인 지표가 12개, 80% 이상인 지표가 9개, 70% 이상인 지표가 7개, 60% 이상인 지표가 6개, 60% 아래인 지표가 5개로 대체로 사회통합 측정에 필요한 지표가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진은 1차 조사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지표의 방향성, 또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지표, 하위 영역의 개념을 재정의 하는 과정에서 정리 된 개념과 연관있는 지표들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교육성취도와 노동인구 중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은 필요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2차 조사에서 교육불평등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포함시켰다.

〈표 3-9〉 사회통합 관련 지표 적절성 및 해당 하위 영역-1차 조사 결과

지표	필요함 (%)	평균	표준 편차	하위 영역 제안	
				1순위	2순위
상대빈곤율	98.4	3.8	0.43	사회이동	사회적 포용
십분위분배율	96.9	3.7	0.53	사회이동	사회갈등
장기실업률	90.6	3.5	0.67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
성별 임금격차	100.0	3.7	0.47	사회갈등	사회적 포용
성별 고용률격차	96.9	3.6	0.56	사회적 포용	사회갈등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70.3	2.9	0.76	사회적 포용	사회갈등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84.4	3.2	0.69	사회적 포용	사회갈등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96.9	3.5	0.56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
주관적 삶의 만족도1	50.0	2.6	0.79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주관적 삶의 만족도2	82.8	3.1	0.72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지표	필요함 (%)	평균	표준 편차	하위 영역 제안	
				1순위	2순위
주관적 건강상태	62.5	2.7	0.70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1인당 GNI	62.5	2.7	0.70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포용
시민적 자유	95.3	3.5	0.59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선거참여	84.4	3.2	0.71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자원봉사 참여율	65.6	2.9	0.80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평균 근로시간	76.6	3.0	0.71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단체참여	84.4	3.0	0.65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시민참여	85.9	3.2	0.76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일반신뢰	87.5	3.4	0.79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국가자긍심	70.3	2.9	0.89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관용	93.8	3.5	0.62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사회규범	93.8	3.4	0.61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공교육지출	87.5	3.3	0.71	사회이동	사회적 포용
노동인구 중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	45.3	2.5	0.76	사회이동	사회적 자본
교육성취도	45.3	2.4	0.79	사회이동	사회적 자본
교육연수	50.0	2.5	0.73	사회이동	사회적 자본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79.7	3.0	0.70	사회이동	사회적 포용
학업중도탈락률	65.6	2.9	0.90	사회이동	사회적 포용
여성지도자 비율	79.7	3.1	0.77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
여성의석 비율	71.9	3.0	0.82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갈등
자살률	93.8	3.5	0.62	사회갈등	사회적 포용
이민자비율	65.6	2.8	0.81	사회적 포용	사회갈등
노인부양률	59.4	2.7	0.87	사회적 포용	사회갈등
노사분규횟수	65.6	2.9	0.81	사회갈등	
언론자유도	89.1	3.4	0.73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
부패인식	95.3	3.6	0.64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
정부효과성	82.8	3.2	0.72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
노조조직률	76.6	3.0	0.79	사회갈등	사회적 포용
민주주의지수	92.2	3.5	0.69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

주: ①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매우 적절하다는 5점 척도임.

1차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시된 39개 지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지표를 제안하도록 하였다. 추가로 제안된 지표들은 ‘세대 간·계층 간 소

득, 직업, 교육이동성', 노동소득분배율, 청년실업률 또는 니트(NEET) 비율, 자산분배지수, 성불평등지수, '조세 또는 사회보험금 인식', 다문화 가구수, 아동빈곤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기관실패, 비정규직/정규직 간 급여 격차 등이다. 제안된 지표 중에서 생산이 쉽지 않은 것(예: 소득, 직업, 교육이동성 관련 지표, 자산분배지수), 주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지표(예: 조세 또는 사회보험금 인식)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렇지만 기존 지표와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지표(예: 성불평등지수)는 기존 지표를 재구성하여 포함하였다. 이 외에 지표 등의 문제가 없고 재조정된 사회통합 하위 영역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지표들을 추가하여 2차 조사에 반영할 지표 체계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1차 조사 후 조정된 지표는 <표 3-10>과 같다. 총 33개의 지표를 2차 조사에서 활용하였다.

<표 3-10> 1차 조사 후 조정된 지표

삭제된 지표	추가된 지표	재구성된 지표
교육연수 주관적 삶의 만족도1 주관적 삶의 만족도2 노인부양률 1인당 GNI 주관적 건강상태 자원봉사 참여율 평균 근로시간	- 청년니트(NEET) 비율 - 기관실패 -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 - 노동소득분배율	- 성별 격차=(성별 임금 격차+성별 고용률 격차)/2 - 여성의 사회진출=(여성지도자 비율+여성의석비율)/2 - 노인인구 중 고등학교(←중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

한편 1차 조사에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 지표가 어느 하위 영역을 나타내는지를 제안하도록 하였다(<표 3-9>의 하위 영역 제안). 연구진은 전문가 조사를 반영하여 해당 지표를 각 하위 영역으로 할당하였다. 이때 제안된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 이를 중복되는 하위 영역 모두에 포함시켜 해당 영역에서 해당 지표의 우선순위를 묻는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영역별로 할당된 지표와 그에 대한 설명은 <표 3-11>에 정리하였다.

〈표 3-11〉 사회통합 관련 지표의 영역 구분-2차 조사

영역	제안 지표	지표 설명
사회적 포용	(1) 상대빈곤율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
	(2) 장기실업률☆	실업자 중 실직기간이 1년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인 실업자 비율
	(3) 성별 격차	(성별 임금 격차+성별 고용률 격차)/2
	(4)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지도자비율+여성의석비율)/2
	(5)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율
	(6)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가 전체 피용자 중 차지하는 비율
	(7)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고용보호지수: 임시고용
	(8) 이민자비율	인구 대비 외국인 이민자 비율
	(9) 청년니트(NEET)비율★	청년 중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 비율
사회적 자본	(1) 시민적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종교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적법절차의 적용의 권리
	(2) 선거참여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3) 단체참여	여덟 가지 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의 합(종교, 여가, 예체능 및 교육, 노동조합, 정당, 환경, 직능, 소비자 단체)
	(4) 시민참여	정치적 행동 여부의 합(서명, 보이콧, 시위)
	(5) 일반신뢰	대인신뢰
	(6) 기관신뢰★	기관별 신뢰의 합(종교단체, 군대, 신문, 텔레비전, 노동조합, 경찰, 법원, 중앙정부, 정당, 의회, 공무원, 대학, 대기업, 은행, 환경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인권/자선단체)
	(7) 국가자긍심	국가자긍심
	(8) 관용	이웃으로서의 수용 여부의 합(약물중독자, 다른 인종, 에이즈 감염자, 이주 노동자, 동성연애자, 다른 종교인, 알코올 중독자, 비혼부부, 외국인)
	(9) 사회규범	사회규범(자격 미달자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경우, 무임승차, 탈세, 뇌물수수, 동성연애, 성매매, 낙태, 이혼, 안락사, 자살, 가정폭력)
	(10) 언론자유도☆	언론자유 점수
	(11) 부패인식☆	부패인식지수
	(12) 정부효과성☆	정부효과성지수
	(13) 민주주의지수☆	민주주의지수

영역	제안 지표	지표 설명
사회이동	(1) 십분위분배율☆	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10% 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 비율
	(2) 장기실업률☆	실업자 중 실직기간이 1년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인 실업자 비율
	(3) 공교육지출	정부 총지출 중 교육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4) 노동인구 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	노동시장인구 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 ※ 기존 '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수정
	(5) 교육성취도	PISA 평균 점수
	(6)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율
	(7) 학업중도탈락률	15~29세 NEET 비율
사회갈등 및 관리	(1) 십분위분배율☆	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10% 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 비율
	(2) 자살률	10만 명당 자살자 수
	(3) 노사분규횟수	노사분규횟수
	(4) 부패인식☆	부패인식지수
	(5) 정부효과성☆	정부효과성지수
	(6) 언론자유도☆	언론자유 점수
	(7) 노조조직률	노조조직률
	(8) 민주주의지수☆	민주주의지수
	(9)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급여 격차
	(10) 노동소득 분배율★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주: ☆는 영역별 중복된 지표이고, ★는 1차 조사에서 전문가에 의해 추가로 제안된 지표임.

영역별 대표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2차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순위가중치를 고려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영역별 대표 지표를 <표 3-12>와 같이 선정하였다. 단, 계산한 값이 동일한 지표가 있을 경우 1순위로 선택된 응답 비중이 높은 지표를 선정하였다. 순위가중치 산식은 다음과 같다.

$$\{(1\text{순위} \times 5) + (2\text{순위} \times 4) + (3\text{순위} \times 3) + (4\text{순위} \times 2) + (5\text{순위} \times 1)\}$$

〈표 3-12〉 하위 영역별 지표 순위가중치

영역	지표	순위가중치 응답수	비율 (/56×5)	1순위 선택 %
사회적 포용	(1) 상대빈곤율	224	80.0%	73.2
	(2) 장기실업률☆	46	16.4%	1.8
	(3) 성별 격차	142	50.7%	5.4
	(4) 여성의 사회진출	50	17.9%	3.6
	(5)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GDP 대비)	64	22.9%	1.8
	(6)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92	32.9%	1.8
	(7)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136	48.6%	10.7
	(8) 이민자비율	47	16.8%	0
	(9) 청년니트(NEET)비율(신규 제안)	39	13.9%	1.8
사회적 자본	(1) 시민적 자유	157	56.1%	35.7
	(2) 선거참여	72	25.7%	3.6
	(3) 단체참여	44	15.7%	5.4
	(4) 시민참여	100	35.7%	5.4
	(5) 일반신평	128	45.7%	21.4
	(6) 기관신평(신규 제안)	85	30.4%	7.1
	(7) 국가자공심	13	4.6%	0
	(8) 관용	105	37.5%	5.4
	(9) 사회규범	52	18.6%	8.9
	(10) 언론자유도☆	22	7.9%	1.8
	(11) 부패인식☆	37	13.2%	1.8
	(12) 정부효과성☆	12	4.3%	1.8
	(13) 민주주의지수☆	13	4.6%	1.8
사회 이동	(1) 십분위분배율☆	124	44.3%	30.4
	(2) 장기실업률☆	90	32.1%	14.3
	(3) 공교육지출	203	72.5%	35.7
	(4) 노동인구 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비율	86	30.7%	3.6
	(5) 교육성취도	112	40.0%	8.9
	(6)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지출	129	46.1%	3.6
	(7) 학업중도탈락률	96	34.3%	3.6
사회 갈등과 관리	(1) 십분위분배율☆	47	16.8%	10.7
	(2) 자살률	136	48.6%	23.2
	(3) 노사분규횟수	114	40.7%	10.7
	(4) 부패인식☆	73	26.1% ¹⁾	7.1
	(5) 정부효과성☆	63	22.5%	3.6
	(6) 언론자유도☆	71	25.4%	3.6
	(7) 노조조직률	70	25.0%	8.9
	(8) 민주주의지수☆	112	40.0%	19.6
	(9)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신규 제안)	81	28.9%	1.8
	(10) 노동소득분배율(신규 제안)	73	26.1% ¹⁾	10.7

주: 1)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서 5순위 동점을 보인 '노동소득분배율'과 '부패인식'은 1순위 선택 응답 비중을 고려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선택함.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된 영역과 지표는 다음 <표 3-13>과 같다.

<표 3-13> 최종 확정된 사회통합 영역별 지표

하위 영역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개 념 정 의	사회구성원이 사회 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	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 및 관용의 정도, 참여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직업, 소득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조건 및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역량	사회적 조건, 인식 수준에서 확인되는 갈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
최 종 지 표	• 상대빈곤율 • 성별 격차 •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 시민적 자유 • 일반신뢰 • 관용 • 시민참여 • 기관신뢰	• 공교육지출 •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 심분위분배율 • 교육성취도 • 학업중도탈락률	• 자살률 • 노사분규횟수¹⁾ • 민주주의지수 • 비정규직/정규직 급여격차²⁾ • 노동소득분배율

주: 1) 최종 지수 산출 과정에서 노사분규횟수는 지표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음.

2) '비정규직/정규직 급여격차'는 지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확률'(low pay incidence)로 대체하였음.

3. 사회통합 영역 및 영역별 지표의 가중치 설정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과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진은 AHP 조사를 수행하였다. 전문가 대상의 조사는 앞서 실시된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회통합 영역과 지표들을 이용하여 각각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또 어느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쌍대비교 질문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요소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 대상자의 판단이 얼마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계산하여 CI가 0.1보다 작은 경우 상대가중치 계산에서 제거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3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모든 쌍대비교 행렬로부터 고유치 계산을 통하여 요소의 최종 중요도(priority)를 산출하였다.⁸⁾

AHP 결과를 살펴보면(〈표 3-14〉 참조) 4개의 하위 영역 중 사회적 포용의 중요도(.338)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사회이동(.283), 사회갈등과 관리(.199), 사회적 자본(.181) 순이었다. 앞서 1차 조사에서부터 하위 영역의 적절성이 높았던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개별 영역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지표는 사회적 포용 영역에서는 상대빈곤율,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는 시민적 자유, 사회이동 영역에서는 공교육지출,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서는 민주주의 지수였다.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서 중요 지표로 자살률을 제시하였던 전문가가 많았으나, 쌍대비교에서는 민주주의지수가 중요하다는 평가를 보였다. 개별 영역 내에서 선정된 5개의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지표는 상대빈곤율(.289)이었으며, 그다음이 비정규직의 고용보호(.244), 공교육지출(.256) 순이었다. 노사분규횟수와 기관신뢰, 시민참여 등의 지표는 선정된 지표들 중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표 3-14〉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의의 가중치와 지표의 특징을 이용한 수리적 가중치를 비교해 보았다. 〈표 3-14〉의 수리적 가중치는 영역 내 지표가 가지는 공통성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⁹⁾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가중치 도출은 개별 영역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개별 영역 내에서 지표 간 쌍대비교를 실시한 AHP에 따른 가중치와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전문가들의

8) 〈표 3-1〉의 AHP에 의한 가중치 ver.1은 전체 20개 지표를 포함한 버전인 반면, ver.2는 결측치가 많은 지표 노사분규횟수를 제외한 19개 지표로 구성한 버전이다.

9)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가중치 도출에 대해서는 Nicoletti(2000)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전해가 반영된 가중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중치는 수리적 가중치와 일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른 경향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사회적 포용 영역의 상대빈곤율이다. 이 지표의 수리적 가중치는 .171에 불과하지만, AHP 가중치는 .289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었다.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같은 사회적 포용 영역에서도 비정규직의 고용보호와 같은 지표에 대한 가중치는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의 영역에서는 수리적 가중치와 AHP를 통해 산출한 가중치 간의 다른 양상이 두드러지지만,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서는 둘 간의 일치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둘 간의 일치도가 높다는 것은 각 지표가 보여 주는 양상과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양상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조사를 이용한 가중치를 반영한 비교 결과를 해석할 때는 사회통합에 대한 주관적 가치체계를 반영하여 도출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표는 현재 한국의 사회적 현상을 가장 적실히 드러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수리적으로 도출한 가중치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표 3-14〉 사회통합 영역별, 각 지표별 가중치(사례 수=34)

영역	영역 가중치	지표	기능	수리적 가중치		AHP 가중치		AHP 순위
				제1성분	제2성분	AHP		
						ver.1	ver.2	
사회적 포용	.338	상대빈곤율	-	.171		.289	.289	1
		성별 격차	-	.235		.164	.164	7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		.253	.244	.244	2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	.115		.170	.170	6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		.227	.133	.133	13
사회적 자본	.181	시민적 자유	+	.174		.250	.250	12
		일반신회	+	.227		.202	.202	15
		관용	+	.199		.206	.206	14
		시민참여	+	.171		.180	.180	18
		기관신회	+	.229		.162	.162	19
사회이동	.283	공교육지출	+	.176		.256	.256	3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	.228		.216	.216	5
		심분위분배율	-	.149		.239	.239	4
		교육성취도	+		.230	.123	.123	17
		학업중도탈락률	-		.217	.166	.166	10
사회갈등과 관리	.199	자살률	-	.119		.180	.186	16
		노사분규횟수	-			.111		20
		민주주의지수	+	.207		.239	.270	8
		비정규직/정규직 급여격차	-	.253		.232	.269	11
		노동소득분배율	+		.420	.237	.275	9

제4절 사회통합지표 측정

4절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확정된 각 지표의 현재 시점에서의 의미와 측정 방법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1. 자료 처리 원칙

가. 관측 연도의 설정

사회통합지수의 산출 과정에서는 측정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통합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회조사를 통해 사회지표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조사, 고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지표는 비교적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 기간이 짧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임을 판단하되, 동시에 측정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해서 살펴봐야 한다.

본 연구진은 이를 위해 기존에 활용하였던 지표에서 시계열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를 정리한 바 있다. 그리고 최종 확정된 지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였다. 여러 영역 중에서 사회적 포용 영역은 비교적 장기에 걸친 측정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득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빈곤율의 경우에는 결측이 있다. 주로 국제사회조사를 활용하는 사회적 자본의 영역은 사회조사가 이뤄진 시점의 자료만 존재한다. 특히 사회조사가 모듈(module)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결측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조사를 이용한 측정치를 지표로 포함하고 있는 사회

통합지수 산출에서는 특정 시점별로 지수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그 이후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2015년의 5개 시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나. 결측치의 처리

사회조사 자료를 포함하는 국제 비교 자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특정 시기, 특정 국가의 관측치가 결측인 경우이다. 본 연구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5개 시점을 관측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런데 각 관측 연도에 결측인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추정하고, 여러 방법을 적용한 이후에도 추정이 어려운 국가의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인접 연도의 관측치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측정에서 결측이 있을 경우 2009년 또는 2011년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전 근접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고, 이후 근접 연도의 자료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 관측치에 결측이 있지만, 1999년과 2001년 관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1999년 관측치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원인 조건이 선행하는, 즉 특정 사회적 조건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후에 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결측된 해의 값을 추정한다. 보통 특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값이 결측인 경우에 이를 활용한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각종 서베이 자료의 경우에는 두 측정 기간 사이에 분석 시점에 있는 경우에 계단함수를 이용하고, 시간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선형함수를 이용한다. 즉 빈곤율 지표와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측정 기간 사이에서 산술평균한 형태로 이동한다고 본다. 반대로 성별 임금 격차, 고용률, 각종 사회지출과 같은 지표는 선형함수의 형태로 이동한다고 본다. 이러한 지표는 대체로 사회발전의 양상에 따라 선형 변화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측치 추정 방법은 조병구 등(2015)이 사용한 방식과 방법론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GDP 대비 사회지출과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GDP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하게 되는 경우 선형 추세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상당한 기간이 모두 결측인 경우에는 이후 기간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이는 빈곤율, 사회적 자본 영역의 지표 등에서만 제한적으로만 활용하였다. 강신욱 등(2012, pp.68-69)에서는 비교 시점을 지나서 관측 자료가 확인될 경우에는 나머지 비교 시점의 관측치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개 시점을 분석 대상으로 하지만, 관측 자료가 확인된 모든 연도의 자료를 먼저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후 시점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칠레, 한국의 빈곤율은 2005년, 2010년, 2015년에 해당하는 관측치값만을 사용 가능한데, 1995년과 2000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영역별 지표의 의미와 그 측정을 둘러싼 주요한 자료 처리 방식을 서술한다.

2. 지표의 의의 및 측정

가. 사회적 포용 영역

1) 빈곤율

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는 데는 가장 먼저 구성원들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살피게 된다. 이때 필요한 자원 중 소득과 재산에 우선 관심을 가진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또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관점에서 소득과 재산을 다룬다.

이때 한 사회를 총량적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개인 단위로 접근할 수 있다. 총량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1인당 GDP, 가구 가처분소득을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단위로 접근하는 것은 각 사회가 정한 기준에 미흡한 개인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으로, 빈곤율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총량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는 가구 순가처분소득을 비교하는 것이다. OECD(2011, p.39)는 삶의 질 측정을 목적으로 가구 순가처분소득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이때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구총소득에 정부로부터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더하고,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값이다. 1인당 GDP와 비교하였을 때, 1인당 가구 순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실질적 차원에서 1인당 가구 순가처분소득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구의 본원소득 자체가 줄어들거나, 조세 및 사회적 수혜(social benefits)를 이용한 재분배 정책의 변화,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방식 등에서의 변화가 1인당 GDP와 가구의 가처분소득 간의 간극을 넓히고 있다(OECD, 2011, p.43). 또 다른 방법의 하나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 논의의 소득 충분성(income sufficiency) 개념이다. 이는 의식주 및 보건의료의 영역을 필수 지출 영역으로 보고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하는 방식이다(정해식, 2012, p.76).¹⁰⁾

개인 단위로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대표적으로 빈곤율을 예로 들 수 있다. 빈곤의 측정 방법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여유진 등, 2005, pp.63-64). 절대적 빈곤은 흔히 한 사회가 규정한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은 정해진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보통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소득을 보이는 가구의 가구원이 빈곤한 것으로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빈곤은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OECD(2011, p.48)는 소득과 생활조건 조사(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 EU-SILC) 자료를 활용하여 주관적 빈곤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빈곤율이 사회통합의 한 요소가 되는 이유는 전체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의 수준을 확보할 기본적 능력의 결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규모는 물질적인 것 외에도 여러 삶의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영역이다(OECD, 2011, p.41). 그러므로 빈곤은 빈곤인구 규모와 빈곤 심도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를 빈곤율로 표현하며, 후자를 빈곤갭으로 표현한다.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의 국가 간 비교는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에

10) 그러나 이러한 측정을 다수의 비교 대상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서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과 같이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에서부터, 가구의 정의, 소득의 측정 기간, 한 사회의 빈곤율을 계산하기 위한 균등화 지수 등에서 쟁점이 존재한다.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득조사 자료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uxembourg Income Study)와 OECD의 IDD(Income Distribution Database)이다. IDD는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값을 함께 제공하거나, 새로운 기준에 따른 값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1년까지의 자료는 2011년 버전으로, 2012년 이후의 자료는 2012년 버전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로 한다. 이러한 소득 기준의 변경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자가소비를 위한(goods produced for own consumption) 소득을 자영소득(income from self-employment)에 포함하는 것이다(Canberra Group, 2011, pp.32-34). 저소득 자영농업 종사자가 많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 OECD 국가로 한정하면 멕시코, 터키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의 변경에 따라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OECD(2016a)의 IDD 자료는 EU 국가들의 경우 EU-SILC를 사용함에 따라 자료 사용 기간에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대체의 방법¹¹⁾을 활용하기 이전에 일정 수준 비교의 가능성을 확보한 경우 관련 자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OECD IDD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LIS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¹²⁾

한국의 경우 OECD에 보고하고 있는 소득조사는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계동향조사의 도시 2인 이

11) 본 보고서의 95페이지, 결측치 처리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3장 4절 나).

12) 해당 국가와 측정 연도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1995년, 2000년, 에스토니아 2000년, 아일랜드 1995년, 2000년, 폴란드 1995년, 2000년, 슬로바키아 1995년, 슬로베니아 1995년, 2000년, 스페인 1995년, 2000년, 스위스 1995년이다.

상 조사 자료를 1990년도부터 확보할 수 있으나, 이는 전체 국민의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국 및 이와 유사하게 자료가 구성된 국가의 경우 이후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결측 연도의 추정값을 추정하여 사용한다.¹³⁾ 마지막으로 관측 기간의 결측은 있으나, 이전 이후 추정 연도에 추정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간의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사용한다.¹⁴⁾

2) 성별 격차

사회적 포용의 영역에서는 빈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젊은 세대와 노인과 같이 특정한 집단의 사회적 권리 실현 정도에 주목한다. 이러한 사회적 권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남성과 여성의 격차, 즉 성별 격차이다.

성별 격차는 경제적 보상의 차이를 의미하는 임금격차, 대표권의 차이로서 의회 의석의 여성 비율 또는 고위관리자 여성 비율, 경제적 활동의 지지기반 차이를 의미하는 고용률격차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로 측정하는 성별 임금격차는 각 사회의 돌봄에 대한 역할과 보육 체계에 따라서 달라지며, 또한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정해식, 2012, p.101).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업종에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경우 성별 임금 격차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별 격차는 임금격차와 고용률격차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성별 격차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의 정

13) 해당 국가와 측정 연도는 다음과 같다. 칠레 1995년, 2000년, 에스토니아 1995년, 아일랜드 1995년, 2000년, 한국 1995년, 2000년, 라트비아 1995년, 2000년, 포르투갈 1995년, 2000년, 슬로바키아 2000년이다.

14) 터키의 2000년 추정치가 이에 해당한다.

규화 과정을 더 거쳤다. 즉 원자료로서 성별 임금 격차와 성별 고용률격차를 각각 최소-최대 정규화를 통해 표준화 후, 이를 평균하였다.

성별 임금격차는 OECD(2016b)의 고용과 노동시장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소득'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남성 중위임금 대비 여성 중위임금의 차이로 계산된 값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원자료에서 관측 연도에 결측이 있다.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에는 결측치를 추세회귀 방식을 이용하여 과거 또는 근래의 값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른 지표와는 달리 추세회귀를 사용한 것은 성별 격차와 같이 한 사회의 발전 정도와 그 맥락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¹⁵⁾¹⁶⁾¹⁷⁾

성별 고용률격차는 ILO(2016a)의 성·연령별 고용률 값 중에서 25세 이상 남녀 고용률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ILO의 추정을 포함하는 자료로 결측이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3)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노인을 위한 공적사회지출은 OECD(2016c)의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사회지출은 그 재원에 따라서 공적사회지출 외에도 법정

-
- 15) 이에 따라 추정된 값을 사용하는 국가와 해당하는 관측 연도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1995년, 덴마크 1995년, 2000년, 2005년, 에스토니아 1995년, 2015년, 그리스 1995년, 2000년, 아이슬란드 1995년, 2000년, 이스라엘 1995년, 2015년, 라트비아 1995년, 2015년, 멕시코 1995년, 2000년, 네덜란드 1995년, 2015년, 포르투갈 1995년, 2000년, 슬로바키아 1995년, 스페인 1995년, 2000년, 영국 1995년이다.
- 16) 칠레는 추세회귀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 성별 격차가 부(-)의 값을 보인다. 즉 여성의 급여 수준이 남성보다 높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는 가장 오래된 측정치인 2006년의 값이 이전 관측 연도에도 모두 같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룩셈부르크(2015년)에도 적용하였다.
- 17) 슬로베니아, 터키는 2010년 측정치만 존재한다. 2015년 관측 연도에도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전 관측 연도는 결측으로 하였다.

민간사회지출, 자발적 민간사회지출을 포함할 수 있다. 노인이 사회의 각종 경제적 지원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든 재원의 노인 사회지출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념을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적 차원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극단적으로 자녀세대로부터 이뤄지는 사적 이전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공식적인 제도 장치를 이용한 노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공적사회지출로 한정한다.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자료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990년부터 최근 연도까지 생산,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은 과거 시점의 자료가 결측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관측 연도의 최근접 연도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결측치를 대체하였다.¹⁸⁾

4)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자,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다. 노동시장 접근성 측면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장기실업률과 비자발적 비정규직 고용이 있다. 이 중 장기실업률은 강신욱 등(2005, p.116), 정해식(2012, p.102)에서도 사회적 배제 또는 사회적 포용성 측정 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비자발적 비정규직, 특히 비자발적 임시근로자의 비율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사용을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지표는 각종 사회적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18) 이에 따라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관측치가 중복되기도 한다. 에스토니아, 헝가리는 1999년 측정치를 1995년 자료로 활용함.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더 적절하게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은 OECD(2016d)의 노동시장 통계에서 전체 임시근로자(part-time employment) 중에서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통계청(2016)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서 ‘비자발적 사유’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사용하였다.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은 관측 연도에 결측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관측 연도와 가장 가까운 연도의 측정치로 대체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의 경우는 서로 다른 관측 연도에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처리하였다.¹⁹⁾

해당 지표에서 칠레와 멕시코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이스라엘은 해당 값을 가지고 있으나, 결측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서는 해당 국가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5) 비정규직 고용보호

노동시장의 포용성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문제는 유연성과 관계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여러 사람이 노동할 기회를 가지며, 또한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고용보호입법(Th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은 높은 국가에서는 낮아지고, 낮은 국가에서는 높아지면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노동시장의 규제 개혁이

19) 이에 따라 추정된 값을 사용하는 국가와 해당하는 관측 연도는 다음과 같다. 에스토니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1995년, 2000년, 폴란드 1995년, 슬로베니아, 터키 1995년, 2000년이다.

OECD 국가들 내에서 불평등을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OECD 2015a, p.87). 기간제 피용인, 대규모 해고자는 인력 재배치 기간 중에 소득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OECD, 2015b, p.43). 이런 이유로 고용보호의 정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따라 사회의 질(SQ) 논의에서는 고용보호를 그 경직성(보호의 정도)에 주목하기보다는 해고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전에 대처할 여지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에 더 주목하였다(정해식, 2012, p83). 그러나 이는 개념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며, 실제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 비정규직 고용보호는 OECD(2016e)의 고용보호 입법지수 자료에서 임시고용보호지수(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temporary employment: EPT) 중 버전1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버전1과 버전3의 자료는 전자는 6개(기간제 고용 허용 범위, 기간제 고용 최대 허용 횟수, 기간제 고용 최장 누적 허용기간, 파견고용 허용 범위, 파견고용 계약 반복의 제한, 파견고용 최장 누적 허용 기간)의 아이টে므로, 후자는 이에 2개의 아이템(파견고용 허가 및 보고 필요성, 정규직과의 동등대우 보장)을 더한 8개의 아이টে므로 이뤄진다(김준, 2015; OECD, 2014a). 버전1의 자료가 더 장기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관측 연도에 결측이 존재하여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체적으로 고용보호의 정도가 측정치가 있기 이전에는 동일하다고 보고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²⁰⁾

20) 이에 해당하는 국가 및 관측 연도는 칠레,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슬로베니아의 1995년, 2000년, 2005년이다.

나. 사회적 자본 영역

1) 시민적 자유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는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종교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적법절차의 적용의 권리가 실현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시민적 자유의 정도에 대한 측정은 2개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에서 생산하는 자료이며, 다른 하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서 생산하는 자료이다.

EIU에서 생산하는 자료는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의 5개 하위 범주(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 문화, 시민적 자유) 중 하나이며, 0점부터 10점의 점수로 평가한다. 2014년 기준으로는 모두 17개의 점점 항목²¹⁾을 통해 계산한다. 전반적인 민주주의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의 순서였다(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 EIU가 생산하는 민주주의지수의 하위 범주 항목은 2006년, 2008년, 2010~2014년의 자료가 있으며, QOG(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Freedom in the World'라는 자료를 지난 11년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은 각 국가 및 지역 권역의 자유의 정도를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의 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수 계산에서는 정치적 자유에 40%,

21) 예를 들어 'Q48. 인터넷에 접속하는 데 정치적 제약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없다=1, 약간의 제약이 있다=.5, 있다=0"의 점수를 부여한다(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 p.47).

시민적 자유에 6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25개 지표(정치적 자유 10개, 시민적 자유 15개)에 대해 0점부터 4점의 점수 평가를 실시하며, 총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Freedom House, 2016, p.2).²²⁾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는 1점(most free)부터 7점(least free)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점수는 각각 40점, 60점을 최댓값으로 하여 공개하고 있다.²³⁾ 세부적인 점수는 2003년부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적 자유는 프리덤하우스의 2003년 이후 제공 자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1990년 이후 제공 자료를 활용한다. 즉 2003년 이후 원점수를 활용하되, 이전 관측 연도에 대한 추정에서 구분점수가 차이 나지 않는 경우는 이를 그대로 활용하고, 차이 나는 경우는 구분 구간의 최대 점수를 부여한다.²⁴⁾²⁵⁾

2) 사회참여, 일반신뢰, 기관신뢰, 관용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내용의 해당 항목은 WVS 및 EVS의 설문조사 항목을 이용하여 해당 값을 산출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영역에 서는 각종 서베이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특정 측정 연

22) 시민적 자유 영역은 세부적으로 표현과 신념의 자유(4개 문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3개 문항), 법치주의(4개 문항), 개인의 자율성 및 개인적 권리(4개 문항)에 대해 묻는다. (프리덤하우스, 방법론 가이드 참조: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6/methodology>)

23) 원점수 53-60은 1점, 44-52는 2점, 35-43은 3점, 26-34는 4점, 17-25는 5점, 8-16은 6점, 0-7은 7점으로 구분한다.

24) 예를 들어 벨기에는 2003년 측정점수가 56점, 구분점수가 1점이었지만, 1995년 관측 연도에는 측정점수는 제공되지 않았고, 구분점수는 2점이었다. 이에 따라 2점 구분점수 구간의 최대 점수 52점을 부여하였다.

25) 이에 따른 수정이 이뤄진 국가 및 관측 연도는 벨기에 1995년, 칠레,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 1995년, 2000년, 슬로바키아 1995년이다.

도에 따라서는 결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2차 자료의 경우에는 여러 사회조사를 종합하고, 자체적인 추정 방법에 의해 추정값을 생성한다. 대표적인 2차 자료로 사회발전지수(Indices of Social Development: ISD)가 있다.²⁶⁾ 사회발전지수는 하위 범주로 시민참여(Civic Activism), 단체참여(Clubs and Associations), 집단 간 통합(Intergroup Cohesion), 대인신뢰 및 안전(interpersonal safety and trust), 성평등(Gender Equality), 소수자 포용(Inclusion of Minorities)의 6개를 두고 있다(강신욱 등, 2012, p.77).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일반신뢰, 관용의 경우에는 ISD 자료를 활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기관신뢰에 대해서는 WVS 및 EVS의 자료를 활용한다.

첫째, 사회참여는 서명, 평화로운 시위, 공공활동에 관한 연구모임에 참여하거나, 언론 정보의 원천, 정치적 문제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공공사회조직이 국제적인 조직과 연계된 정도를 활용하여 측정한다(ISD 홈페이지 소개 참고).

둘째, 대인신뢰 및 안전은 일반적인 사회신뢰에 대한 내용과 안전성에 대한 사회조사의 자료를 활용한다.

셋째, 관용은 다른 인종, 외국인노동자, 다른 종교, 사용 언어가 다른 사람, 유대인을 이웃으로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의 비율을 활용하는 WVS의 자료부터, 이민에 대한 인식을 활용하는 EVS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넷째, 기관신뢰(confidence)는 교육, 언론, 노조, 경찰, 의회, 행정, 정당, 사법의 8개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26) 홈페이지(<http://www.indsocdev.org>) 참고.

대한 신뢰는 WVS에서 결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을 제외한 7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많이’, ‘많이’ 신뢰하는 것을 신뢰한다고 하고, 그 비율을 낸 이후에 평균을 냈다.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한계로 인하여 이 문항은 다른 어떤 지표보다 결측치의 대체가 많이 이뤄졌다. 이에 4개 지표에 대한 결측치 대체에 대해서는 다음의 순서로 적용하였음을 밝힌다.

첫째, 서베이 조사 자료에서 관측 연도 측정치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근접 연도 측정치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일부 2015년 관측 연도에는 2010년 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둘째, 관측 연도를 전후로 하여 측정치가 있을 경우 이를 평균하여 사용한다. 셋째, 관측 연도 사이의 결측은 두 관측 연도의 산술평균값을 사용한다.

다. 사회이동 영역

1) 십분위분배율

사회지표의 하나로서 소득불평등 지표는 물질적 자원이 사회 내에서 어떠한 분포로 분배되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표의 하나인 지니계수로 측정하였을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18개 국가는 소득불평등도가 2007년에서 2010년 기간 중에 증가하였다(OECD, 2014b, p.110). 증가하는 소득불평등은 사회이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윌킨슨과 피켓이 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불평등과 사회이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상관관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Wilkinson and Pickett, 2009, p.160).

소득불평등 지표 중에서 하나의 대안인 p90/p10은 소득 하위 10%의

경제소득과 소득 상위 10%의 경제소득의 배율을 의미한다. 이 배율이 크다는 것은 소득 상위집단 또는 소득 하위집단이 상대적으로 고착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시에 사회이동성의 원천으로서 중산층의 두께를 표현하기도 한다.

십분위분배율은 OECD(2016d)의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소득분배는 경향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형함수를 이용한 추정을 사용하였다.²⁷⁾

2) GDP 대비 공교육지출

사회구성원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직업기술을 확보하는 원천으로서 교육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지출은 한 사회의 장래 이동성을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소득 격차의 확대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교육지출보다는 비교적 평등하게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교육지출이 사회이동성의 원천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여유진, 정해식 등, 2015, p.89).

유네스코(UNESCO, 2016)의 GDP 대비 정부의 교육지출값을 활용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결측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접 연도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27) 이에 따른 추정이 이뤄진 국가와 관측 연도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1995년, 2000년, 벨기에, 캐나다, 칠레 1995년, 덴마크 1995년, 2000년, 2005년, 에스토니아 1995년, 2000년, 그리스, 아이슬란드 1995년, 2000년, 이스라엘 1995년, 라트비아 1995년, 2000년, 룩셈부르크 1995년, 2015년, 멕시코, 네덜란드 1995년, 2000년, 2015년, 포르투갈 1995년, 2000년, 슬로바키아 1995년이다.

3)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은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재교육의 과정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이 지출은 사회구성원, 특히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의 전환, 새로운 직업의 탐색 등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GDP 대비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c)의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4) 교육성취도

사회이동성을 위한 재정지출로서 GDP 대비 공교육지출을 살펴보았다면, 실제로 이동성을 위한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PISA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

PISA 성적은 지금까지 모두 5번(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발표되었다. 본 연구가 1995년부터의 관측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00년 자료를 1995년과 2000년 관측치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어서 2003년과 2006년의 평균치를 2005년 자료로 사용하고, 2009년 자료를 2010년의 관측치로, 2012년 자료를 2015년 관측치로 사용한다.²⁸⁾

28) 비교적 최근에 OECD에 가입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측정 자료가 없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0년, 2003년, 2005년 자료가 없어서 2006년 값을 사용하였다. 칠레, 이스라엘, 영국은 2003년 조사 자료가 없어서 평균하지 않고, 2006년 값을 2005년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외에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터키는 2005년 값을 2000년, 1995년 자료로 사용하였다.

5) 학업중도탈락률(NEET 비율을 사용)

학업중도탈락률은 NEET 비율을 이용한다. OECD의 NEET 자료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먼저 15~29세 집단의 NEET 비율과 20~24세 집단의 NEET 비율을 각각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중 1개의 자료만 보고한다. 대체적으로 학령기 취학 가능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전자를 보고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OECD(2016f)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런 국가의 경우에는 15~29세 NEET 비율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²⁹⁾

라.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

1) 자살률

한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 주는 핵심 지표는 자살률이다. 자살의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어서, 자살률 증가의 원인을 정확히 집어내기는 쉽지 않다. OECD(2014b, p.126)에 따르면 2011년 브라질,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는 자살률이 낮고, 반대로 헝가리, 일본, 한국과 러시아는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OECD(2016g)의 건강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2) 노사분규 관련

노사분규는 사회갈등의 양상을 나타낸다. 사회갈등의 정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노사분규 횟수보다는 노사분규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하는 것

29)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슬로베니아는 15~29세 NEET를 사용하였으며, 라트비아는 ILO(2016c)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는 채창균 등(2015)이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이용하여 추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이 타당하다. 노사분규 횟수를 활용하는 것은 분규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진다. 예를 들어 분규 횟수를 셀 때 과거에는 파업에 참여한 사업장을 고려하였지만, 교섭단위로서 산별노조를 고려한 이후에는 참여 사업장 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분규의 지속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LO에서는 노동쟁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 또는 직장폐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ILO(2016b)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사분규에 따른 손실일수 통계는 상당한 결측치가 있으며, 다른 지표에 비해 대체값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도 또한 높다.³⁰⁾ 이에 노사분규와 관련한 지표를 포함한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와 이를 제외한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를 동시에 생산하도록 한다.

3) 민주주의지수

베텔스만 재단의 민주주의지수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지수(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SGI)의 하위 범주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지수는 선거과정(Electoral Processes), 정보 접근(Access to Information), 공민권과 정치적 자유(Civil Rights and Political Liberties), 법치주의(Rule of Law)의 4개 항목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제공 기간이 상당히 짧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를 사용하기로 한다. 흔히 WGI라고 알려지는

30) 지수 산출을 목적으로, 2015년 자료의 경우에만 가장 최신 자료를 대체하여 사용한다.

거버넌스 지수는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안정과 폭력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 질(Regulatory Quality), 법치주의(Rule of Law),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의 6개 영역에 대한 인식(perception)을 측정한다(Kaufmann, Kraay & Mastruzzi, 2010).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표는 3개의 차원에 2개씩의 지표가 배치되는 형태이다(Kaufmann, Kraay & Mastruzzi, 2010, p.2). 첫째, 정부가 선택되고, 감독되고 대체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참여와 책임성, 정치안정과 폭력부재의 2개 지표가 사용된다. 둘째, 건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도입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해서는 정부효과성과 규제의 질의 2개 지표가 사용된다. 셋째, 시민과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제도에 대한 국가와 시민의 존경과 관련하여 법치주의와 부패의 통제 2개 지표가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갈등의 관리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로서 국가와 시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과 관련된다. 이는 세계거버넌스지표 중에서 세 번째 차원의 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민주주의지수를 이 차원의 두 지표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세계거버넌스지표는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의 값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1995년은 1996년 값을 활용한다.

4) 저임금 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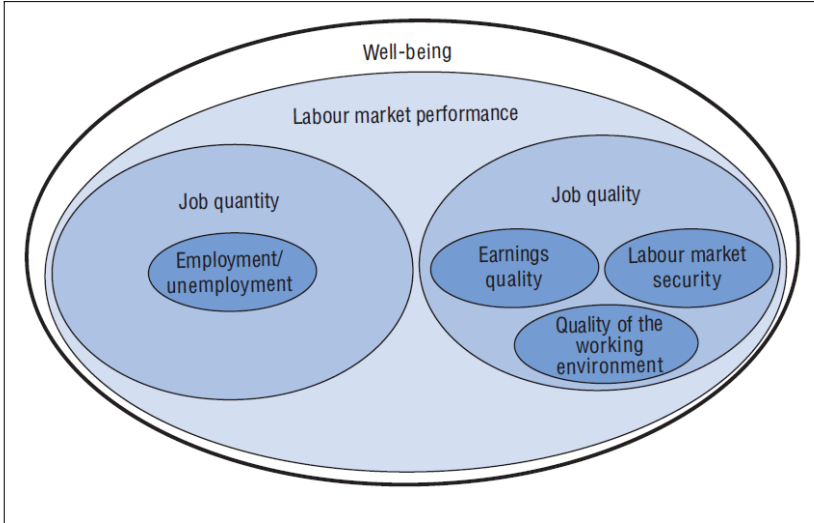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급여격차’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제시된 지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저임금 위험도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OECD(2016h)의 일자리의 질 분석틀(Job Quality framework)은 OECD의 well-being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발전하였다. 일자리의 질 분석틀은 사람들의 고용 상태와 관련한 세 가지 차원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각 차원은 물질적 삶의 기준(Material Living Standard), 경제적·신체적 불안정성(Insecurity economic and physical), 일을 포함한 개인적 활동(Personal activities including work)이다(Cazes, Hijzen and Saint-Martin, 2015, p.15). 각 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소득의 질(earnings quality)’, ‘근로조건의 질(quality of the working environment)’ 및 ‘노동시장 안정성(labour market security)’이다.

OECD의 일자리의 질 분석틀에서 ‘소득의 질’은 평균소득 수준과 소득 불평등도로 측정한다. 이것은 소득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따른 것이다. 소득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론에 따르면, 1) (개인 간 비교이거나 국가 간 비교이거나 간에)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으며, 2) 주어진 평균 소득 수준에서는 소득이 보다 균등하게 분포하는 경우에 더 행복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의 질을 소득 격차보다 우선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림 3-6] 일자리의 양, 일자리의 질과 안녕(well-being)



자료: OECD(2015a). p.216.

OECD(2016b)의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OECD의 저임금 위험도(low pay incidence)는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를 벌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소득 자료를 추세회귀를 통하여 대체하였다.³¹⁾ 그렇지만 프랑스, 노르웨이와 스웨덴, 슬로베니아와 터키는 해당 지표가 확보되지 못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와 터키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과 룩셈부르크의 평균치를,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핀란드와 덴마크의 평균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31) 해당하는 국가 및 관측 연도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멕시코, 포르투갈 1995년, 2000년,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1995년이다. 스위스는 2008년 자료를 이전 관측 연도에 모두 적용하였다.

5)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본소득의 분배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다(OECD, 2012, p.113).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정치경제적 원인과 결과를 살피기 시작하고 있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1950년대 이후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하면서, 자본/소득 비율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700%에 도달하여 20세기 시작 이전의 유럽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토마 피케티, 2014, p.236).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근로자의 삶의 질 하락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적 양극화와 결합된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은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상위 소득분위 집단의 소득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하위 소득분위 집단의 소득 수준은 정체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하위 소득분위 집단의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양극화 상황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저숙련직, 낮은 교육수준을 가지는 사람의 삶의 질 하락과 직결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경제성장과도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높은 소비성향을 보이므로, 노동소득의 감소는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OECD, 2012, p.110). 이와 같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적어지면서 총수요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이들은 그 대안으로 임금주도성장, 또는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다(이상헌, 2014, pp.79-80). 국내에서도 홍장표(2014, pp.131-132)는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이 높아지면서, 총수요의 임금주도성

이 강화되고, 노동소득분배율의 급격한 하락이 내수시장을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³²⁾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서 볼 때,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방법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국민소득과 노동소득 각각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먼저, 국민소득은 국내총생산(GDP), 국내총부가가치(GVA), 요소비용 국민소득(NI)을 사용한다(이병희, 2015, p.26). 일반적으로 총피용자보수가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임금몫(labour share)’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활용하고 있다.³³⁾ 그러므로 한국은행의 방식을 따르면 일반적인 방식에 비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게 측정하게 된다.

둘째, 노동소득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자영자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이다. 자영자의 경우에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혼합되어 있어 국민계정 추계에서 분리하여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OECD, 2012, p.116).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영업이익으로 계산하여 자본소득에 포함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게 되므로 실제 노동소득보다 적게 추정하게 된다. 한국과 같이 자영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자영자의 소득을 노동소득에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을

32) 한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질 경우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대체로 일치한다. 주상용(2015, p.73)도 노동소득분배율 1% 포인트 상승이 소비증가율을 대략 0.13~0.18% 상승시킨다고 분석하고 있다.

33) 일반적인 방식은 ‘총피용자보수/GVA’이며, 한국은행 방식은 ‘총피용자보수/국내요소소득’이다. 국내요소소득은 GVA-고정자본소모-기타생산세·생산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과소 추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통계는 OECD(2016i)의 통계로, OECD는 자영자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과 같은 노동소득을 가진다고 보고 추계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과 같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영자 소득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OECD의 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실제보다 높은 것이 된다.³⁴⁾

제5절 소결

3장은 전문가 조사 과정을 통해 수행한 사회통합의 각 영역 설정, 영역별 지표 설정 및 가중치 설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영역별로 확정된 지표를 사회통합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그 자료의 출처를 밝혔다. <표 3-15>는 개별 지표를 활용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원자료 출처를 정리하고 있다.

사회적 포용 영역의 5개 지표는 상대빈곤율, 성별 격차, 비정규직 고용 보호,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노인 사회지출로 결정되었다. 사회적 자본 영역의 5개 지표는 시민적 자유, 일반신회, 관용, 시민참여, 기관신회로 결정되었다. 사회이동은 공교육지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십분위분배율, 교육성취도, 학업중도탈락률로 결정되었다.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은 자살률, 노사분규횟수, 민주주의지수,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 노동소득분배율로 결정되었다.

34)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방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홍장표(2014), 이병희(2015)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표는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각 영역의 개념을 수정·정의한 이후, 이에 적합한 형태의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표 체계는 정교한 이론적 체계에 바탕을 둔 결과물이 아니다. 사회통합이라는 광범위한 정책 영역을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접근할 때에는 무수히 많은 지표가 제안되고, 또 그 지표들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정의와, 동시에 이러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동시에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사회통합지표 체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격차와 관련된 지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성별 격차, 십분위분배율,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가 대표적이다. 약간은 다른 맥락이지만 노동시장의 구조 및 분배와 관련되면서, 격차의 내용을 설명하는 지표도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노동소득분배율,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이 이런 지표이다. 사회적 격차 축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표도 있는데,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공교육지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지출이 이러한 지표이다. 사회적 격차에 대한 강조는 최근 계층 간 격차 확대 및 격차의 고착화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15〉 지표 내용 요약

지표 설명	원자료(제안)	자료 사용(최종)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	1. OECD Statistics 2. QOG	1. OECD (2016), "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2. LIS (2016), LIS Key Figures Dataset
(성별 임금격차+성별 고용률격차)/2	1. 성별 임금 격차 OECD Gender Statistics 2. 성별 고용률 격차 World databank WDI/ILO,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database.	1. 성별 임금 격차 OECD (2016), "Earnings: Gross earnings: decile ratios",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2. 성별 고용률 격차 ILO (2016),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by sex and age(%)", ILOSTAT Database
GDP 대비 노인을 위한 공적사회지출	OECD SOCX Statistics	OECD (2016),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가 전체 파트타임 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율	OECD Labour Statistics, Incidence of involuntary part time workers	OECD (2016), "Labour Market Statistics: Involuntary part time workers: incidence",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고용보호지수: 임시고용	OECD, ELMS: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temporary employment	OECD (2016),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temporary employment",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종교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적법절차의 적용의 권리	QOG, civil liberties	Freedom House. (2016). Freedom in the world. (www.freedomhouse.org)
정치적 행동 여부의 합 (서명, 보이콧, 시위)	World Values Survey	ISD, Civic Activism (www.indsocdev.org)
대인신뢰	World Values Survey	ISD, Interpersonal safety and trust (www.indsocdev.org)

지표 설명	원자료(제안)	자료 사용(최종)
기관별 신뢰의 합	World Values Survey	1) World Values Survey 2) European Values Survey
이웃으로서의 수용 여부의 합	World Values Survey	ISD, Inclusion of Minorities (www.indsocdev.org)
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10% 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 비율	1. OECD Statistics 2. QOQ	OECD (2016), "Earnings: Gross earnings: decile ratios",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GDP 대비 공교육지출	UNESCO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UNESCO (2016), "Education: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from government sources)
PISA 평균 점수	PISA / OECD Statistics	PISA annual report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지출 비율	OECD SOCX Statistics	OECD (2016),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15~29세 NEET 비율	OECD, (NEET) indicators	1. OECD (2016), "Education at a glance: Graduation and entry rates", OECD Education Statistics (database) 2. ILO (2016), Share of youth not in employment and not in education by sex(%), ILOSTAT Database
10만 명당 자살자 수	OECD Health Statistics	OECD (2016), "Health status",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노사분규횟수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CPDS)	ILO (2016), "Days not worked per 1000 workers due to strikes and lockouts by economic activity", ILOSTAT(database)
민주주의지수	SGI	The WorldBank (2016).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ww.govindicators.org).
저임금 위험도	OECD Statistics	OECD (2016), "Earnings: Gross earnings: decile ratios",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OECD Statistics	OECD (2016), "Unit Labour Costs-Annual Indicators", OECD. Stat.

제 4 장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제1절 사회통합지수 산출

제2절 사회통합지수 국가 비교

제3절 한국의 사회통합지수와 사회통합 수준

제4절 소결

4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

제1절 사회통합지수 산출

4장에서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비교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지수 및 각 영역 및 종합지수 산출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모든 지표는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을 실시하였다. 지표가 해당 영역에서 가지는 의미를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였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표 3-14>에 설명한 바와 같다.

<표 4-1> 지표 표준화 방식

구분	수식
순기능	$\frac{X_i - \min(X_i)}{\max(X_i) - \min(X_i)}$
역기능	$\frac{\max(X_i) - X_i}{\max(X_i) - \min(X_i)}$
$\max(X_i)$: 해당 지표 중 최댓값 $\min(X_i)$: 해당 지표 중 최솟값	

둘째, 각 영역별 지수는 각 영역별 지표에 해당 지표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였다. 이때 각 영역별로 가중치의 합은 1이다.

$$\text{영역지수}_i = \sum x_i * w$$

영역지수(i): 해당 국가의 사회통합 하위 영역 지수

x(i): 해당 국가의 표준화된 지표값

w: 각 지표별 가중치

셋째, 사회통합지수는 앞서 산출한 4개 영역의 지수를 각각 다시 최소-최대 정규화한 후, 해당 영역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지표와 마찬가지로 영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앞서 산출한 부문별 점수에 부문별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text{사회통합지수}_i = \sum \text{정규화한 영역지수}_i * w'$$

사회통합지수(i): 해당 국가의 복지지수 최종값

정규화한 영역지수(i): 해당 국가의 사회통합 하위 영역 지수의 정규화값

w': 각 하위 영역별 가중치

제2절 사회통합지수 국가 비교

1. 사회통합지수에 따른 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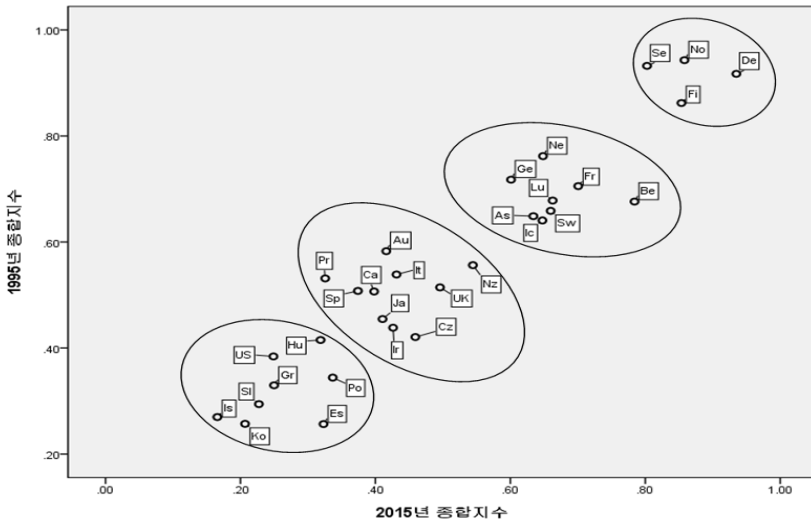
사회통합지수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그리고 사회갈등 및 관리 등 4개 영역의 19개 지표값을 근거로, 하위 영역 그리고 개별 지표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사회적 포용 영역은 사회구성원이 제도를 통한 권리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 역량을, 사회적 자본 영역은 사회구성원의 신뢰, 이해 및 관용 정도, 참여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을, 사회이동 영역은 직업, 소득계층 이동의 가능 조건 및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역량을 그리고 사회갈등 및 관리 영역은 사회적 갈등 수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다.

사회통합지수의 결과값은 특정 국가의 사회통합 수준과 비례하도록 고

안되었다. 즉 특정 국가의 사회통합지수값이 크다면, 그 국가의 사회통합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지수는 절댓값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지수가 0.5인 경우에 0.25인 경우보다 사회통합 수준이 2배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통합지수는 각 지표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준으로 척도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상대 값으로, 비교 대상 국가의 평균치와 상대적 거리, 그리고 순위를 표현한다.

1995년과 2015년을 기준으로 국가별로 산출한 사회통합지수값을 교차하여 분포를 표현한 것은 [그림 4-1]과 같다. 1995년과 2015년의 사회통합지수값을 동시에 고려하면, 비교 대상인 30개 국가를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사회통합지수값이 상대적으로 커서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국가이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등 북유럽의 4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사회통합지수값은 대체로 0.8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 1995년과 2015년 사회통합지수에 따른 국가별 유형 구분



두 번째 그룹은 사회통합지수의 값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앞선 그룹과는 차이가 있는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아이슬란드 등 8개국이다. 두 번째 그룹은 대체로 유럽 대륙의 중부에 위치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의 사회통합지수는 0.6~0.8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세 번째 그룹은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체코,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 10개국으로, 사회통합 수준이 중하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은 유럽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영연방과 일본이 속한다. 3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사회통합지수는 대체로 0.4~0.6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2015년에 사회통합지수값이 0.4 이하로 하락하였다.

네 번째 그룹은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사회통합 수준이 가장 낮으며, 동유럽 지역의 국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는 헝가리, 폴란드, 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등 8개국이다. 4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사회통합지수값은 0.4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 사회통합지수의 국가별, 연도별 현황

그룹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1	덴마크	0.92	0.92	0.92	0.92	0.93
	노르웨이	0.94	0.87	0.85	0.86	0.86
	핀란드	0.86	0.77	0.80	0.82	0.85
	스웨덴	0.93	0.90	0.87	0.76	0.80
2	벨기에	0.68	0.66	0.70	0.76	0.78
	프랑스	0.71	0.70	0.71	0.73	0.70
	룩셈부르크	0.68	0.65	0.68	0.70	0.66
	스위스	0.66	0.67	0.69	0.67	0.66
	네덜란드	0.76	0.75	0.71	0.72	0.65
	아이슬란드	0.64	0.68	0.74	0.63	0.65
	오스트리아	0.65	0.67	0.65	0.65	0.63
	독일	0.72	0.66	0.60	0.60	0.60
3	뉴질랜드	0.56	0.56	0.57	0.55	0.54
	영국	0.51	0.47	0.51	0.52	0.50
	체코	0.42	0.36	0.42	0.44	0.46
	이탈리아	0.54	0.54	0.51	0.48	0.43
	아일랜드	0.44	0.40	0.46	0.49	0.43
	호주	0.58	0.53	0.48	0.46	0.42
	일본	0.45	0.39	0.35	0.40	0.41
	캐나다	0.51	0.47	0.42	0.46	0.40
	스페인	0.51	0.49	0.49	0.51	0.37
	포르투갈	0.53	0.53	0.54	0.59	0.33
4	폴란드	0.34	0.36	0.35	0.39	0.34
	에스토니아	0.26	0.24	0.26	0.39	0.32
	헝가리	0.42	0.33	0.38	0.37	0.32
	그리스	0.33	0.39	0.38	0.40	0.25
	미국	0.38	0.39	0.33	0.31	0.25
	슬로바키아	0.29	0.30	0.26	0.27	0.23
	한국	0.26	0.23	0.20	0.21	0.21
	이스라엘	0.27	0.22	0.13	0.13	0.17
전체	중위수	0.53	0.53	0.51	0.51	0.45
	평균	0.56	0.54	0.53	0.54	0.50
	표준편차	0.199	0.197	0.204	0.192	0.212

이하에서는 각 그룹별로 사회통합지수를 통해 사회통합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1그룹 국가의 사회통합 수준

1그룹에 속한 4개 국가 사회통합지수의 평균값은 <표 4-3>과 같다. 1그룹 국가의 사회통합 종합지수는 1995년 0.91, 2000년 0.87, 2005년 0.86, 2010년 0.84로 지속적인 하향 추세이며, 2015년 0.86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수값의 변화와 관련하여 1그룹 국가들의 사회통합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교 대상 국가들의 상대적 격차가 축소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4-3> 1그룹 국가 사회통합지수 평균값의 연도별 현황

연도	종합지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1995년	0.91	0.71	0.79	0.85	0.75
2000년	0.87	0.70	0.85	0.79	0.76
2005년	0.86	0.74	0.85	0.77	0.73
2010년	0.84	0.71	0.86	0.72	0.77
2015년	0.86	0.69	0.87	0.75	0.76

사회적 포용의 지수값은 2005년을 정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지수값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사회이동의 지수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사회갈등과 관리의 지수값은 2005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그룹에 속한 4개 국가의 사회적 포용 지수를 연도별로 보면, 1995년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덴마크와 핀란드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에 2015년에는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상대적으로 높고, 스웨덴과 핀란드가 상대적으로 낮다. 개별 국가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노르웨이는 가장 높은 수준을, 그리고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덴마크의 사회적 포용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적 포용 지수는 1995년에 가장 높은 값을, 반면에 2010년과 2015년에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수가 상대 값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사회적 포용은 2010년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 1그룹 국가 사회적 포용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노르웨이	0.73	0.78	0.80	0.83	0.79
덴마크	0.68	0.69	0.73	0.75	0.73
스웨덴	0.74	0.70	0.75	0.57	0.56
핀란드	0.67	0.63	0.68	0.69	0.67

1그룹 4개 국가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사회적 자본 지수가 등락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준(1995년 0.80, 2015년 0.81)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3개 국가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사회적 자본 지수값이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4-5〉 1그룹 국가 사회적 자본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노르웨이	0.85	0.90	0.87	0.91	0.91
덴마크	0.80	0.82	0.83	0.77	0.81
스웨덴	0.76	0.85	0.85	0.90	0.91
핀란드	0.74	0.81	0.83	0.86	0.86

1그룹에 속하는 4개 국가의 사회이동 지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스웨덴과 핀란드가 2010년을 기점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는 1995년 0.85에서 2015년 0.66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다른 3개 국가에 비해 사회이동 지수가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도별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5~2010년 기간에 사회이동 지수가 하락하였으며, 2015년에 소폭 증가하여 2005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표 4-6〉 1그룹 국가 사회이동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노르웨이	0.85	0.71	0.72	0.66	0.66
덴마크	0.90	0.93	0.91	0.87	0.86
스웨덴	0.85	0.82	0.75	0.67	0.76
핀란드	0.82	0.69	0.72	0.68	0.72

1그룹 국가의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값은 다른 지수값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는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핀란드는

노르웨이와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연도별로 등락을 나타내고 있으나, 별다른 변동이 없이 지수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1그룹 국가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노르웨이	0.76	0.70	0.63	0.65	0.66
덴마크	0.73	0.78	0.78	0.82	0.79
스웨덴	0.77	0.82	0.76	0.81	0.79
핀란드	0.74	0.74	0.73	0.79	0.82

3. 2그룹 국가의 사회통합 수준

2그룹에 속한 4개 국가 사회통합지수의 평균값은 〈표 4-8〉과 같다. 2그룹 국가의 사회통합 종합지수는 1995년 0.69, 2000~2010년 0.68, 2015년 0.67로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포용 지수는 2005년과 2010년에 지수값이 상대적으로 높고, 나머지 1995년, 2000년, 그리고 2015년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지수값은 연도별 소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변동이 없이 동일한 수준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이동 지수는 1995년 0.58에서 2015년 0.53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값은 1995년과 2005년에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2000년, 2010년, 그리고 2015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4-8〉 2그룹 국가 사회통합지수 평균값의 연도별 현황

연도	종합지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1995년	0.69	0.64	0.66	0.58	0.63
2000년	0.68	0.64	0.70	0.57	0.66
2005년	0.68	0.68	0.70	0.56	0.63
2010년	0.68	0.69	0.69	0.52	0.66
2015년	0.67	0.65	0.69	0.53	0.67

2그룹에 속한 8개 국가의 사회적 포용 지수는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도별 추세는 다른 연도에 비해 2005년과 2010년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9〉 2그룹 국가 사회적 포용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네덜란드	0.61	0.59	0.61	0.62	0.55
독일	0.70	0.64	0.60	0.60	0.58
룩셈부르크	0.78	0.77	0.79	0.85	0.78
벨기에	0.69	0.62	0.69	0.73	0.71
스위스	0.51	0.56	0.61	0.58	0.54
아이슬란드	0.58	0.58	0.63	0.57	0.60
오스트리아	0.55	0.61	0.68	0.68	0.64
프랑스	0.70	0.75	0.83	0.84	0.77

룩셈부르크의 사회적 포용 지수값은 2010년에 상승했으나, 지난 20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지수값의 등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의 사회적 포용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1그룹 국가와 유사한 수준

을 보인다. 벨기에,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포용 지수는 다소 변동이 있으나, 소폭 상승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지수값은 별다른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2그룹 국가 중 유일하게 사회적 포용 지수의 변동이 가장 큰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의 사회적 포용 지수는 1995년에 0.7, 2005년에 0.6, 그리고 2015년에 0.58로 1995년에 2그룹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수값의 변동으로 보아 독일은 약 20년의 기간 동안 사회적 포용이 실질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10〉 2그룹 국가 사회적 자본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네덜란드	0.71	0.79	0.67	0.64	0.63
독일	0.59	0.60	0.63	0.61	0.63
룩셈부르크	0.65	0.71	0.75	0.75	0.75
벨기에	0.54	0.55	0.67	0.67	0.66
스위스	0.73	0.80	0.85	0.81	0.82
아이슬란드	0.86	0.86	0.91	0.85	0.87
오스트리아	0.68	0.69	0.64	0.60	0.61
프랑스	0.55	0.57	0.53	0.57	0.56

2그룹 8개 국가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전반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이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2그룹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1그룹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변동 없이 지수값을 유지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벨기에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별다른 변동이 없다. 반면에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4-11〉 2그룹 국가 사회이동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네덜란드	0.70	0.68	0.69	0.64	0.59
독일	0.57	0.54	0.51	0.49	0.50
룩셈부르크	0.42	0.38	0.42	0.39	0.37
벨기에	0.55	0.64	0.59	0.59	0.62
스위스	0.63	0.59	0.59	0.54	0.55
아이슬란드	0.53	0.58	0.61	0.55	0.53
오스트리아	0.57	0.56	0.52	0.49	0.52
프랑스	0.64	0.61	0.56	0.51	0.52

2그룹에 속하는 8개 국가의 사회이동 지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수값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등의 5개국은 지수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지수값이 등락을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벨기에의 사회이동 지수값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지수값이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1995년과 2015년에 동일한 지수값을 보이고 있다.

〈표 4-12〉 2그룹 국가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네덜란드	0.73	0.77	0.71	0.77	0.74
독일	0.69	0.70	0.63	0.64	0.66
룩셈부르크	0.58	0.59	0.54	0.57	0.57
벨기에	0.64	0.68	0.64	0.77	0.80
스위스	0.66	0.67	0.65	0.69	0.74
아이슬란드	0.51	0.62	0.70	0.56	0.59
오스트리아	0.67	0.68	0.63	0.66	0.64
프랑스	0.59	0.60	0.54	0.63	0.61

2그룹 국가의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는 2005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6개국은 2005년에 지수값이 하락하였다가 2010년에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분석 대상 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별다른 변동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벨기에와 스위스의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5년의 지수값은 각각 0.8, 0.74로 1그룹의 지수값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4. 3그룹 국가의 사회통합 수준

3그룹에 해당하는 10개 국가의 사회통합지수값은 <표 4-13>과 같다. 3그룹 국가의 사회통합 종합지수는 1995년 0.51, 2000년과 2005년에 0.48, 2010년에 0.49, 그리고 2015년에 0.43으로 지수값은 소폭의 등락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표 4-13> 3그룹 국가 사회통합지수 평균값의 연도별 현황

연도	종합지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1995년	0.51	0.45	0.56	0.53	0.56
2000년	0.48	0.43	0.59	0.48	0.57
2005년	0.48	0.52	0.59	0.44	0.51
2010년	0.49	0.52	0.57	0.42	0.55
2015년	0.43	0.46	0.59	0.42	0.52

사회적 포용 지수는 2005년과 2010년에 지수값이 0.5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나머지 1995년, 2000년, 그리고 2015년은 약 0.45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자본 지수값은 연도별 소폭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으

나, 분석 대상 기간 동안에 별다른 변동 없이 동일한 수준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이동 지수는 1995년 0.53에서 2015년 0.42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값은 2005년과 2015년에 0.51~0.5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1995년, 2000년, 그리고 2010년에는 0.55~0.57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4-14〉 3그룹 국가 사회적 포용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뉴질랜드	0.48	0.46	0.54	0.52	0.54
스페인	0.52	0.49	0.56	0.59	0.45
아일랜드	0.25	0.23	0.47	0.52	0.46
영국	0.42	0.42	0.51	0.52	0.48
이탈리아	0.57	0.57	0.60	0.56	0.50
일본	0.31	0.25	0.36	0.37	0.36
체코	0.57	0.56	0.63	0.64	0.64
캐나다	0.36	0.36	0.41	0.42	0.38
포르투갈	0.57	0.54	0.64	0.63	0.39
호주	0.42	0.41	0.45	0.42	0.42

3그룹 국가의 사회적 포용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00년과 2005년의 지수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지수값을 기준으로 보면 체코, 뉴질랜드, 이탈리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호주가 중간 수준, 그리고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포용 지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뉴질랜드, 아일랜드, 체코, 영국 등 4개국의 지수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아일랜드는 지수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포르투갈은 1995년에 0.57에서

2005년에 0.64로 상승하였다가 2015년에 0.39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지수값 변동에 있어서 이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 지수값이 2000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0.36 수준으로 상승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의 4개국은 2005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에 지수값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2015년에 지수값이 하락하면서 1995년과 비교하여 사회적 포용 지수가 낮아졌다. 반면에 캐나다와 호주는 지수값의 상승 이후에 하락하는 양상은 동일하나 1995년과 2015년의 지수값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15〉 3그룹 국가 사회적 자본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뉴질랜드	0.52	0.64	0.62	0.58	0.60
스페인	0.53	0.55	0.53	0.57	0.56
아일랜드	0.58	0.70	0.68	0.64	0.64
영국	0.58	0.52	0.60	0.55	0.57
이탈리아	0.52	0.57	0.49	0.42	0.46
일본	0.68	0.68	0.68	0.62	0.68
체코	0.33	0.32	0.51	0.49	0.49
캐나다	0.61	0.67	0.64	0.70	0.70
포르투갈	0.52	0.58	0.57	0.56	0.56
호주	0.69	0.68	0.60	0.61	0.63

3그룹에 해당하는 10개 국가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2010년 일시적인 하락과 2015년에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지수를 구성하는 4개 영역 중 사회적 자본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3그룹 국가 중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지수값이 상대적

으로 높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2그룹의 지수값과 유사한 수준이다.

분석 대상 기간인 1995~2015년 동안에 체코(0.33→0.49)와 캐나다(0.61→0.70)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뉴질랜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3개국도 지수값이 상승하였다. 반면에 이탈리아(0.52→0.46)와 호주(0.69→0.63)는 상당한 정도 지수값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스페인, 영국, 일본 등의 3개국은 지수값의 일시적인 변동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지수값을 유지하고 있다.

〈표 4-16〉 3그룹 국가 사회이동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뉴질랜드	0.63	0.63	0.60	0.56	0.54
스페인	0.45	0.44	0.39	0.34	0.34
아일랜드	0.63	0.54	0.46	0.39	0.46
영국	0.53	0.44	0.43	0.40	0.41
이탈리아	0.42	0.42	0.41	0.36	0.35
일본	0.55	0.51	0.41	0.45	0.48
체코	0.45	0.36	0.35	0.33	0.38
캐나다	0.62	0.52	0.43	0.43	0.42
포르투갈	0.41	0.41	0.39	0.41	0.33
호주	0.63	0.54	0.51	0.49	0.43

3그룹에 속하는 10개 국가의 사회이동 지수는 분석 대상 기간 동안에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의 5개국은 사회이동 지수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00년에 급격한 하락 이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지수값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2015년에 상당한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아일랜드, 일본, 체코의 사회이동 지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호주(0.63→0.43)와 아일랜드(0.63→0.46)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0.55→0.48)과 이탈리아(0.42→0.35)는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4-17〉 3그룹 국가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뉴질랜드	0.56	0.57	0.56	0.56	0.55
스페인	0.57	0.62	0.56	0.58	0.50
아일랜드	0.56	0.50	0.47	0.54	0.42
영국	0.62	0.68	0.62	0.68	0.71
이탈리아	0.62	0.64	0.57	0.61	0.62
일본	0.54	0.52	0.40	0.47	0.52
체코	0.36	0.33	0.31	0.33	0.39
캐나다	0.56	0.55	0.50	0.54	0.51
포르투갈	0.63	0.66	0.57	0.68	0.48
호주	0.63	0.63	0.58	0.53	0.52

3그룹 국가의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는 전체적으로 2005년 일시적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하다가 2015년에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개 국가 중 영국이 유일하게 지수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와 이탈리아는 일시적 변동이 있었으나, 지수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3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국가는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값이 하락하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2015년에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일본은 2005년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4그룹 국가의 사회통합 수준

4그룹 국가의 사회통합 종합지수와 4개 영역별 지수의 국가별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는 <표 4-18>과 같다. 4그룹 국가의 사회통합 종합지수는 1995년 0.32, 2000년 0.31, 2005년 0.29, 2010년 0.31, 그리고 2015년 0.26으로 2010년까지는 별다른 변동이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2015년에 하락하였다.

4그룹 국가의 사회적 포용 지수는 다른 3개의 지수에 비해 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수값은 1995년 0.43에서 2010년 0.49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0.44로 다시 하락하였다. 사회적 자본 지수 값은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0년에 하락하였으나, 1995년(0.32)에 비해 2015년(0.36)에 지수값이 상승하였다.

4그룹에 해당하는 8개국의 사회이동 지수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에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값은 1995년에 0.40에서 2005년에 0.32로 하락하였으며, 2010년에 0.35로 다시 상승하여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18> 4그룹 국가 사회통합지수 평균값의 연도별 현황

연도	종합지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1995년	0.32	0.43	0.32	0.38	0.40
2000년	0.31	0.43	0.38	0.32	0.41
2005년	0.29	0.48	0.39	0.28	0.32
2010년	0.31	0.49	0.36	0.27	0.35
2015년	0.26	0.44	0.36	0.30	0.35

4그룹 국가의 사회적 포용 지수는 2005년과 2010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2015년에 다시 하락하여 1995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

타냈다. 1995년과 2015년의 지수값을 비교하면 그리스가 0.55에서 0.47로 상대적으로 가장 하락이 컸으며, 2010년까지 지수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으나, 2015년에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폴란드는 0.44에서 0.56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 0.64를 정점으로 2015년에 0.56으로 감소하였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미국 등 4개국은 지수값의 등락이 있었으나, 1995년과 2015년의 지수값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지수값이 1995년에 0.39에서 2015년에 0.35로 차이가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9〉 4그룹 국가 사회적 포용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그리스	0.55	0.56	0.56	0.55	0.47
미국	0.32	0.31	0.39	0.38	0.33
슬로바키아	0.48	0.52	0.48	0.52	0.48
에스토니아	0.49	0.48	0.52	0.58	0.49
이스라엘	0.39	0.37	0.36	0.35	0.35
폴란드	0.44	0.51	0.59	0.64	0.56
헝가리	0.55	0.54	0.67	0.65	0.54

4그룹에 해당하는 국가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1995년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후에 2005년까지 상승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시 하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4그룹 국가의 평균과 유사하게 지수값의 상승과 하락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1995년에 0.26에서 2015년에 0.44로 가장 큰 폭의 지수값이 상승하였으며, 별다른 변동 없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이스라엘(0.12→0.03)과 헝가리(0.39→0.29)는 지속적으로 지수값이 하락하

였으며, 특히 이스라엘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표 4-20〉 4그룹 국가 사회적 자본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그리스	0.25	0.40	0.42	0.33	0.32
미국	0.59	0.65	0.55	0.59	0.59
슬로바키아	0.18	0.32	0.37	0.32	0.33
에스토니아	0.26	0.30	0.39	0.39	0.44
이스라엘	0.12	0.18	0.11	0.03	0.03
폴란드	0.34	0.36	0.39	0.39	0.38
헝가리	0.39	0.36	0.38	0.34	0.29

4그룹에 속하는 국가의 사회이동 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5년에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지수값의 변동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폴란드를 제외하는 나머지 국가들은 사회이동 지수의 값이 모두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4-21〉 4그룹 국가 사회이동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그리스	0.26	0.24	0.26	0.26	0.21
미국	0.44	0.40	0.28	0.22	0.23
슬로바키아	0.40	0.29	0.28	0.26	0.26
에스토니아	0.38	0.31	0.27	0.32	0.34
이스라엘	0.36	0.23	0.15	0.11	0.27
폴란드	0.37	0.33	0.38	0.38	0.37
헝가리	0.43	0.34	0.34	0.29	0.37

그리스는 2010년까지 지수값이 0.26 수준에서 안정적이었으나, 2015년에 0.21로 하락하였다. 미국(0.44→0.23)과 슬로바키아(0.40→0.23)는 사회이동 지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에스토니아(0.38→0.34), 이스라엘(0.36→0.27), 그리고 헝가리(0.43→0.37)는 지수값의 연도별로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에스토니아와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이동 지수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2〉 4그룹 국가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연도별 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그리스	0.43	0.53	0.48	0.55	0.39
미국	0.51	0.56	0.49	0.47	0.47
슬로바키아	0.28	0.31	0.26	0.22	0.24
에스토니아	0.13	0.17	0.18	0.35	0.35
이스라엘	0.50	0.50	0.40	0.42	0.49
폴란드	0.45	0.42	0.18	0.21	0.23
헝가리	0.35	0.28	0.23	0.25	0.29

4그룹 국가의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는 전체적으로 2000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5년에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1995년 0.13에서 2015년 0.35로 유일하게 지수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슬로바키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 지수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폴란드는 1995년 0.45에서 2015년 0.23으로 지수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리스는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15년에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헝가리는 지수값이 낮아지다가 2015년에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제3절 한국의 사회통합지수와 사회통합 수준

1. 사회통합지수

한국의 사회통합지수 산출 결과와 순위는 <표 4-23>에 정리하고 있다. 사회통합 종합지수는 비교 대상 30개 국가 중 29위이며, 1995년부터 2015년의 기간 동안 순위의 변화가 없다. 지수값은 1995년에 0.257에서 2000년 0.228, 2005년 0.198로 하락하였으며, 2010년에 0.211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 0.207로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4-23> 한국의 사회통합지수 순위 및 지수값 추이

연도	종합지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1995년	29	0.257	30	0.198	23	0.411	26	0.393	21	0.537
2000년	29	0.228	30	0.150	23	0.469	22	0.387	25	0.482
2005년	29	0.198	30	0.257	22	0.517	27	0.274	25	0.365
2010년	29	0.211	30	0.253	22	0.499	26	0.294	25	0.353
2015년	29	0.207	30	0.266	22	0.521	24	0.344	26	0.377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인 사회적 포용 지수는 1995년에 0.198에서 2005년 0.257, 2015년에 0.266으로 지수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30개 국가 중 최하위로 순위 변동은 없다. 사회적 포용 지수의 순위 변동은 없으나, 지수값이 상승하였다는 것은 비교 대상 국가들과의 격차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 지수는 다른 3개의 영역에 비해 지수값과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수값은 1995년에 0.411에서 2005년 0.517로 지

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에 0.499로 하락하였다가 2015년에 0.521로 상승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지수의 순위는 1995년에 23위에서 2005년에 22위로 1단계 상승하였으며, 이후에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이동 지수는 1995년에 지수값은 0.393, 순위는 26위였다. 2000년에 지수값은 0.387로 감소하였으나, 순위는 22위로 4단계 상승하였다. 이는 비교 대상 국가들의 지수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적어서 순위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과 2010년에 순위는 27위와 26위를, 그리고 지수값은 각각 0.274와 0.294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 순위는 24위, 지수값은 0.344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경우에 1995년에 21위, 0.537에서 2015년에 26위, 0.377로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값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종합지수와 사회적 포용 지수는 지수값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순위는 변동이 없다. 사회적 자본 지수와 사회이동 지수는 지수값과 순위에서 미약하지만 개선된 측면이 있으며, 반면에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사회적 포용

사회적 포용 영역은 상대빈곤율, 성별 임금 및 고용률 격차, 비정규직 고용보호,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그리고 GDP 대비 노령 지출 등 5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표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지수를 산출한

다. 한국의 사회적 포용 지수의 경우 지수값은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사회적 포용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별 추세를 보면 <표 4-24>와 같다.

<표 4-24> 한국 사회적 포용 지수의 지표별 순위 및 추이

연도	빈곤율		성별 격차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비자발적 임시 근로자 비율		GDP 대비 노령 지출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995년	0.145	29	0.000	30	0.639	8	0.000	30	0.000	30
2000년	0.166	26	0.000	30	0.417	9	0.000	30	0.000	30
2005년	0.437	26	0.000	30	0.536	8	0.000	30	0.000	30
2010년	0.403	27	0.000	30	0.536	7	0.034	29	0.000	30
2015년	0.300	24	0.000	30	0.567	8	0.237	26	0.002	29

사회적 포용 지수를 구성하는 5개 지표 중에서 비정규직 고용보호 지표를 제외한 4개 지표의 지수값과 순위는 최하위권에 속한다. 성별 격차는 성별 임금 격차와 성별 고용률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별 격차는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지수값과 순위에 변동이 없으며,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순위이다. 고용 상태와 임금 수준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심각한 수준이며, 지수값의 추이로 보면 성별 격차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과 GDP 대비 노령 지출 지표 역시 성별 격차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은 2010년, GDP 대비 노령 지출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수값과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사안이다.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GDP 대비 노령 지출은 향후에 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빈곤율의 경우 지수값과 순위가 하위권에 해당하고 있으나, 2015년에 순위가 상승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빈곤율의 순위는 상승한 반면에 지수값은 하락하였다. 따라서 상대빈곤율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의 지수값 하락에 따른 반사 효과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지수는 시민적 자유, 일반신뢰, 관용, 시민참여, 기관신뢰 등의 5개 지표로 구성된다. 사회적 자본은 국가의 정책 또는 제도의 역량 보다는 시민(사회) 역량을 측정하는 지수이며, 따라서 국가의 정책적 개입 또는 규제 등을 통해 지수값과 순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표 4-25〉 한국 사회적 자본 지수의 지표별 순위 및 추이

연도	시민적 자유		일반신뢰		관용		시민참여		기관신뢰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995년	0.471	24	0.201	15	0.227	27	0.371	20	0.862	8
2000년	0.471	24	0.647	14	0.275	25	0.288	26	0.689	15
2005년	0.353	29	0.724	9	0.412	13	0.415	22	0.760	11
2010년	0.286	28	0.591	12	0.623	9	0.358	20	0.713	16
2015년	0.375	27	0.591	12	0.623	9	0.358	20	0.713	16

시민적 자유는 1995년과 2000년에 0.471, 24위에서 2005년에 0.353, 29위로 하락하였으며, 2010년과 2015년에 순위가 1단계씩 상승하였다.

관용 지표는 지수값과 순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관

용은 1995년에 0.227, 27위에서 2015년에 0.623, 9위로 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변화되었다.

일반신뢰와 시민참여의 경우는 지수값과 순위가 연도별로 변동이 있으며,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다. 2015년의 일반신뢰는 2005년과 비교해 지수값과 순위가 하락하였으나, 1995년에 비해 지수값과 순위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는 2000년에 지수값과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에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10년과 2015년에는 1995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 4개 지표는 개선되거나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신뢰는 1995년에 0.862, 8위에서 2005년에 0.760, 11위로, 그리고 2015년에 0.713, 16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년 동안 기관신뢰는 중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하락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사회이동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역동성이 있으며, 수직적 계층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이동 영역 지표의 지수값과 순위를 보면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교육지출은 1995년에 0.107, 29위에서 2015년에 0.207, 23위로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교 대상 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관심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여전히 소홀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지출이 미흡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성취도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최상위 수준이다. 반면에 학업중도탈락률은 1995년에

0.487, 23위에서 2015년에 0.604, 20위로 최근에 올수록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정책이나 제도의 역량보다는 개인의 역량에 따른 성취를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26〉 한국 사회이동 지수의 지표별 순위 및 추이

연도	공교육지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십분위 분배율		교육성취도		학업중도 탈락률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995년	0.107	29	0.019	29	0.667	22	0.984	2	0.487	23
2000년	0.093	26	0.197	17	0.498	25	0.984	2	0.487	23
2005년	0.091	26	0.030	26	0.236	27	0.913	2	0.453	25
2010년	0.214	24	0.135	21	0.085	28	0.976	2	0.420	20
2015년	0.207	23	0.227	16	0.078	28	1.000	1	0.604	20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개선되는 추세이다. 1995년에 0.019, 29위에서 2000년에 0.197, 17위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실업에 대한 대책과 고용지원정책을 확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05년에 0.030, 26위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2015년에 0.227, 16위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교육과 고용에 대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십분위분배율은 1995년에 0.667, 22위에서 2015년에 0.078, 28위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순위 역시 최하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

5. 사회갈등과 관리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를 구성하는 5개 지표의 지수값과 순위는 우리 사회의 양면성을 보여 주는 전형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지수값과 순위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급여 격차는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표 4-27〉 한국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지표별 순위 및 추이

연도	자살률		노사분규횟수		민주주의지수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		노동소득 분배율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995년	0.810	9	0.999	9	0.158	28	0.255	26	1.000	1
2000년	0.642	18	0.995	17	0.157	28	0.167	27	1.000	1
2005년	0.045	29	0.997	15	0.249	24	0.053	29	1.000	1
2010년	0.000	30	1.000	12	0.259	24	0.028	29	1.000	1
2015년	0.000	30	1.000	16	0.311	24	0.065	27	1.000	1

민주주의지수는 1995년에 0.158, 28위에서 2015년에 0.311, 24위로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지수의 지수값과 순위를 볼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자살률은 사회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20개 지표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표이다. 자살률은 1995년에 0.810, 9위로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중상위에 해당하였으나, 2010년과 2015년에 0.000, 30위로 하락하였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한 지표이다.

제4절 소결

1. 사회통합지수의 국가 비교

사회통합지수는 사회통합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통합의 영역별로 어떤 지표의 수준이 미흡하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의 현재 위치와 향후에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한다.

〈표 4-28〉 1995~2015년 기간 동안 사회통합지수의 변동이 있는 국가

영역	구분	해당 국가
종합지수	상승	벨기에, 에스토니아
	하락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포르투갈, 이스라엘, 미국
사회적 포용	상승	덴마크, 폴란드
	하락	스웨덴, 독일
사회적 자본	상승	스웨덴, 핀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하락	네덜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사회이동	상승	-
	하락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호주, 미국, 슬로바키아
사회갈등과 관리	상승	핀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
	하락	노르웨이, 아일랜드, 포르투갈, 호주, 폴란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지수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산출한 상대 값이다. 사회통합 종합지수를 포함해 개별 영역 및 지표들의 계산 값과 순위의 변동은 사회통합 수준의 변화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위상을 알 수 있게 한다.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국가의 지수값과 순위가 변동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가 동반되었음을 의미하며, 지수 변동의 내용과 그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기

간인 1995~2015년에 사회통합지수값의 변화가 두드러진 국가는 <표 4-28>과 같다. 사회통합의 종합지수와 4개 영역별 지수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 추세를 보인 국가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사회통합지수의 지수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그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벨기에와 에스토니아이다. 벨기에와 에스토니아는 종합지수, 사회적 자본 지수, 그리고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 등에서 지수값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벨기에와 에스토니아의 사회통합지수가 상승한 원인과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통합지수가 개선된 국가는 2개국인데 비해, 하락한 국가는 스웨덴, 독일, 호주, 스페인, 포르투갈, 이스라엘, 미국 등 7개국이다. 호주는 종합 지수, 사회이동 지수,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 등의 3개 지수값이 하락하였다. 스웨덴과 독일은 종합지수와 사회적 포용 지수가, 이스라엘은 종합지수와 사회적 자본 지수가, 스페인과 미국은 종합지수와 사회이동 지수가, 그리고 포르투갈은 종합지수와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지수의 하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서 초래되는 것이나, 동일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국가별로 사회통합지수가 하락한 원인과 그 정도, 그리고 대응 노력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 한국의 사회통합지수

사회통합지수의 국가 간 비교 결과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합지수와 사회적 포용 지수는 지난 20년 동안 순위 변동이 없으며,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는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사회통합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통합지수 산출 결과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격차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성별 임금·고용률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최하위 수준이며, ‘집분위 분배율’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계층, 고용 형태, 성별 등으로 구분된 집단들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이것은 사회통합에 장애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소득과 분배의 격차는 높은 수준의 ‘상대빈곤율’로 연계된다. 상대빈곤율은 최근에 들어와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여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빈곤 감소와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표현하는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과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은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수값과 순위에서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 격차 완화와 계층 간 수직이동을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은 교육에 대한 투자이다. 교육과 관련된 지수값을 보면 ‘교육성취도’는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에 ‘공교육에 대한 지출’은 하위권, ‘학업중도탈락률’은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경쟁을 통한 개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경쟁에 대한 지나친 중시와 더불어 경쟁 과정에서 뒤처진 중도탈락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해석이 나치지 않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 되는 신뢰 역시 불균형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의 참여, 개인 간 관계에서 신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국가 및 공공기관,

언론 등 의사결정권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회통합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살률’이다. 자살률은 사회갈등과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 시점의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자살률은 1995년에 비교 대상 30개 국가 중 9위였으며, 2005년에 29위로, 그리고 2010년에 30위로 하락하였다. 자살률은 사회통합지수를 구성하는 20개 지표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악화된 지표이며,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3.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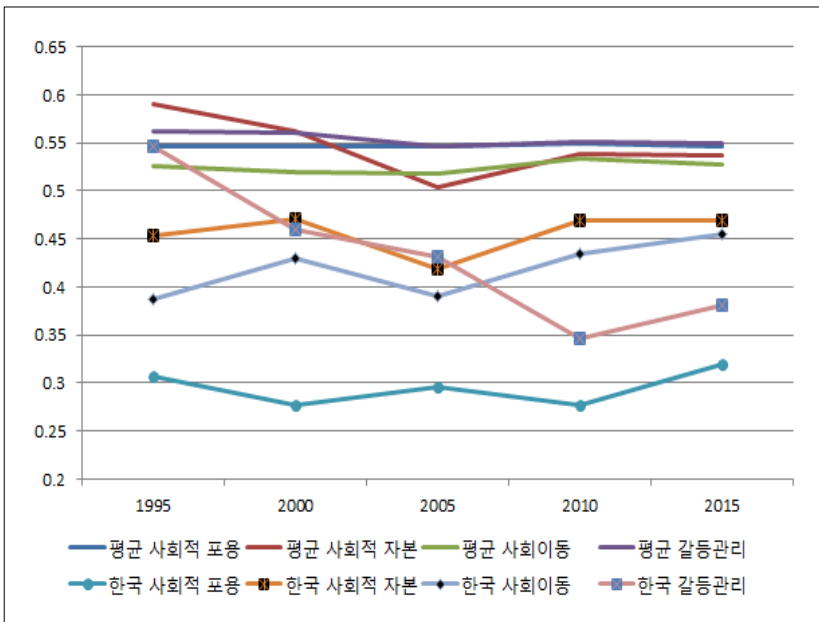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과 개별 지표들을 각각 살펴볼 때는 한국의 문제 상황을 직시하기 어렵다. 지수화 연구의 장점은 이러한 지표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지수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상황은 사회통합 수준이 비록 개선되어 가면서 다른 국가와의 격차를 좁혀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그림 4-2]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한 평가 척도를 적용하였을 때,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적 포용 수준, 사회이동 수준, 사회갈등과 관리 수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자본 수준은 2000년대 중반 약간 하락하였다가, 그 이후 소폭 회복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수준이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2000년대 중반에 크게 하락한 이후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이동 수준은 2000년대 중반 하락하였고, 이후에 회복하고 있

다. 사회적 포용 수준도 최근 들어 어느 정도 다른 국가들을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은 1995년 다른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었으나,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들어서야 이를 일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 10만 명당 10.7명이었던 자살자 수가 2005년 25명, 2010년 31.5명으로 급증하였다. 민주주의지수는 2005년 .78 수준에서 2015년에는 .7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저임금 위험은 2005년 25.4% 수준에서 2015년에는 23.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동소득 분배율도 그 수준은 산출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경우든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 사회통합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 경향



주: 지표의 정규화 방식을 각 관측 연도별로 최소-최대 정규화하지 않고, 전체 관측 연도 중 최소-최댓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임.

지수화 연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표에 대한 접근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일부 지표에서는 문제 상황이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서만 살펴보더라도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지수를 개발한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개별 지표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책 영역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표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가 그러한 값을 나타내게 되는 사회적 상황을 진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유럽연합의 사회통합 모니터링 및 정책 적용 사례

제1절 유럽연합 사회통합정책의 구성

제2절 유럽연합 사회통합지표 구성 체계와 자료 수집

제3절 지표 모니터링 보고 체계

제4절 유럽연합 모니터링 체계의 정책적 함의

5

유럽연합의 사회통합 모니터링 《 및 정책 적용 사례

제1절 유럽연합 사회통합정책의 구성

1.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사회통합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EU)이다. EU는 그 특성상 사회발전의 공통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회원국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유럽 사회의 통합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진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EU 내에서 사회통합지표의 관리와, 이러한 지표 관리가 어떠한 형태로 사회통합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EU 내에서 사회통합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지표란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가 하나의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EU인 만큼 이러한 정책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중첩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크게 보아서 EU는 공동체의 미래상을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이라는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다.³⁵⁾ 2010년 EU 소속 국가들의 합의하에 수립된 이 전략은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세 가지 우선 목표를 정해

35) 이하에서 유럽 2020 전략에 대한 설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0a)의 보고서에서 요약한 것이다.

2020년에 EU가 구상하는 사회를 구체화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우선 목표란 스마트한 성장(smart growth),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세 가지이다.

첫째, 스마트한 성장이란 앞으로의 경제적 성장의 주된 동력을 지식과 혁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미 제조업과 같은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들이 경제적인 중요성을 많이 잃은 시점에서 경제성장의 중심을 분명히 하겠다는 EU의 의도를 드러낸다.

둘째,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경제성장을 도모함에 있어 보다 자원 효율성이 높고 환경 친화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2010년 당시 이미 환경 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많은 국가들에 의해 심각하게 인식되던 시점에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포용적 성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일단 포용적 성장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고용과 사회통합이 그것이다. 즉 포용적 성장이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성장이며, 동시에 사회적 그리고 지리적인 측면에서 통합을 유지하는 형태의 성장이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고용이 언급되는 것은 주로 유럽 학계에서 시작된 개념인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은 주로 노동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의 단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유럽 2020 전략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은 사회적 배제³⁶⁾의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사회통합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노동시장의 통합이라는

3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12)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란 빈곤, 갖가지 기본적 능력의 부족 혹은 장기적 교육기회의 박탈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참여가 제한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노동시장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배제의 결과가 주로 “직업, 소득, 교육, 훈련기회, 그리고 사회 공동체로부터의 유리”로 나타나기에 노동시장과의 연결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지리적 측면에서의 통합을 언급하는 것은 우선 EU에 가입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존의 이른바 ‘서유럽’에 속하는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던 유럽이라는 상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는 할 수 없는 국가들도 EU의 일원이 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국가들과 공동체성을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 EU 자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책무가 된 것이다.

앞의 두 가지 요소는 병렬적으로 포함된 요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럽 2020 전략 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유기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 간단하게 묘사해 보면, 사람들을 EU라는 거대한 공동체로 잘 통합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의 권리를 확고히 하는 일인데, 이에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고용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성장의 결과가 보다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면,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고용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 예컨대 인적 자원의 개발, 노동시장의 현대화, 사회보호망의 확대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 직업훈련과 관련된 교육제도를 정비하고 사회보호망을 강화할 것
- 노동 참여를 늘리고 구조적 실업을 줄이도록 할 것
- 기업가들 사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
- 양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
-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증진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
- 빈곤 및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건강의 불균형을 줄일 것

보다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목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유럽 2020 전략은 위의 여섯 가지 구체적 행동을 EU, 그리고 각 국가의 차원에서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EU 차원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우선순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큰 시범정책안(flagship initiative)³⁷⁾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구체적 행동에 포함돼 있는 요소들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고용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도록 계획된 정책안들이다. 첫째, ‘새로운 기술 발전과 고용을 위한 전략(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으로 이는 그 제목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새로운 직업의 창출에 역점을 두는 정책안이다.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68.4%밖에 미치지 못하는 EU의 낮은 고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로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자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시장 조건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곤 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도 이 정책안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단어이다. 둘째, 시범정책안은 ‘빈곤퇴치를 위한 유럽 플랫폼(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이라고 하는데, 이는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데 강조점을 두는 정책안으로 이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안의 맥락에서 유럽 내 각 지역별 격차(territorial cohesion)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는데, 주로 경제성장의 결실이 지역별로 고루 분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유럽 2020 전략은 노동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 전반의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에 첫 번째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³⁸⁾ 그다음으로

37) 유럽 2020 전략은 전체적으로 일곱 가지의 시범정책안(flagship initiative)이 언급되고 있는데, 본문에 언급된 두 가지 이외에 유럽연합의 혁신(Innovation to Union), 젊은 층의 노동 참여 확대(Youth on the Move), 디지털화의 촉진(A Digital Agenda for Europe), 자원 활용의 효율화(Resource Efficient Europe),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Era)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a).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존엄한 삶이 언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가 유럽 2020 전략 내에서 통합정책(cohesion policy)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대한 헝가리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내놓은 의견을 보아도 사회통합의 강화란 결국 성장과 경쟁력의 강화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EESC, 2011).

2. 유럽 경제·화폐 공동체(EU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³⁸⁾

유럽 경제·화폐 공동체란 2012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경제적 수렴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을 위해 채택한 개념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로 경제발전과 관련된 정책에 강조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더불어 사회정책적 조정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3).

이 유럽 경제·화폐 공동체의 맥락에서 강조되는 사회정책적 조정이란 사실 유럽 2020 전략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유럽 2020 전략이 주로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호 정책도 강화하여 빈곤/사회적 배제를 줄여나가는 것을 사회적 차원에서의 전략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EMU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발전도 1) EMU 안에서 각 국가 간의 고용과 적절한 사회적 보호 정책이 잘 조정될 것 2) 실업(특별히 청년

3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지역협의회(Committee of the Regions)를 대상으로 하여 제출한 경제, 사회, 지역통합에 대한 6차 보고서(Sixth Report on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를 보면 통합정책(cohesion policy)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성장과 고용을 위한 중요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4a).

39) 이 장의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2013)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실업)과 사회적 난관에 효과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3) 연대/재정적 건전성과 개인의 책임 사이의 조화가 지속될 것 4) EU 내 국가 간 노동력 이동이 자유로울 것 5) EU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로 EU 전체 차원에서 고른 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면서 유사한 차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3). 비록 사회통합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 2020 전략과의 조화가 강조된다는 점, 그리고 EMU만의 고유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도 기존의 2020 전략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EMU의 사회정책적 조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의 정책적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존 전략과의 조화를 강조하면서도 EMU는 고용 및 사회정책에 있어 부딪히게 될 어려움들을 미리 탐지해 내고 이에 대비한 사회정책 조정의 원활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적 지표들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시경제적 불균형 대비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s Procedure: MIP)를 통해 경제적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정이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시도하며, 이러한 절차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비상경보 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AMR)의 작성을 각 국가에 의무화하고 있다. 이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서술해 보면 우선 EU 내의 각 국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비상경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는 유럽 2020 전략을 위한 지표와 함께 실업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위험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부수적 지표들도 포함하고 있다.⁴⁰⁾ 이렇게 비상경보 보고서가 작성되면 정기적으로

40) 여기에 포함되는 지표들은 비교적 표준적인 안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의 토의로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층점검(In-Depth Reviews)이 이루어지게 되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거시경제적 안정성, 특별히 ‘호황과 불황(boom and bust)’을 거듭하는 경제 주기로부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고 집행된다.

제2절 유럽연합 사회통합지표 구성 체계와 자료 수집

1. 유럽 2020 전략의 모니터링 지표

앞에서 언급된 다양한 우선순위와 시범정책안에 의한 사회적 변화를 살피기 위해 유럽 2020 전략은 다섯 가지 주요한 달성 목표(headline targets)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 목표를 보다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지표도 분명히 설정하고 있다. 유럽 2020 전략의 주요 지표 및 달성 목표는 다음 <표 5-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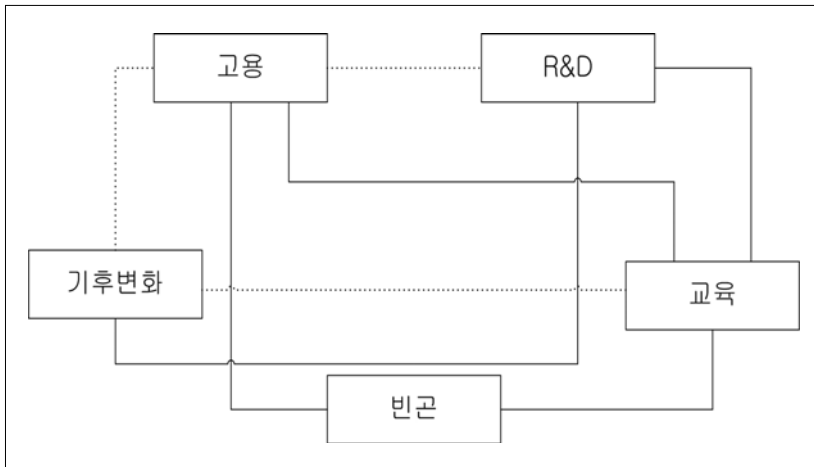
<표 5-1> 유럽 2020 전략의 주요 지표 및 달성 목표

지 표	달성 목표
노동가능인구 고용률	- 75% 이상의 고용률
GDP 중 R&D 투자율	- 3% 이상의 GDP 대비 R&D 투자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 온실가스 배출 -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 에너지 효율성	- 1990년 수준에서 20% 감소 - 20%까지 비중 증대 - 20% 효율성 향상(1차적/최종 에너지소비)
학업 조기 탈락자 비율/대학 이상 교육자 비율	- 조기 탈락자 비율 10% 이하 - 대학 졸업자 비율을 전체의 40%까지 향상 (30~34세 범위에서)
빈곤/사회적 배제의 위기에 처한 인구 비율	- 2000만 명 이상 빈곤/사회적 배제의 위기에서 탈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b). p.17.

위 <표 5-1>에서는 지표가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 듯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는 고용률, R&D 투자, 온실가스 배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1차 에너지(primary energy)⁴¹⁾ 소비효율성, 최종 에너지(final energy) 소비효율성, 조기 탈락자 비율, 대학 졸업자 비율, 빈곤/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인구 비율의 아홉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Eurostat, 2015).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지표들이 앞에서 언급된 3개의 우선순위, 혹은 7개 시범정책안 등과 일대일 대응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나의 큰 체계를 이루어 유럽 사회의 변화를 알려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 체계의 모니터링에 있어 실질적인 자료의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통계청(Eurostat)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2020 전략의 주요 달성 목표들은 다음 [그림 5-1]과 같이 연결된다(Eurostat, 2015).

[그림 5-1] 유럽 2020 전략의 주요 달성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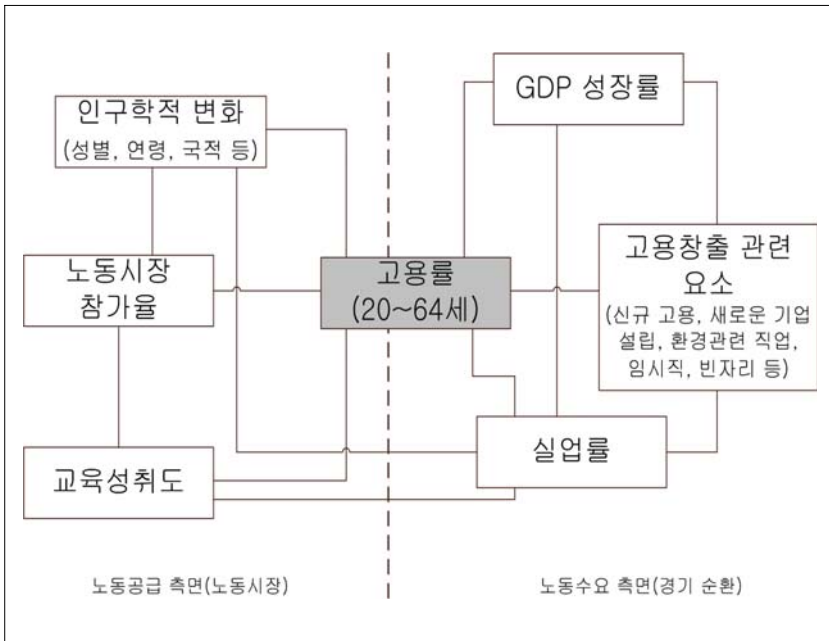


자료: Eurostat(2015). p.17.

41) 자연 상태에서 크게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위의 달성 목표들 중 사회통합 정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고용과 빈곤에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고용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고용률이란 사실 간단한 지표의 하나이지만 유럽 2020 전략에 있어서는 결과로서의 고용률을 상정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말하자면 고용률을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혹은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동시에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고용률과 관련된 지표들을 개념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유럽 2020 전략의 고용률 관련 지표



자료: Eurostat(2015). p.26.

[그림 5-2]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용률이란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들 변수는 또한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유럽 2020 전략의 다른 달성 목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지표로서 고용률 모니터링은 단순히 고용률만을 측정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위 [그림 5-2]에 나타난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한다.

고용률의 측정에 있어 EU에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 실업, 비경제활동인구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통계자료로는 두 가지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게 되는데, 우선 사용되는 것은 유럽 노동시장 조사(EU Labour Force Survey: EU-LFS)이다(Eurostat, 2015). 이 조사는 시설거주자를 제외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럽 전역에서 실시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서베이 조사로 피고용인, 실업자, 비경제활동자로 나누어 조사가 실시된다. 어떤 기준이 되는 한 주간을 정하고 그 주에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활동한 것들을 조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와 연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의 국경을 넘어 직장에 다니는 경우도 많은 유럽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데이터의 정리를 위하여 각 응답자들은 직장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는 관계없이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⁴²⁾ 두 번째로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각 국가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인데, EU에서는 1995년부터 이미 유럽 국민계정산출 시스템(the European System of Accounts: ESA)이라는 규약을 정해 두고 표준화된 거시경제적 지표들을 산출하고 있고, 2010년 들어 개정된 새로운 규약(ESA 2010)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Eurostat, 2013), 여기에서

42) Eurostat 홈페이지에 있는 EU LFS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요약하였다.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EU_labour_force_survey_%E2%80%93_main_features_and_legal_basis).

산출된 데이터도 유럽 2020 전략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각종 지표의 중요한 자료원이 된다.

다음으로는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지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지표는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비율인데, 이것은 어떤 하나의 지표는 아니고 세 가지 세부 지표를 정하여 이 세 가지 지표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들의 수를 중복되지 않게 더한 것이다. 중복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비율로 계산하면 혼란이 예상되었던 관계로 비율보다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수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으며, 2010년 유럽 2020 전략이 세워질 당시 1억 1700만 명 정도가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추정되었기 때문에, 이 중 2000만 명을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Eurostat, 2015).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의 위기(the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라는 지표는 세 가지의 하위 지표로 구성된다. 첫째는 기존의 ‘빈곤’ 개념과 비슷한 금전적 개념의 지표인데(monetary poverty), EU에서는 이전 후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계산하며 빈곤선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60%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 2020 전략에서는 직접적으로 빈곤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빈곤의 위기에 있는(people at risk of poverty)”이라는 개념으로 이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활용되는 하위 지표는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는 사람들(severely materially deprived people)’인데, 총 9개의 질문을 던져 그중 4개 이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다면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표이다. 이때 9개 질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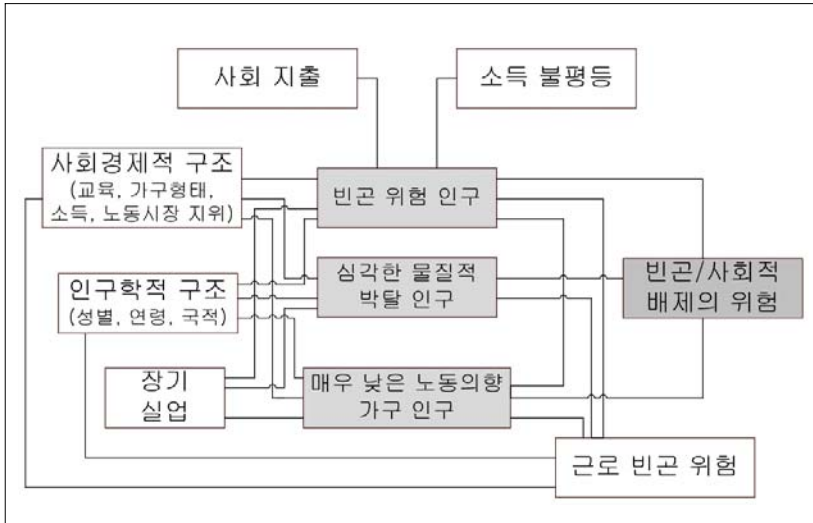
1. 방세 혹은 각종 공공요금을 낼 수 있다.
2. 집에 난방을 할 수 있다.
3. 예기치 않은 가계지출을 할 수 있다.
4. 이틀에 한 번씩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5. 일 년에 일주일의 휴가를 떠날 수 있다.
6. 차를 소유하고 있다.
7. 세탁기가 있다.
8. 컬러 TV가 있다.
9. 전화기가 있다.

마지막으로 활용되는 하위 지표는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설문 이전 해에 가족구성원 중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총 시간의 20%이하의 시간만 일한 사람의 수이다. 이 지표는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려는 의지를 묻는 것으로 만약 이 질문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가 많다면 그 가구는 노동의향(work intensity)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배제라는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하위 지표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를 모두 합하여 결과인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의 위기에 처한 사람의 수를 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들은 한 가지의 위험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활용 가능한 최근 자료는 2013년의 자료인데, 2010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1억2140만 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⁴³⁾

이렇게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지표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경우도 앞의 고용률 지표의 경우처럼 하나의 지표로만 모니터링을 행하지는 않는다. 주요 지표는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종합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도 함께 관측되고 기록되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 5-3]이다.

43) 인구 대비 비율로는 24.4%가 된다(Eurostat, 2015).

[그림 5-3] 종합적인 맥락 파악을 위한 유럽 2020 전략 지표



자료: Eurostat(2015). p.136.

[그림 5-3]에 따르면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라는 변수는 세 가지 하위 변수에 의해 측정되며, 이 변수들은 각각 가구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 인구학적 구조, 장기실업, 정부 사회지출, 소득 불평등 등의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며, 근로빈곤의 위험이라는 변수에 의해 다시 한번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즉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 충분한 모니터링이 함께해야만 원하는 수준까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측정되는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자료원은 소득 및 생활조건에 대한 전 유럽 차원의 대규모 조사인 유럽연합 소득 및 생활실태 통계(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 EU-SILC)이다.⁴⁴⁾ 횡단적으로는 유럽연합 내 국가들에 거주

하는 약 13만 가구의 27만 명의 가구원들을 조사하고, 종단적으로는 10만 가구에 속하는 약 20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하도록 설계된 이 조사는 각종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EU 내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와 그 안에 있는 가구원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간단한 정보에 대한 전수 서베이와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가 병행되고 있다.⁴⁵⁾ 이 조사의 특징은 일반적인 주요 사회지표를 위한 조사들과는 다르게 어떤 표준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매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프레임워크 형태의 조사라는 점인데, 프레임워크 조사를 진행하는 유럽통계청은 최소한의 조사 가이드라인과 조사 형태, 가구와 소득 등 주요 개념의 정의, 각종 정보 분류(산업 분류 등) 기준만을 정해둔 채로 매년 각 국가가 유럽통계청에 제출하는 주요 변수(target primary variables)와⁴⁶⁾ 4년마다 혹은 그보다 더 넓은 간격으로 제출하는 2차 변수들(secondary variables)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행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본적 개념 덕분에 이 조사는 대규모 사회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묻는 변수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질문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당히 다차원적인 개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EMU하에서의 지표 체계 구성

유럽 2020 전략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EMU하에서의 사회적 목표, 즉 고용의 유지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

44) 이하의 설명은 Eurostat 홈페이지(ec.europa.eu/eurostat)에서 제공하는 EU SILC 홈페이지(<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45) 16세 이상의 표본가구원은 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고 15세 이하의 가구원은 인적 정보에 대한 간단한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한다.

46) 그렇다고 해도 EU SILC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가 Europe 2020 전략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여러 변수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행위위원회는 단순한 종합지수보다는 다양한 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성적표(scoreboard of key indicators) 방식의 지수 관리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수들은 일단 비상경보 보고서(AMR)에 포함되어 이후 논의의 기본적인 자료로 역할하게 되는데, 이때 비상경보 보고서에 포함된 지표들의 목록⁴⁷⁾은 다음 <표 5-2>와 같다.

<표 5-2> 비상경보 보고서(AMR)에 포함된 지표

구분	지표	목표인구집단	자료 수집
기본 지표	실업률	노동시장참가자	LFS (연간 변화)
	NEET 비율 (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청년(18~24세)	LFS (연간 변화)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 변화	전체 인구	각국 국가계정
	빈곤위기자 (At-Risk-of-Poverty) 비율	노동가능인구	EU SILC (연간 변화)
	소득불평등(소득 5분위 중 4분위/2분위 소득비율)	전체 인구	EU SILC
부수 지표 ¹⁾²⁾	노동시장 참가율	노동가능인구(15~64세)	LFS
	장기실업률	노동시장참가자	LFS
	청년실업률	15~24세의 노동시장참가자	LFS
	빈곤/사회적 배제 위기자 비율 (At Risk of Poverty/Social Exclusion: AROPE)	전체 인구	EU SILC

주: 1) 부수지표들은 모두 시계열적인 변화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2) 여기에 있는 부수지표들은 2014년 유럽정책협의(European Semester)에서 추천된 것들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Annex.

47) 여기에 포함된 부수지표들은 매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그리고 유럽연합 이 사회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여기서 각 주요 지표들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실업률의 경우는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발전 정도와 사회통합의 정도, 경쟁력과 생산성의 손실을 드러내는 지표로 도입되어 있다. 노동시장 참여가 사회적 포용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따라서 사회통합의 주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만큼 가장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유럽 2020 전략과의 유기적 연결을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NEET 비율은 무엇보다도 유럽에 독특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청년실업률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청년층에서 고용 가능성과 동시에 생산성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지표이며 동시에 청년층이 받는 교육/기술 수준이 실제 경제적 상황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로도 인식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있는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 변화는 기본적으로 총수요(aggregate demand)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며,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네 번째에 있는 빈곤위기에 있는 사람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EMU가 경제적 수렴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곤’의 개념보다는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는 해도 여전히 경제적, 특별히 금전적인 요소만을 고려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회통합 혹은 사회적 포괄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좁은 개념이다. 소득불평등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시장의 분화 정도를 보여 주는 주요한 지표이면서 동시에 기회의 평등, 사회통합 정도까지 보여 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한편 보조지표들은 위의 주요 지표들의 의미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노동시장 참가율은 실업률이 보여 주지 않는 노동시장 참가와 탈출이라는 잘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현상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 특별히 장기적인 실업의 여파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를 아예 포기하는 사회구성원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업률과는 다른

상당히 복합적인 정보를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장기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 주는 지표인데, 노동시장의 이분화 현상부터 기술과 일자리의 부조화라는 현상까지 다양한 현상에 대한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청년실업률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실업률이 보여 줄 수 없는 정보를 제시해 주는 지표인데, 주로 노동시장에서 별로 높지 않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시해 준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일찍부터 시작된 실업 상황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사회적 배제의 위기에 있는 사람의 비율은 자연스럽게 주요지표인 빈곤위기 비율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앞의 지표보다 보다 사회통합이라는 현상을 잘 드러내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EMU의 지표 체계를 이해하는 데 또 하나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앞에서 서술한 지표들을 이해할 때 단순히 지표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척 강조한다는 점이다. 유럽 2020 전략이나 EMU의 사회적 목표에 대한 관심 모두 워낙 복잡한 사회 현상들에 대한 지표이므로 단순한 이해는 정책적 개입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존 사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에 큰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정보원들, 예컨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고용위원회(The Employment Committee)에서 주관하는 고용성과 모니터링(The Employment Performance Monitor: EPM)의 결과라든지, 역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사회보호 위원회(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 SPC)에서 관리하는 사회보호성과 모니터링(The Social Protection Performance Monitor: SPPM)의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MU의 사회적 지표들을 해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제3절 지표 모니터링 보고 체계

1. 유럽 2020 전략에 따른 결과 보고 체계

앞에서 언급된 지표들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실질적 과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산하에 있는 유럽통계청(Eurostat)에서 담당하게 되며, 여기에서 2013년 후반부터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Indicators to Support the Europe 2020 Strategy’라는 제목으로 공식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Eurostat, 2015). 이 정보는 다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공식 문서를 통해 일단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 지역협의회(Committee of the Regions) 등 EU 내의 정책기관들로 수시로 보고되고(European Commission, 2014b), 공식적으로는 매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연간 진척도 평가 서베이(Annual Growth Survey: AGS)를 제출하여 유럽의회뿐만 아니라 각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협조하에 새로운 정책 목표를 잡고 지금까지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이상의 보고 체계가 EU 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유럽연합 내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유럽 2020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성과를 거두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국가들은 매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국가개혁 프로그램(National Reform Programmes: NRP)의 진행 성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게 된다. 이 제출된 보고서는 지금까지 각 국가별로 유럽 2020 전략에 따라 설정한 목표의 달성이 진행되는 정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b). 또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이 국가

별 성과들을 합당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단순히 각 국가로부터 보고된 보고서를 종합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고용위원회(The Employment Committee: EMCO) - 사회보호 위원회(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 SPC)가 공동으로 공동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Joint Assessment Framework: JAF)에 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주로 고용 부문에 집중하여 각 국가들의 성취 결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지만⁴⁸⁾, 사회보호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이러한 고용 부문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려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유럽연합 전체 차원의 평가를 위한 연간 진척도 평가 서베이(AGS)와 각 국가 차원의 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유럽연합 이사회는 고용·사회정책·보건·소비자 이사회(Employment, Social Policy, Health and Consumer Affairs Council: EPSCO) 모임을 갖고, 여기에서 한 해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⁴⁹⁾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의회와 함께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체인 만큼 이 평가의 결과는 다음 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된다.

48) JAF는 EU 차원의 고용 가이드라인(the Employment Guidelines under Europe 2020)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고용성과모니터(Employment Performance Monitor)의 지속적인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49) 이 평가결과는 “AGS에 대한 이사회 결론(Council Conclusions on the Annual Growth Survey)”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데, 이 발표문은 Europe 2020 전략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유럽 전체의 정책적 평가를 다루고 있다(Council of the EU, 2016).

2. EMU 모니터링 결과의 보고 체계

앞에서 서술한 유럽 2020 전략과는 다르게 EMU는 각 국가 간 정책, 그것도 경제정책의 조정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회통합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보고 체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EMU 모니터링의 결과는 비상경보 보고서의 제출과 심층 점검을 통해 매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그리고 유럽연합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고서와 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바탕으로 이들 정부기관은 비상경보 보고서에 포함될 새로운 지표들을 결정하기도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3). 이때 지표가 결정되는 논의는 우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의 논의로 시작되며, 유럽연합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연간 진척도 평가 서베이(AGS)의 일부로 통합고용보고서(Joint Employment Report)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작성하여 유럽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3. 실질적 지표 관리의 예

여기에서는 앞에서 열거된 여러 보고서들이 실제로 보고되는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유럽 2020 전략에서 정의된 지표들은 앞서 언급된 주요 목표 지표(headline indicators)들이 매년 작성되어 보고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Indicators to support the Europe 2020 strategy’라는 제목으로 매년 출간된다. 2016년판 보고서의 내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Eurostat, 2016).

〈표 5-3〉 유럽 2020 전략의 2016년 주요 목표 지표 수준

구분	지표	단위	기준 연도						목표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취업	20~64세 인구의 취업률		70.3	68.6	68.4	68.4	69.2	70.1	75
	- 남(20~64세)		77.8	75	74.6	74.3	75	75.9	
	- 여(20~64세)		62.8	62.2	62.4	62.6	63.5	64.3	
R&D	GDP 대비 투자비율	% of GDP	1.85	1.97	2.01	2.03	2.03		3
기후 변화	1990년보다 온실가스 20% 감축	index 1990=100	90.29	82.99	81.8	80.24	77.05		80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증가		11	13.1	14.3	15	16		20
	1차 에너지 소비량	동등량 석유환산 (백만 톤)	1,693	1,593	1,584	1,569	1,507		1,483
		index 2005=100	98.8	93	92.5	91.6	88		
		절감률(%)	2.6	9.5	10.5	11.8	15.7		
	최종 에너지 소비량	동등량 석유환산 (백만 톤)	1,180	1,105	1,105	1,106	1,061		1,086
		index 2005=100	99	92.7	92.7	92.8	89		
		절감률(%)	3.3	11.3	12.1	12.8	16.9		
	조기 탈락자 비율 10% 미만으로 감소	18~24세 인구 중 비율	14.7	13.4	12.7	11.9	11.2	11	10
		남	16.6	15.3	14.5	13.6	12.8	12.4	
		여	12.7	11.5	10.9	10.2	9.6	9.5	
교육	30~34세 인구의 40% 대학교육	30~34세 인구 중 비율	31.1	34.8	36	37.1	37.9	38.7	40
		남	28	31	31.8	32.8	33.6	34	
		여	34.3	38.6	40.2	41.4	42.3	43.4	
빈곤 및 사회적 배제	EU 27개 국가에서 빈곤자 2000만 명 감소: 빈곤자 수	누적 차이 (천 명)		3,437	6,371	5,455	4,725		
	노동을 거의 하지 않는 가정에 속한 사람 수	천 명		39,510	39,712	40,999	41,909		
		전체 인구 중 비율		10.5	10.5	10.9	11.2		
	이전소득 이후에도 빈곤한 가정에 속한 사람 수	천 명		83,747	83,911	83,255	86,266		
		전체 인구 중 비율		16.8	16.8	16.7	17.2		
	심각한 물질적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 수	천 명		43,953	49,450	48,034	44,588	45,239	
		전체 인구 중 비율		8.8	9.9	9.6	8.9	9.1	

자료: Eurostat(2016).

〈표 5-3〉은 지표의 변화를 2008년부터 나타낸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보고서 전체의 내용을 드러내는데, 전반적으로 목표의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취업이라든가 R&D 투자 비율 등의 변수에서는 목표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표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경향을 보다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지표들에 대해서는 유럽통계청(Eurostat)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제4절 유럽연합 모니터링 체계의 정책적 함의

이상 유럽연합의 사회통합지표 관리 체계를 알아보았는데, 우리의 사회통합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은 사회통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고용과 빈곤의 문제로 주목하고 있다. 이 중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시장과 직접적인 관계하에서 파악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유럽연합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세대 간 갈등이라든가 지역 간 갈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여러 민족국가가 모인 하나의 초국가적 정치연합체라는 독특한 본질에 걸맞게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정책적 강조는 최근 들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 있어 사회통합의 개념은 추상적인 통합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노동시장 참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드러내는 지표로 이해되었던 실업률과 같은 지표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사회통합지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우리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인데,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지표의 개발과 유지에 있어 어떤 새로운 지표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지표들이 지칭하는 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통합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회통합이란 사회적 배제라든가 다른 수많은 개념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개념이기에 그 독특한 정의에 대한 의견이 아직까지도 매우 다양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사실상 기존의 논의에 다른 하나의 의견을 더하는 작업으로 끝날 우려가 높는데, 이것이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일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적 활용도가 있는 지식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유럽연합이 내세우는 사회통합 모니터링 지표는 대단히 익숙하지만,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의 진중함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앞에서 충분히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흔히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정책의 가장 주요한 영역으로 강조되는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유럽 2020 전략을 설명한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거나 중등교육 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경제적 기반이 지식기반 사회로 넘어감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도 그 목표를 중등교육 조기 탈락자를 줄이고 대학졸업자를 늘려서 사회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강조되곤 하던 노동의 유연성을 넘어서서 보다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노린다는 점에서 기존의 목표와 구별되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뒀으로써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노동 공급의 측면에서만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 빈곤/사회적 배제의 퇴치나 R&D, 심지어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사회적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

러한 사실은 교육이 아직도 노동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큰 의미를 갖는 우리의 현실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 주는 중요한 정보인 것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6년 연간 진척도 평가 서베이(AGS)에서도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고 있지만, 단순한 교육에 대한 강조보다는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인적 자원의 개발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을 취업이라는 경로를 통해 보다 넓은 사회통합이라는 가치와 연결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European Commission, 2015).

셋째, 유럽연합에서 사회통합지표들의 선정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지표들이 누구에 의해 관리되고 어디에 보고되며, 어떠한 정책들과 연결될 것인지가 상당히 분명하게 미리 밝혀져 있다는 점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사회통합이란 매우 복잡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관리하는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형태의 지표들이었고, 그 숫자도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러한 지표들을 경험적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기관부터 지표들이 작성된 후 보고되어야 할 기관, 그리고 이러한 지표의 해석이 반영되어야 하는 정책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사전에 정해두고 있었다. 앞서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유럽연합은 그 특성상 국가들이 모인 초국가적 연합체이기에 이러한 보고체계는 상당히 복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잘 정의된 절차와 기관이 있기에 그 운영에 큰 혼란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유럽 2020 전략과 관련된 지표 관리 체계만 생각해 보아도 유럽 2020 전략을 각 국가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한 기준들에 맞추어 작성된 각 국가로부터의 보고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고용위원회(EMCO) - 사회보호 위원회(SPC)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최종적으로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 정보를 보고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적,

초국가적 집행단위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사전적인 정책 지식 활용의 구상은 각국 정부로부터 유럽연합의 집행기관까지 각 행위자들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알게 함으로써 지표의 유지와 관리 자체를 더욱 원활하게 하는 자기실현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위에서 언급된 전반적인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천하고 있는 실질적인 조사를 위한 노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용률이라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지표의 측정을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EU-LFS라는 유럽 최대 규모의 서베이 조사를 주된 정보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는 각 국가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 국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훨씬 뛰어넘는 상당한 규모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들인데, 이러한 자료들의 생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함은 실질적인 의미의 지표 체계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인 EU-SILC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횡단적으로는 유럽연합 내 국가들에 거주하는 약 13만 가구, 27만 명의 가구원들을 조사하고, 종단적으로는 10만 가구에 속하는 약 20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하도록 설계된 이 조사는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예산과 조직을 요구하는 사업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조사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EU-SILC에 대응할 만한 사회적 조사는 별로 없으며, 몇몇 패널 자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EU-SILC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대응할 만한 깊이와 범위를 가진 조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지수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그 기반이 되는 정보를 위한 조사도 정책적 관심의 중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제 6 장

결론 및 정책 방안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 방안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통합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수 개발 과정에서는 우리의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는 지표 체계 및 가중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의 4개 하위 영역을 설정하였다.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을 1) 사회적 포용-‘사회구성원이 사회 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 2) 사회적 자본-‘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 및 관용의 정도, 참여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3) 사회이동-‘직업, 소득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조건 및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역량’, 4) 사회갈등과 관리-‘사회적 조건, 인식 수준에서 확인되는 갈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모두 19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과 지표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사회통합지표 체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격차와 관련된 지표가 다수 포함되었다. 성별 격차, 십분위 분배율,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노동소득 분배율,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과 같은 지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가 사

회통합의 주요 지표로 제시된 것은 계층 간 격차 확대 및 고착화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표 개발 단계 이후에는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칠레, 라트비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및 터키를 제외한 30개국을 비교하였으며,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1995년부터 5년 주기의 5회 관측 시점 모두 29위를 보였다. 사회적 포용 영역은 5번의 관측 시점에서 모두 30위를, 사회적 자본은 22, 23위를 유지하였다. 사회이동은 2000년 잠깐 22위를 기록하였지만 26, 27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은 21위에서 26위로 하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사회통합지수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지수의 개발에 그치고, 이후 단계에서는 사장되는 현실을 고려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사회통합 모니터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그 예로 유럽연합의 사회통합 모니터링 사례를 찾아보았다. 유럽연합은 고용 관련 이슈,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등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조, 인구학적 구조, 장기실업, 정부 사회지출, 소득불평등과 같은 변수를 두루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모니터링의 포괄성에 덧붙여, 이들은 체계적 관리를 시도하고 있었다. 즉 지표의 작성 기관, 그리고 그것의 변화 의미, 그리고 반영되어야 하는 정책까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종합지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4개 하위 영역 중에서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세부 개별 지표에서는 일부 지표의 경우에는 상황 개선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지수화 연구는 종합적인 상황 변화를 진단할 수 있지만, 세부 내용별로는 변화의 경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정책 영역별, 각 지표별 관계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의 경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크게 5개 시점의 스냅샷(snapshot)만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실시하기는 어려웠다. 물론 일부 지표는 상당히 긴 관측 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지표 일부를 활용한 해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섰다. 따라서 개별 지표들을 이용한 영향력 분석은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한편으로는 사회통합의 각 정책 영역별 변화를 통해 인과관계를 대략적으로나마 유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지표 체계가 사회통합의 상태와 조건을 인과관계의 구조를 설정하고 구축된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지나친 해석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단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인과관계 설정 및 정책 우선순위 도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합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과, 모니터링 과정 내에서 지표 간의 유기적 연관성 설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제2절 정책 방안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회통합지수 및 한국의 순위는 한국의 당면한 사회 현안을 중요시하는 지표 선정 및 가중치의 결과로 도출된 값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결과이다. 그렇지만 사회통합의 영역 및 지표 설정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당면한 문제적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관련 정책 영역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사회통합 정책 영역에서 관리해야 할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미 정해식 등(2014)은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포용성, 사

회적 역능성이라는 3개 정책 영역에서 8개의 삶의 영역(고용, 소득/구매력, 주거, 건강과 사회적 보호, 영양, 교육, 문화, 정보/의사소통)에서 필요한 성과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해식 등(2014)은 이러한 지표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 지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지표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사회통합 수준의 제고를 정책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통합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표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통합과 관련된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주관적 계층 인식, 사회신뢰 인식, 행복감, 갈등 인식 등의 주관적 요소와 사회이동의 경험, 현재의 소득 및 직업계층 등 객관적 요소 등을 이용하여 사회통합 하위 요소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은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 및 요소 간의 인과관계 등을 밝힘으로써 한국 사회가 보다 더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 영역을 명확히 할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표의 생산 방법 및 관리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의 현 실태를 적시에 진단할 수 있는 사회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의 사회통합 실태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모듈 방식(module) 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조사들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제 영역 간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회통합 관련 사회조사의 체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사회통합과 관련한 개별 지표의 경고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정책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회통합 관련 지표는 두서너 개의 정책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관리 모델에서 살펴보면, 고용률이라는 지표만 하더라도 인구학적 변화, GDP 성장률, 노동시장 참가율, 교육성취도, 고용창출 관련 요소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앞서 이러한 지표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면, 각 해당 정책 영역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정책 대응 기관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다. 특히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및 갈등 실태진단을 목적으로 국민대통합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민통합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지표 모니터링 체계는 국민대통합위원회 내부에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사회통합지표의 주요 변화 및 세부 정책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예를 들어 노인빈곤율)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개별 부처에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통합과 관련한 개별 지표의 생산 이후 지표의 세부적인 해석 단계에서 대통합위원회가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회통합과 관련된 개별 지표들마다 정책 목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정부는 각 개별 정책 영역에서 각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사회통합 하위 지표와 무관하게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국제적 수준을 고려한 정책 목표를 세우는

5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각 조사 시기마다 주제를 달리하고 있다. 2014년에는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 조사」, 2015년에는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년에는 「사회통합 국민인식 조사」를 조사명으로 하였다.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일괄하여 관리하고, 그 수준이 달성되었을 때 한국이 어느 정도의 사회통합 수준을 보일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 역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같이 현 단계의 사회적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정부 기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통합의 국제적 수준을 비교한 결과도 이러한 목표선 설정에 일조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 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노대명, 전지현, 박수진. (2011). 한국 사회통합지표연구(Ⅱ).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이현주, 김석호, 박수진, 박은경. (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일. (1999). 수리적 기법에 의한 평가모형체계의 가중치 부여방식에 관한 논의. 한국행정학보, 33(4), pp.243-258.
- 김태환, 김광익, 류승한, 변필성, 황승미. (2004).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I). 국토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등.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준. (2015). OECD 고용보호지수: 의미, 한계, 시사점. 이슈와 논점, 951호. 국회입법조사처.
- 노대명, 강신욱, 전지현. (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이현주, 강신욱, 강은정, 전지현 등.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현호, 차종천, 이정우, 박종민, 김명언 등. (2005).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인식의 변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등.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동원, 박준, 강민형, 채승병, 최홍. (2009).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CEO Information, 722. 삼성경제연구소.

- 이병희. (2015).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25-42.
- 이상헌. (2014).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43, pp.67-99.
- 이재열, 조병희, 장덕진, 유명순, 우명숙, 서형준.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 비교. 한국사회정책, 21(2).
- 장용석, 이영섭, 박명호, 오완근, 한상범. (2011).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III): 공정사회지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영호, 고숙자. (2014).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2012).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복지 국가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정해식. (2014). 국민통합의 개념과 필요성. 보건복지포럼, 218호, pp.6-17.
- 정해식. (2015).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 통합 상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제 221호, pp.23-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유진영, 김성아. (2014).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성아. (2015).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015. 9. pp.75-88.
- 조병구, 이용수, 이경영, 이승주, 어수하, 박명호 등. (2015).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채창균, 민주홍, 양정승, 정지운. (2015).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The HRD Review, 83-0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토마 피케티. (2014). 21세기 자본. 서울: 중신출판사.
- 통계청.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일자리선택동기별/근로형태별구성비. (2016. 10. 24. 인출).
- 홍장표. (2014).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 평론, 43, pp.101-138.

- Alidadi, F., Arias, J., Bintrim, R., Miller, M., Rotto, A., R., Tummino, A. (2015). The Social Inclusion Index 2015. *Americas Quarterly*, Vol 9, No 3.
- Americas Quarterly. (2012). *The Social Inclusion Index 2012*. Americas Quarterly, Spring.
- Americas Quarterly. (2013). *The Social Inclusion Index 2013*. Americas Quarterly, Summer.
- Armingeon, Klaus, Christian Isler, Laura Knöpfel, David Weisstanner and Sarah Engler. (2015).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1960-2013*. Bern: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Berne.
- Berger-Schmitt, R. (2000). *Social Cohesion as an Aspect of the Quality of Societies: Concept and Measurement*. EuReporting Working Paper, No. 14. Centre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ZUMA). Canberra Group. (2011).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Second Edition*.
- Cazes, S., Hijzen, A. & Saint-Martin, A. (2015).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The OECD Job Quality Framework*.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74. OECD Publishing.
- Chan, J., To, H.-P., Chan, E. (2006).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ing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2).
- Council of Europe. (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Belgium: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6). *Council Conclusions on the Annual Growth Survey*. Press Release, Jan. 15th.

- Dragolov, G., Ignacz, Z., Lorenz, J., Delhey, J., Boehnke, k.,(2013). *Social Cohesion Radar: Measuring Common Ground,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Cohesion*. BertelsmannStiftung.
- European Commission. (2010). The Employment Committee, and 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10). Foundations and Structures for a Joint Assessment Framework(JAF), including an Employment Performance Monitor (EPM) to monitor the Employment Guidelines under Europe 2020. COM-EMCO-SPC Report to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Brussels.
- European Commission. (2010a). *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10) 2020 final. Brussels.
- European Commission. (2010b). *The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 European Framework for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2010) 758 final. Brussels.
- European Commission. (2012).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in Europe 2011*.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2013). Strengthening the Social Dimension of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M(2013) 690 final. Brussels.
- European Commission. (2014a). *Sixth Report on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Investment for Jobs and Growth*.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2014) 473 final. Brussels.
- European Commission. (2014b). *Taking Stock of the Europe 2020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2014) 130 final. Brussels.
- European Commission. (2015). *Annual Growth Survey 2016: Strengthening the Recovery and Fostering Convergence*. COM(2015) 690 final. Brussels.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1).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the Role and Priorities of Cohesion Policy within the EU 2020 Strategy*. ECO/291. Brussels.
- Eurostat. (2013). *European System of Accounts - ESA 2010*.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Eurostat. (2015).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Indicators to support the Europe 2020 Strategy*. 2015 Edition. Eurostat Statistical Books. Brussels.
- Eurostat. (2016).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Indicators to support the Europe 2020 Strategy*. 2016 Edition. Eurostat Statistical Books. Brussels.
- Freedom House. (2016). *Freedom in the world*. (www.freedomhouse.org) (Accessed on 19 October 2016).
- ILO. (2016a).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by sex and age(%)*. ILOSTAT Database. (Accessed on 19 October 2016).

- ILO. (2016b). *Days not worked per 1000 workers due to strikes and lockouts by economic activity(data from ILOSTAT)*. (Accessed on 8 November 2016).
- ILO. (2016c). *Share of youth not in employment and not in education by sex(%)*, ILOSTAT Database(Accessed on 08 November 2016).
-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2016). *Indices of Social Development*. (www.indsocdev.org) (Accessed on 04 November 2016).
- Jung, H.-S., Kim, S.-W. & Ahn, S.-H. (2014). Multidimensional Inequality in South Korea: An Empirical Analysi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8(2), pp.170-191.
- Kaufmann, D., Kraay, A. & Mastruzzi, M. (2010).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Methodology and Analytical Issu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LIS. (2016). *LIS Key Figures Dataset* (Accessed on 17 October 2016)
- Nicoletti, G., Scarpetta, S. & Boylaud, O. (2000). *Summary indicators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with an extension to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26.
- OECD & EC JRC.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OECD Publications.
-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2). Labour Losing to Capital: What Explains the Declining Labour Share?.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pp.109-161.
- OECD. (2014a). *Calculating Summary Indicators of EPL Strictness: Methodology*. OECD Publishing.
- OECD. (2014b).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 OECD. (2015a).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 OECD. (2015b).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6a). 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654-en> (Accessed on 17 October 2016).
- OECD. (2016b). Earnings: Gross earnings: decile ratios,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302-en> (Accessed on 19 October 2016).
- OECD. (2016c).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166-en> (Accessed on 8 November 2016).
- OECD. (2016d). *Labour Market Statistics: Involuntary part time workers: incidence*.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 OECD. (2016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temporary employment,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319-en> (Accessed on 19 October 2016).
- OECD. (2016f).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http://dx.doi.org/10.1787/72d1033a-en) (Accessed on 13 September 2016).
- OECD. (2016g). Health status. *OECD Health Statistics(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540-en> (Accessed on 19 October 2016).
- OECD. (2016h). *Job quality*.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e357cdbf-en>

- (Accessed on 19 August 2016).
- OECD. (2016i). *Unit Labour Costs-Annual Indicators: Labour Income Share Ratios*, OECD.Stat(Accessed on 23 October 2016).
- OECD. (2016j). *Education at a glance: Graduation and entry rates, OECD Education Statistics (database)*.
- Osberg, L., Sharpe, A. (2005). How should we measure the 'economic' aspects of well-being?.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51, Number 2*, pp.311-333.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Goldhammer, Tran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Saltelli, A. (2007). Composite Indicators between Analysis and Advocac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1(1)*, 65-77. doi: 10.1007/s11205-006-0024-9.
- Schiefer, D., Noll, J., Delhey, J., Boehnke, K. (2012). *Cohesion Rader: Measuring Cohesiveness*. BertelsmannStiftung.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 *Democracy Index 2014: Democracy and its discontents*.
- The WorldBank. (2016).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ww.govindicators.org). (Accessed on 04 November 2016).
- UNESCO. (2016). Education: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from government source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Accessed on 19 August 2016).
- Visser, J. (2015). *ICTWSS Data Base*. version 5.0. Amsterdam: Amsterdam Institute for Advanced Labour Studies AIAS.
- Wilkinson, R. G. & Pickett, K. (2009). *(The)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 London: Allen Lane.

부록 1.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및 AHP 조사표

가. 1차 델파이 조사표

사회통합 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한국갤럽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사회통합 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다차원적이고 비교 가능한 영역 및 평가 지표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사회통합의 영역과 지표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1차 조사, 조사된 영역별 지표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2차 조사, 영역별 지표별 기중치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3차 조사로 구성됩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의 종합지수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사회통합 관련 기존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를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살펴보시고 다음의 설문 문항에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종 3차 응답까지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사기간 : 2016년 6월 13일 ~ 6월 26일까지(1차 조사)

○ 조사대상 : 사회통합 분야 관련 전문가(관련 연구기관/대학/공공기관의 연구원, 교수 등)

○ 조사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문의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 개요

1. 배경

최근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기조로 돌아서고 있으며, 더불어 진행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경제발전만으로 통합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각각의 가치와 이념의 대립 양상이 심해지고 있어, 사회통합이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지수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특정 영역과 사회지표에 대해 강조하는 바가 다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통합의 다차원적 영역과 지표, 가중치를 결정하고자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일정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종합지수를 개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가 델파이조사입니다. 향후 다음의 일정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귀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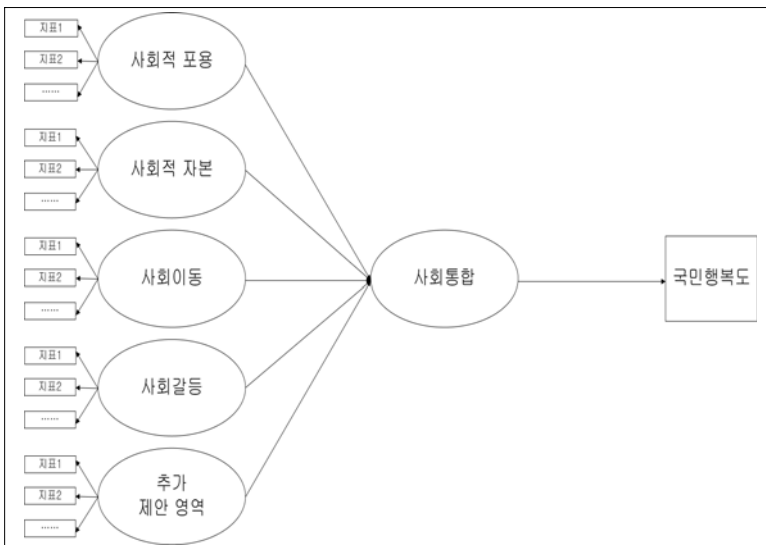
구분	조사 목적	조사 방법	시기
1차 조사	사회통합 영역 및 지표 제안	델파이조사	6월 초순
2차 조사	사회통합 영역별 지표 설정	델파이조사	6월 말
3차 조사	사회통합 영역 및 영역별 지표의 상대 중요도 파악	AHP	7월 중순

□ 먼저, 사회통합의 정의와 지표 선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사회통합의 정의와 개념 구조(안)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회통합’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각 하위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결합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종합하여 사회통합지표를 산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추가해야할 영역은 없는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각 하위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들이 타당한지, 추가할 지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통합**”은 사회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사회 공동의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결속된 상태로(김미곤 외, 2014: 36),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이동(social mobility), 사회갈등(social conflicts) 등 하위영역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국민행복을 증진시킴.



문1) 사회통합 영역에 대한 제안

※ 먼저 사회통합 영역의 항목 구성 적절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통합 영역은 크게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의 4가지 영역이 사회통합 지수를 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의 사회통합 영역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1) 사회적 포용 (Social Inclusion)	전혀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 하다
사회 구성원이 시민권을 실현하고 있는 정도, 사람들이 노동시장과 다양한 사회제도를 통해서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정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정해식 외, 2014: 113-114).	①	②	③	④	⑤
문1-2)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순수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와 '네트워크' 뿐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등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이타주의, 관용 등 '통합적 규범과 가치'를 포함(정해식 외, 2014: 115-116).	①	②	③	④	⑤
문1-3) 사회이동 (Social Mobility)					
사회 내에서 지위를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그 자체로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며, 자원 할당의 형평성을 제고(여유진·정해식 외, 2015: 13-14).	①	②	③	④	⑤
문1-4) 사회갈등 (Social Conflicts)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수렴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거버넌스와 확립(김미곤 외, 2014: 36), 갈등의 양태, 수준과 갈등관리의 수준을 동시에 고려함.	①	②	③	④	⑤

문1-5) 앞에서 제안된 사회통합의 4가지 하위 영역 이외에 사회통합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했으면 하는 영역이 있으면 최대 2개까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4가지 영역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영역이 있으면 기존 영역의 재구성도 가능합니다.)

1) 추가 제안 영역 1 :

제안 이유 :

2) 추가 제안 영역 2 :

제안 이유 :

문2) 다음은 사회통합 영역별 지표의 적절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연구진은 사회통합의 각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다음의 지표들은 기존 선행연구 등에서 사회통합 분야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선정한 것입니다. 다음 지표들의 간략한 설명 자료를 검토하시고, 각각의 지표들이 사회통합 지표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표	지표설명	출처	기간
1	상대빈곤율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	OECD Statistics/QOG	(1976)2004-2012
2	심분위분배율	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10% 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 비율	OECD Statistics/QOG	(1976)2004-2012
3	장기실업률	실업자 중 실직기간이 1년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인 실업자 비율	ILO Statistics	1980-2014
4	성별 임금격차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	OECD Gender Statistics	2000-2014
5	성별 고용률격차	남성 고용률 대비 여성고용률의 비율	World databank WDI/ILO	1990-2014
6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율	OECD SOCX	1980-2011(2014)
7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가 전체 피용자 중 차지하는 비율	OECD Labour Statistics, Incidence of involuntary part time workers	1980-2014
8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고용보호지수: 임시고용	OECD, ELMS	1985-2013
9	주관적 삶의 만족도1	삶의 만족(2점 척도)	OECD Better Life Index	2013-2015
10	주관적 삶의 만족도2	삶의 만족(10점 척도)	World Values Survey	1980-2010(5)

구분	지표	지표설명	출처	기간
11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된 건강상태 (좋은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OECD Health Statistics	2000(2004)- 2013(2014)
12	1인당 GNI	1인당 국민총소득(GNI)	World Databank WDI	1966-2015
13	시민적 자유	의사표현의자유, 언론자유, 종교자유, 집회결사의자유, 직업 절차의적용의권리	QOG, civil liberties	1983-2012
14	선거참여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IDEA	~2015
15	자원봉사참여율	인권 혹은 자선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World Values Survey	1980-2010(5)
16	평균 근로시간	평균 근로시간 (여가시간의 대리변수)	OECD Labour Statistics	(1950)2000-2014
17	단체참여	8가지 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의 합 (종교, 여가, 예체능 및 교육, 노동조합, 정당, 환경, 직능, 소비자단체)	ISD, WVS	1980-2010(5)
18	시민참여	정치적 행동 여부의 합 (서명, 보이콧, 시위)	World Values Survey	1980-2010(5)
19	일반신뢰	대인신뢰	World Values Survey	1980-2010(5)
20	국가자긍심	국가자긍심	World Values Survey	1980-2010(5)
21	관용	이웃으로서의 수용 여부의 합 (약물중독자, 다른 인종, 예 이즈 간염자, 이주 노동자, 동성연애자, 다른 종교인, 알 코올 중독자, 비혼부부, 외국인)	World Values Survey	1980-2010(5)
22	사회규범	사회규범 (자격 미달자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경우, 무임 승차, 탈세, 뇌물수수, 동성연애, 성매매, 낙태, 이혼, 안 락사, 자살, 가정폭력)	World Values Survey	1980-2010(5)
23	공교육지출	정부총지출 중 교육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World databank WDI	1998-2013(2014)
24	노동인구 중 중등학교이상 졸업자 비율	노동시장인구 중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	ILO, KILM	1995~2014
25	교육성취도	PISA 평균 점수	PISA	1980-2010(5)

구분	지표	지표설명	출처	기간
26	교육연수	성인의 평균 교육연수	Barro and Lee 2010,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1980-2013(5)
27	GDP 대비 ALMP 지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ctive Labour Market Expenditure) 지출 비율	OECD SOCX Statistics	1980-2011(2014)
28	학업중도탈락률	15~29세 NEET 비율	OECD, (NEET) indicators	2000~2014(4)
29	여성지도자비율	여성관리 전문가 비율	WDI/ILO	1993-2011
30	여성의석비율	국회 여성의석 비율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CPDS)	1990-2013
31	자살률	십만명당 자살자 수	OECD Health Statistics	1960(1985)-2013
32	이민자비율	인구 대비 외국인 이민자 비율	OECD migration Statistics	1975(2000)-2013
33	노인부양률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OECD Population Statistics	1950(1960)-2014
34	노사불규횟수	노사불규횟수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CPDS)	1990-2013
35	인론자유도	인론자유 점수(0:most free~100:least free)	QOG/Freedom House 2015	1993-2014
36	부패인식	부패인식지수	Transparency International	1995-2015
37	정부효과성	정부효과성 지수	World Databank	1996-2014
38	노조조직률	노조조직률	ICTWSS	1990-2013
39	민주주의지수	민주주의지수(Quality of Democracy)	SGI	2009-2015

※ 연구진이 제안하는 다음의 지표들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인지표	문2-1) 귀하께서는 이 지표가 사회통합을 측정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②는 다음 지표로 이동)					문2-2) (문2-1)의 ③,④ 응답자) 이 지표가 사회통합을 측정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어느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사회적 포용	사회 이동	사회 갈등	추가제한 영역 1	추가제한 영역 2
(1) 상대빈곤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2) 심문위문배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3) 장기실업률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4) 성별 임금격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5) 성별 고용률격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6)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GDP 대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7)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8)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9) 주관적 삶의 만족도 1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10) 주관적 삶의 만족도 2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제안지표	문2-1) 귀하께서는 이 지표가 사회통합을 측정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②는 다음 지표로 이동)				문2-2) (문2-1)의 ③,④ 응답자) 이 지표가 사회통합을 측정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어느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 이동	사회 갈등	추가제한 영역 1	추가제한 영역 2
(11) 주관적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12) 1인당 GNI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13) 시민적 자유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14) 선거참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15) 자원봉사 참여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16) 평균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17) 단체참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18) 시민참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19) 일반신뢰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20) 국가자긍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21) 관용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22) 사회규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23) 공교육지출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24) 노동인구 중 중등교육이상 졸업자 비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25) 교육성취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제안지표	문2-1) 귀하께서는 이 지표가 사회통합을 측정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②는 다음 지표로 이동)				문2-2) (문2-1)의 ③,④ 응답자) 이 지표가 사회통합을 측정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어느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 이동	사회 갈등	추가제안 영역 1	추가제안 영역 2	
(31) 자살률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32) 이민자비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33) 노인부양률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34) 노시분규회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35) 언론자유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36) 부패인식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37) 정부효과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38) 노조조직률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39) 민주주의지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⑥	

문2-3) 귀하께서는 이상의 연구진이 제안한 지표 외에 사회통합을 측정하기 위해 어느 지표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내적 타당도와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안 지표 1		사회통합 영역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 이동	사회 갈등	추가 제안 영역 1	추가 제안 영역 2
		①	②	③	④	⑤	⑥
지표설명							

추가 제안 지표 2		사회통합 영역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 이동	사회 갈등	추가 제안 영역 1	추가 제안 영역 2
		①	②	③	④	⑤	⑥
지표설명							

기본 정보

SQ1) 성 별	1. 남자 2. 여자
SQ2) 연 령	만_____세
DQ1) 소속기관유형	○○님의 소속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대학교 2. 정부 또는 공공기관 3. 공공기관 연구소 4. 민간 연구소 5. 기타(적을 것 : _____)
DQ2) 전공	

※ 감사합니다.

1차 조사 결과를 취합한 후, 사회통합 지표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2차 조사는 6월 말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 조사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 2차 델파이 조사표

사회통합 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갤럽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사회통합 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1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다차원적이고 비교 가능한 영역 및 평가 지표를 도출하는 데에 귀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사회통합의 영역과 지표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1차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조사된 영역과 영역별 지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취합한 1차 조사 결과와 본인의 이전 응답을 비교·검토하시고, 사회통합 영역과 지표의 적절성에 대하여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응답하신 분께 한하여 실시되오니, 조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16년 7월 1일 ~ 7월 15일까지(2차 조사)
- 조사대상 : 사회통합 분야 관련 전문가(관련 연구기관/대학/공공기관의 연구원, 교수 등)
- 조사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문의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문1) 사회통합 영역의 적절성 검증

※ 1차 조사에서 사회통합 영역의 항목 구성 적절성에 대해서 여쭙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진에서 제시한 4가지 사회통합 영역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일부 영역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연구진 제안 영역				+	추가 제안 영역	⇒	수정된 사회통합 영역	
	평균	표준편차	'적절하다' 응답비율					
사회적 포용	4.5	0.71	90.6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4.3	0.94	82.8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4.2	0.85	87.5				사회이동	
사회갈등	4.2	0.90	82.8				사회갈등 및 관리	

※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영역별 개념 정의를 조정하였습니다. 영역별 기초통계와 본인의 이전 응답을 비교·검토하시고, 각 영역의 적절성에 대하여 최종 평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포용 (Social Inclusion)					
평균	표준편차	'적절' + '매우 적절' 응답비율			
4.5	0.71	90.6			
기존 개념 정의 사회 구성원이 시민권을 실현하고 있는 정도, 사람들이 노동시장과 다양한 사회제도를 통해서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정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	+	추가 제안 영역 사회평등(불평등), 사회보장, 소득보장, 기초생활육구 충족, 가족, 사회적 차별 및 배제	⇒	조정된 개념 정의 사회구성원이 정치,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사회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	
문1-1) 조정된 개념 정의를 고려하여, '사회적 포용'을 사회통합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평균	표준편차	'적절' + '매우 적절' 응답비율			
4.3	0.94	82.8			
기존 개념 정의 순수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와 '네트워크' 뿐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등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이타주의, 관용 등 '통합적 규범과 가치'를 포함	+	추가 제안 영역 사회적 인식, 상호주의 시민의식, 관용(Tolerance)	⇒	조정된 개념 정의 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와 관용, 귀속감의 주관적 인식 수준과 이타적 행위 수행, 선거 참여 등의 객관적 행위 수준으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문1-2) 조정된 개념 정의를 고려하여, '사회적 자본'을 사회통합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사회이동 (Social Mobility)					
평균	표준편차	'적절' + '매우 적절' 응답비율			
4.2	0.85	87.5			
기존 개념 정의		추가 제안 영역		조정된 개념 정의	
사회 내에서 지위를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그 자체로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며 자원 할당의 형평성을 제고		기회보장		직업, 소득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조건 및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역량	
문1-3) 조정된 개념 정의를 고려하여, '사회이동'을 사회통합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사회갈등 및 관리 (Social Conflicts and Governance)					
평균	표준편차	'적절' + '매우 적절' 응답비율			
4.2	0.90	82.8			
기존 개념 정의		추가 제안 영역		조정된 개념 정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수렴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거버넌스의 확립, 갈등의 양태, 갈등관리의 수준을 동시에 고려함		지역갈등, 지역격차, 세대갈등, 이념갈등, 사회소통		사회적 조건의 차이, 인식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는 갈등의 수준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	
문1-4) 조정된 개념 정의를 고려하여, '사회갈등 및 관리'를 사회통합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문1-5) 이상의 사회통합 영역 구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open question			

문2) 사회통합 영역별 대표 지표 선정

※ 1차 조사에서 사회통합 영역별 지표의 적절성과 해당 영역에 대해서 여쭙었습니다. 연구진에서는 적절성 응답률이 낮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제외하고, 지표에 따라 영역이 분명하게 선정된다고 판단되는 지표는 해당 영역에, 영역이 모호하게 선정된다고 판단되는 지표는 2개 이상의 영역에 임의 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안해주신 지표 중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모아 연구진이 사회통합 영역별로 임의 할당하였습니다. 영역별 지표의 1차 조사 기초통계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이전 응답 보기 버튼(영역 및 지표, 지표별 영역)

영역	제안지표	1차 조사 결과			사회통합 영역		
		평균	표준 편차	‘필요 하다’ 합계 응답률	1순위	2순위	
사회적 포용	(1) 상대빈곤율	3.8	0.43	98.4	사회이동	사회적 포용	
	(2) 장기실업률☆	3.7	0.53	96.9	사회이동	사회갈등	
	(3) 성별 격차	임금격차	3.5	0.67	90.6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
		고용률격차	3.7	0.47	100.0	사회갈등	사회적 포용
	(4) 여성의 사회진출 ※ (지도자비율+의석비율)/2	3.6	0.56	96.9	사회적 포용	사회갈등	
	(5)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GDP 대비)	2.9	0.76	70.3	사회적 포용	사회갈등	
	(6)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3.2	0.69	84.4	사회적 포용	사회갈등	
	(7)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3.5	0.56	96.9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	
	(8) 이민자비율	2.8	0.81	65.6	사회적 포용	사회갈등	
(9) 청년네트(NEAT)비율 (신규제1)	-	-	-	-	-		

영역	제안지표	1차 조사 결과			사회통합 영역	
		평균	표준 편차	'필요하다' 합계 응답률	1순위	2순위
사회적 자본	(1) 시민적 자유	3.5	0.59	95.3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2) 선거참여	3.2	0.71	84.4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3) 단체참여	3.0	0.65	84.4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4) 시민참여	3.2	0.76	85.9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5) 일반신회	3.4	0.79	87.5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6) 기관신회 (신규제안)	-	-	-	-	-
	(7) 국가자금심	2.9	0.89	70.3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8) 관용	3.5	0.62	93.8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9) 사회규범	3.4	0.61	93.8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10) 언론자유도☆	3.4	0.73	89.1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
	(11) 부패인식☆	3.6	0.64	95.3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
	(12) 정부효과성☆	3.2	0.72	82.8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
	(13) 민주주의지수☆	3.5	0.69	92.2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
사회 이동	(1) 십분위분배율☆	3.7	0.53	96.9	사회이동	사회갈등
	(2) 장기실업률☆	3.5	0.67	90.6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
	(3) 공교육지출	3.3	0.71	87.5	사회이동	사회적 포용
	(4) 노동인구 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 (※ 기존 '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수정)	2.5	0.76	45.3	사회이동	사회적 자본
	(5) 교육성취도	2.4	0.79	45.3	사회이동	사회적 자본
	(6)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지출	3.0	0.70	79.7	사회이동	사회적 포용
	(7) 학업중도탈락률	2.9	0.90	65.6	사회이동	사회적 포용

영역	제안지표	1차 조사 결과			사회통합 영역	
		평균	표준 편차	'필요 하다' 합계 응답률	1순위	2순위
사회적 자본	(1) 십분위분배율☆	3.7	0.53	96.9	사회이동	사회갈등
	(2) 자살률	3.5	0.62	93.8	사회갈등	사회적 포용
	(3) 노사분규횟수	2.9	0.81	65.6	사회갈등	
	(4) 부패인식☆	3.6	0.64	95.3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
	(5) 정부효과성☆	3.2	0.72	82.8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
	(6) 언론자유도☆	3.4	0.73	89.1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
	(7) 노조조직률	3.0	0.79	76.6	사회갈등	사회적 포용
	(8) 민주주의지수☆	3.5	0.69	92.2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
	(9) 비정규직/정규직 급여격차 (신규제안)	-	-	-	-	-
	(10) 노동소득 분배율 (신규제 안)	-	-	-	-	-

※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5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 단, 1차 응답 결과를 반영하여 2개 이상 영역에 중복 포함된 지표(☆)는 하나의 영역에서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이전 응답 보기 버튼(영역 및 지표, 지표별 영역)

영역	제안지표	지표설명	5순위까지 우선순위 선택
사회적 포용	(1) 상대빈곤율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	
	(2) 장기실업률☆	실업자 중 실작기간이 1년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인 실업자 비율	
	(3) 성별 격차	$(\text{상별임금격차} + \text{상별고용률격차})/2$	
	(4) 여성의 사회진출	$(\text{여성지도자비율} + \text{여성의석비율})/2$	
	(5)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율	
	(6)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가 전체 파용자 중 차지하는 비율	
	(7)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고용보호지수 임시고용	
	(8) 이민자비율	인구 대비 외국인 이민자 비율	
	(9) 청년니트(NEET)비율 (신규제안)	청년 중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 비율	
사회적 자본	(1) 시민적 자유	의사표현의자유, 언론자유, 종교자유, 집회결사의자유, 적법절차의적용과권리	
	(2) 선거참여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3) 단체참여	8가지 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의 합 (종교, 여가, 예능 및 교육, 노동조합, 정당, 환경, 작능, 소비자단체)	
	(4) 시민참여	정치적 행동 여부의 합 (서명, 보이콧, 시위)	
	(5) 일반신뢰	대인신뢰	
	(6) 기관신뢰 (신규제안)	기관별 신뢰의 합(종교단체, 군대, 신문, 텔레비전, 노동조합, 경찰, 법원, 중앙정부, 정당, 의회, 공무원, 대학, 대기업, 은행, 환경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인권/자선단체)	
	(7) 국가자긍심	국가자긍심	
	(8) 관용	이웃으로서의 수용 여부의 합(악물종교자, 다른 인종, 애즈 감염자, 이주 노동자, 동성연애자, 다른 종교인, 알도를 중독자, 비혼부부, 외국인)	
	(9) 사회규범	사회규범 (자격 마달자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경우, 무임승차, 탈세, 뇌물수수, 동성연애 성매매, 낙태, 이혼, 인본사, 자살 가정폭력)	
	(10) 언론자유도☆	언론자유 점수	
	(11) 부패인식☆	부패인식지수	
	(12) 정부효과성☆	정부효과성 지수	
	(13) 민주주의지수☆	민주주의지수	

영역	제안지표	지표설명	5순위까지 우선순위 선택
사회 이동	(1) 십분위분배율☆	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10% 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 비율	
	(2) 장기실업률☆	실업자 중 실직기간이 1년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인 실업자 비율	
	(3) 교육육지출	정부총지출 중 교육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4) 노동인구 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 ※ 기존 '중등학교'에 서 '고등학교'로 수정	노동시장인구 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	
	(5) 교육성취도	PISA 평균 점수	
	(6) GDP 대비 적극적 노 동시장 프로그램지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Expenditure) 지출 비율	
	(7) 학업중도탈락률	15~29세 NEET 비율	
사회 갈등 및 관리	(1) 십분위분배율☆	가처분소득 기준 하위 10% 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 비율	
	(2) 자살률	십만명당 자살자 수	
	(3) 노사분규횟수	노사분규횟수	
	(4) 부패인식☆	부패인식지수	
	(5) 정부효과성☆	정부효과성 지수	
	(6) 언론자유도☆	언론자유 점수	
	(7) 노조조직률	노조조직률	
	(8) 민주주의지수☆	민주주의지수	
	(9)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 (신규제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급여격차	
	(10) 노동소득 분배율 (신 규제안)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 감사합니다.

2차 조사 결과를 취합한 후, 사회통합 영역 및 영역별 지표의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3차 조사는 7월 말 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3차 조사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3차 AHP 조사표

사회통합 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갤럽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사회통합 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1, 2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다차원적이고 비교 가능한 영역 및 평가 지표를 도출하는 데에 귀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사회통합 영역과 지표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1, 2차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조사된 영역과 영역별 지표 간 쌍대비교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사회통합지수를 계산할 예정입니다.

3차 조사는 1, 2차 조사에 응답하신 분께 한하여 실시되오니, 조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16년 7월 27일 ~ 8월 7일까지(3차 조사)
- 조사대상 : 사회통합 분야 관련 전문가(관련 연구기관/대학/공공기관의 연구원, 교수 등)
- 조사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문의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지난 1, 2차 조사에서는 사회통합 개념을 구성하는 영역 각각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연구진은 보내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통합의 4개 하위 영역을 확정하고 영역별 개념을 아래와 같이 재수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난 2차 조사에서 여쭙던 영역별 대표 지표 5개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영역별로 5개의 지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지표의 순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영역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적절하다' 응답 비율	96.4%	87.5%	89.3%	87.5%

조정된 영역 개념	수정	사회구성원이 정치,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사회 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	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와 관용, 귀속감의 주관적 인식 수준과 이타적 행위 수행, 선거 참여 등의 객관적 행위 수준으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직업, 소득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조건 및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역량	사회적 조건의 차이, 인식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는 갈등의 수준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
	재수정	사회구성원이 사회 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	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 및 관용의 정도, 참여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사회적 조건, 인식 수준에서 확인되는 갈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

대표 지표	1	상대빈곤율	시민적 자유	공교육 지출	자살률
	2	성별 격차	일반 신뢰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노사분규 횟수
	3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관용	십분위분배율	민주주의 지수
	4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시민 참여	교육성취도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
	5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기관신뢰	학업중도 탈락률	노동소득 분배율

문1) 사회통합 영역의 쌍대비교 가중치 부여

Q1.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4개 하위 영역의 재수정된 개념 정의를 고려하여, 각 영역이 타 영역 대비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6개 비교 조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조정된 영역 개념	수정 사회구성원이 정치,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사회 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	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와 관용, 귀속감의 주관적 인식 수준과 아타적 행위 수행, 선거 참여 등의 객관적 행위의 수준으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직업, 소득계층의 아동이 가능한 조건 및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 역량	사회적 조건의 차이, 인식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는 갈등의 수준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
	재수정 사회구성원이 사회 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	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 및 관용의 정도 참여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		사회적 조건 인식 수준에서 확인되는 갈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 역량

Q1. 사회통합 하위 영역별 중요도 평가

영역	중요도									영역
	대단히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다소 더 중요	약간 더 중요	중요	약간 더 중요	다소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대단히 더 중요	
사회적 포용	4	3	2	1	0	1	2	3	4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4	3	2	1	0	1	2	3	4	사회적 포용
사회적 포용	4	3	2	1	0	1	2	3	4	사회갈등과 관리
사회이동	4	3	2	1	0	1	2	3	4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4	3	2	1	0	1	2	3	4	사회갈등과 관리
사회갈등과 관리	4	3	2	1	0	1	2	3	4	사회이동

문2) 사회통합 영역별 지표의 쌍대비교 가중치 부여

Q2. 2차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통합의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4개 사회통합 영역별로 각 영역별 대표지표 5개를 쌍대비교하겠습니다. 각 지표가 타 지표 대비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10개 비교 조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대표 지표	1	상대빈곤율	시민적 자유	공교육 지출	자살률
	2	성별 격차	일반 신뢰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노사분규 횟수
	3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관용	십분위분배율	민주주의 지수
	4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시민 참여	교육성취도	비정규직/정 규직 급여 격차
	5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기관신뢰	학업중도 탈락률	노동소득 분배율

Q2-1. 사회적 포용

영역	중요도									영역
	대히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다소 더 중요	약간 더 중요	중립 중요	약간 더 중요	다소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대히 더 중요	
상대빈곤율	4	3	2	1	0	1	2	3	4	성별격차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4	3	2	1	0	1	2	3	4	상대빈곤율
상대빈곤율	4	3	2	1	0	1	2	3	4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4	3	2	1	0	1	2	3	4	상대빈곤율
성별격차	4	3	2	1	0	1	2	3	4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4	3	2	1	0	1	2	3	4	성별격차
성별격차	4	3	2	1	0	1	2	3	4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4	3	2	1	0	1	2	3	4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4	3	2	1	0	1	2	3	4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4	3	2	1	0	1	2	3	4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Q2-2. 사회적 자본

영역	중요도									영역
	대히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다소 더 중요	약간 더 중요	특별히 중요	약간 더 중요	다소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대히 더 중요	
시민적 자유	4	3	2	1	0	1	2	3	4	일반신뢰
관용	4	3	2	1	0	1	2	3	4	시민적 자유
시민적 자유	4	3	2	1	0	1	2	3	4	시민참여
기관신뢰	4	3	2	1	0	1	2	3	4	시민적 자유
일반신뢰	4	3	2	1	0	1	2	3	4	관용
시민참여	4	3	2	1	0	1	2	3	4	일반신뢰
일반신뢰	4	3	2	1	0	1	2	3	4	기관신뢰
시민참여	4	3	2	1	0	1	2	3	4	관용
관용	4	3	2	1	0	1	2	3	4	기관신뢰
기관신뢰	4	3	2	1	0	1	2	3	4	시민참여

Q2-3. 사회이동

영역	중요도									영역
	대히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다소 더 중요	약간 더 중요	필수 중요	약간 더 중요	다소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대히 더 중요	
공교육지출	4	3	2	1	0	1	2	3	4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십분위분배율	4	3	2	1	0	1	2	3	4	공교육지출
공교육지출	4	3	2	1	0	1	2	3	4	교육성취도
학업중도 탈락률	4	3	2	1	0	1	2	3	4	공교육지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4	3	2	1	0	1	2	3	4	십분위분배율
교육성취도	4	3	2	1	0	1	2	3	4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4	3	2	1	0	1	2	3	4	학업중도 탈락률
교육성취도	4	3	2	1	0	1	2	3	4	십분위분배율
십분위분배율	4	3	2	1	0	1	2	3	4	학업중도 탈락률
학업중도 탈락률	4	3	2	1	0	1	2	3	4	교육성취도

Q2-2. 사회적 자본

영역	중요도									영역
	대히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다소 더 중요	약간 더 중요	특별히 중요	약간 더 중요	다소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대히 더 중요	
자살률	4	3	2	1	0	1	2	3	4	노사분규횟수
민주주의지수	4	3	2	1	0	1	2	3	4	자살률
자살률	4	3	2	1	0	1	2	3	4	비정규직/ 정규직 급여격차
노동소득 분배율	4	3	2	1	0	1	2	3	4	자살률
노사분규횟수	4	3	2	1	0	1	2	3	4	민주주의지수
비정규직/ 정규직 급여격차	4	3	2	1	0	1	2	3	4	노사분규횟수
노사분규횟수	4	3	2	1	0	1	2	3	4	노동소득 분배율
비정규직/ 정규직 급여격차	4	3	2	1	0	1	2	3	4	민주주의지수
민주주의지수	4	3	2	1	0	1	2	3	4	노동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	4	3	2	1	0	1	2	3	4	비정규직/ 정규직 급여격차

※ 3차에 걸친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에 모두 참여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결과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체계 구축 및 지수 개발에 소중한게 활용될 것입니다.

부록 2. 사회통합지수 국가 순위(1995~2015)

〈부표 2-1〉 1995년 사회통합지수

국가	사회통합지수									
	순위	종합지수	순위	사회적 포용	순위	사회적 자본	순위	사회이동	순위	사회갈등과 관리
Norway	1	0.943	3	0.735	2	0.848	3	0.847	2	0.758
Sweden	2	0.932	2	0.744	4	0.761	2	0.851	1	0.769
Denmark	3	0.917	7	0.684	3	0.796	1	0.904	5	0.731
Finland	4	0.862	8	0.674	5	0.736	4	0.817	3	0.741
Netherlands	5	0.762	9	0.607	7	0.706	5	0.699	4	0.734
Germany	6	0.718	4	0.704	14	0.588	13	0.566	6	0.690
France	7	0.705	5	0.699	17	0.548	6	0.640	14	0.585
Luxembourg	8	0.678	1	0.778	11	0.647	22	0.425	15	0.577
Belgium	9	0.676	6	0.686	18	0.539	14	0.555	9	0.644
Switzerland	10	0.659	18	0.514	6	0.729	7	0.630	8	0.656
Austria	11	0.649	14	0.551	10	0.676	12	0.574	7	0.674
Iceland	12	0.641	10	0.580	1	0.864	16	0.531	23	0.507
Australia	13	0.583	24	0.418	8	0.686	10	0.627	10	0.630
New Zealand	14	0.556	21	0.478	21	0.523	9	0.627	18	0.558
Italy	15	0.539	11	0.574	20	0.524	23	0.415	13	0.619
Portugal	16	0.531	12	0.568	22	0.517	24	0.405	11	0.626
United Kingdom	17	0.514	23	0.424	15	0.581	17	0.527	12	0.620
Spain	18	0.508	17	0.521	19	0.534	19	0.448	16	0.566
Canada	19	0.507	26	0.361	12	0.605	11	0.622	17	0.559
Japan	20	0.455	28	0.309	9	0.679	15	0.545	20	0.542
Ireland	21	0.438	29	0.253	16	0.575	8	0.628	19	0.557
Czech Republic	22	0.421	13	0.567	26	0.327	18	0.450	27	0.356
Hungary	23	0.415	16	0.548	24	0.392	21	0.434	28	0.346
United States	24	0.384	27	0.322	13	0.588	20	0.438	22	0.512
Poland	25	0.344	22	0.443	25	0.339	28	0.369	25	0.448
Greece	26	0.330	15	0.549	28	0.250	30	0.258	26	0.428
Slovak Republic	27	0.294	20	0.484	29	0.182	25	0.405	29	0.281
Israel	28	0.270	25	0.389	30	0.119	29	0.357	24	0.498
Korea	29	0.257	30	0.198	23	0.411	26	0.393	21	0.537
Estonia	30	0.257	19	0.488	27	0.257	27	0.381	30	0.127

〈부표 2-2〉 2000년 사회통합지수

국가	종합지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Denmark	1	0.919	5	0.690	4	0.819	1	0.930	2	0.777
Sweden	2	0.903	4	0.702	3	0.848	2	0.823	1	0.821
Norway	3	0.871	1	0.775	1	0.905	3	0.706	6	0.699
Finland	4	0.771	7	0.625	5	0.812	4	0.689	4	0.736
Netherlands	5	0.752	10	0.592	7	0.786	5	0.677	3	0.768
France	6	0.700	3	0.748	19	0.568	8	0.606	16	0.597
Iceland	7	0.681	11	0.576	2	0.864	10	0.583	14	0.625
Switzerland	8	0.675	13	0.565	6	0.799	9	0.589	10	0.671
Austria	9	0.665	9	0.614	10	0.693	11	0.560	9	0.678
Belgium	10	0.664	8	0.616	20	0.552	6	0.639	8	0.681
Germany	11	0.657	6	0.642	16	0.604	13	0.537	5	0.704
Luxembourg	12	0.650	2	0.767	8	0.707	23	0.376	17	0.591
New Zealand	13	0.564	22	0.459	15	0.639	7	0.629	18	0.573
Italy	14	0.542	12	0.569	18	0.571	19	0.422	12	0.636
Portugal	15	0.534	16	0.543	17	0.583	20	0.411	11	0.663
Australia	16	0.531	24	0.413	11	0.682	12	0.537	13	0.632
Spain	17	0.494	20	0.486	21	0.550	18	0.442	15	0.617
United Kingdom	18	0.472	23	0.425	22	0.516	17	0.442	7	0.681
Canada	19	0.468	26	0.360	13	0.669	15	0.520	20	0.554
Ireland	20	0.400	29	0.235	9	0.703	14	0.536	23	0.502
Japan	21	0.393	28	0.247	12	0.679	16	0.507	22	0.519
United States	22	0.387	27	0.312	14	0.649	21	0.395	19	0.558
Greece	23	0.387	15	0.558	24	0.404	29	0.240	21	0.530
Poland	24	0.358	19	0.515	25	0.362	26	0.334	26	0.421
Czech Republic	25	0.356	14	0.563	28	0.320	24	0.363	27	0.325
Hungary	26	0.330	17	0.540	26	0.357	25	0.340	29	0.282
Slovak Republic	27	0.297	18	0.515	27	0.320	28	0.292	28	0.310
Estonia	28	0.241	21	0.483	29	0.299	27	0.314	30	0.174
Korea	29	0.228	30	0.150	23	0.469	22	0.387	25	0.482
Israel	30	0.220	25	0.374	30	0.183	30	0.235	24	0.497

〈부표 2-3〉 2005년 사회통합지수

국가	종합지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Denmark	1	0.921	5	0.726	5	0.832	1	0.912	1	0.784
Sweden	2	0.871	4	0.749	3	0.852	2	0.747	2	0.764
Norway	3	0.855	2	0.804	2	0.869	3	0.723	8	0.633
Finland	4	0.803	7	0.682	6	0.831	4	0.716	3	0.729
Iceland	5	0.740	11	0.630	1	0.908	6	0.609	5	0.696
Netherlands	6	0.711	13	0.615	11	0.668	5	0.689	4	0.710
France	7	0.705	1	0.832	20	0.534	10	0.558	17	0.545
Belgium	8	0.697	6	0.692	10	0.669	9	0.592	7	0.639
Switzerland	9	0.690	14	0.608	4	0.846	8	0.592	6	0.647
Luxembourg	10	0.677	3	0.790	7	0.746	17	0.424	18	0.540
Austria	11	0.651	8	0.679	13	0.638	11	0.516	9	0.631
Germany	12	0.599	15	0.599	14	0.627	12	0.512	10	0.628
New Zealand	13	0.571	20	0.541	15	0.621	7	0.596	15	0.555
Portugal	14	0.544	10	0.637	18	0.565	21	0.389	14	0.571
Italy	15	0.513	16	0.598	24	0.495	18	0.412	13	0.572
United Kingdom	16	0.509	22	0.511	16	0.602	16	0.430	11	0.619
Spain	17	0.489	18	0.565	21	0.529	20	0.394	16	0.555
Australia	18	0.485	25	0.446	17	0.596	13	0.508	12	0.578
Ireland	19	0.464	24	0.474	8	0.681	14	0.455	22	0.468
Czech Republic	20	0.423	12	0.625	23	0.507	23	0.353	26	0.307
Canada	21	0.419	26	0.409	12	0.638	15	0.434	19	0.499
Hungary	22	0.384	9	0.665	28	0.376	24	0.337	28	0.226
Greece	23	0.382	19	0.556	25	0.422	29	0.256	21	0.476
Japan	24	0.352	29	0.355	9	0.675	19	0.407	24	0.396
Poland	25	0.346	17	0.593	26	0.393	22	0.376	29	0.183
United States	26	0.327	27	0.394	19	0.552	26	0.276	20	0.486
Estonia	27	0.263	21	0.522	27	0.385	28	0.270	30	0.182
Slovak Republic	28	0.261	23	0.478	29	0.368	25	0.281	27	0.256
Korea	29	0.198	30	0.257	22	0.517	27	0.274	25	0.365
Israel	30	0.134	28	0.362	30	0.106	30	0.152	23	0.402

〈부표 2-4〉 2010년 사회통합지수

국가	종합지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Denmark	1	0.916	4	0.749	6	0.774	1	0.866	1	0.822
Norway	2	0.857	3	0.829	1	0.907	4	0.662	10	0.653
Finland	3	0.824	6	0.691	3	0.861	2	0.684	3	0.795
Sweden	4	0.764	17	0.575	2	0.899	3	0.668	2	0.810
Belgium	5	0.764	5	0.731	9	0.667	6	0.595	5	0.768
France	6	0.727	2	0.837	18	0.574	10	0.508	12	0.630
Netherlands	7	0.717	12	0.622	10	0.643	5	0.645	4	0.772
Luxembourg	8	0.704	1	0.850	7	0.745	19	0.388	15	0.566
Switzerland	9	0.665	15	0.584	5	0.810	9	0.538	6	0.694
Austria	10	0.646	7	0.679	15	0.604	13	0.487	9	0.659
Iceland	11	0.628	18	0.573	4	0.848	8	0.548	16	0.563
Germany	12	0.601	13	0.605	13	0.610	12	0.491	11	0.643
Portugal	13	0.588	11	0.632	20	0.559	16	0.409	8	0.681
New Zealand	14	0.549	21	0.524	17	0.585	7	0.562	17	0.558
United Kingdom	15	0.522	23	0.521	21	0.548	17	0.404	7	0.684
Spain	16	0.508	14	0.586	19	0.573	22	0.344	14	0.581
Ireland	17	0.488	22	0.523	11	0.637	18	0.389	19	0.537
Italy	18	0.481	19	0.561	24	0.423	21	0.364	13	0.614
Australia	19	0.462	25	0.424	14	0.609	11	0.492	21	0.529
Canada	20	0.456	26	0.419	8	0.696	15	0.429	20	0.535
Czech Republic	21	0.435	10	0.637	23	0.487	23	0.335	27	0.334
Japan	22	0.401	28	0.374	12	0.616	14	0.455	23	0.467
Greece	23	0.397	20	0.554	28	0.334	28	0.256	18	0.548
Poland	24	0.394	9	0.641	26	0.388	20	0.378	30	0.211
Estonia	25	0.385	16	0.583	25	0.395	24	0.319	26	0.351
Hungary	26	0.371	8	0.649	27	0.342	25	0.295	28	0.255
United States	27	0.315	27	0.381	16	0.594	29	0.223	22	0.469
Slovak Republic	28	0.269	24	0.518	29	0.319	27	0.258	29	0.225
Korea	29	0.211	30	0.253	22	0.499	26	0.294	25	0.353
Israel	30	0.125	29	0.353	30	0.032	30	0.110	24	0.423

〈부표 2-5〉 2015년 사회통합지수

국가	종합지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Denmark	1	0.935	4	0.732	6	0.814	1	0.859	4	0.787
Norway	2	0.858	1	0.786	1	0.907	4	0.662	9	0.656
Finland	3	0.854	6	0.667	4	0.861	3	0.722	1	0.819
Sweden	4	0.803	12	0.562	2	0.905	2	0.762	3	0.792
Belgium	5	0.784	5	0.707	10	0.656	5	0.616	2	0.801
France	6	0.701	3	0.769	20	0.562	10	0.522	12	0.615
Luxembourg	7	0.663	2	0.775	7	0.745	19	0.373	14	0.572
Switzerland	8	0.660	14	0.544	5	0.817	7	0.546	6	0.739
Netherlands	9	0.648	13	0.551	14	0.630	6	0.593	5	0.745
Iceland	10	0.648	9	0.597	3	0.866	9	0.531	13	0.591
Austria	11	0.634	7	0.642	15	0.609	11	0.518	10	0.638
Germany	12	0.601	10	0.582	13	0.631	12	0.503	8	0.660
New Zealand	13	0.544	15	0.539	16	0.596	8	0.542	15	0.547
United Kingdom	14	0.496	20	0.477	18	0.572	17	0.411	7	0.705
Czech Republic	15	0.459	8	0.636	23	0.494	18	0.377	25	0.385
Italy	16	0.431	17	0.500	24	0.457	22	0.349	11	0.622
Ireland	17	0.426	22	0.463	11	0.641	14	0.461	23	0.420
Australia	18	0.416	24	0.417	12	0.634	15	0.435	16	0.518
Japan	19	0.411	27	0.363	9	0.683	13	0.481	17	0.515
Canada	20	0.398	26	0.380	8	0.699	16	0.425	18	0.510
Spain	21	0.374	23	0.450	21	0.562	25	0.342	19	0.495
Poland	22	0.337	11	0.564	26	0.385	20	0.373	30	0.233
Portugal	23	0.326	25	0.390	19	0.563	26	0.328	21	0.485
Estonia	24	0.323	18	0.487	25	0.436	23	0.345	27	0.346
Hungary	25	0.319	16	0.536	29	0.293	21	0.372	28	0.290
Greece	26	0.250	21	0.474	28	0.325	30	0.213	24	0.393
United States	27	0.249	29	0.335	17	0.586	29	0.234	22	0.471
Slovak Republic	28	0.227	19	0.482	27	0.335	28	0.265	29	0.238
Korea	29	0.207	30	0.266	22	0.521	24	0.344	26	0.377
Israel	30	0.166	28	0.348	30	0.032	27	0.270	20	0.491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